

2022 학생인권 모니터링 용역 보고서

2022 학생인권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빈 면

2022년 12월



빈 면

본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학생인권교육
센터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옹호관 귀하

본 연구보고서를 「2022 학생인권 모니터링」 연구
용역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빈 면

2022. 12.

연 구 기 관 :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연 구 기 간 : 2022. 04. ~ 2022. 12.

연 구 책 임 자 : 조 기 영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공 동 연 구 원 : 신 봉 근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

【목 차】

| | |
|-----------------------------|----|
| 제1장 서론 | 1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
| 1. 연구의 필요성 | 1 |
| 2. 연구의 목적 | 2 |
| II. 연구내용 및 방법 | 3 |
| 1. 연구내용 | 3 |
| 2. 연구방법 | 6 |
| 제2장 문헌검토 | 9 |
| I. 인권과 학생인권 | 9 |
| II. 학생인권조례 | 11 |
|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 11 |
|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 13 |
| 제3장 학생인권 모니터링 | 23 |
| 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23 |
| 1.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23 |
| 2.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24 |
| I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분석 | 32 |
| 1. 학생인권 언론보도기사 분석절차 | 32 |

| | |
|-----------------------------------|----|
| 2.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 | 33 |
| 3.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키워드 분석 | 36 |

| | |
|---------------------|----|
| 제4장 연구결과 및 제언 | 49 |
| I. 연구결과 | 49 |
| II. 연구제언 | 52 |
| 참고문헌 | 53 |

| | |
|---------------------------|----|
| * 부록 - 월별 모니터링 활동일지 | 55 |
|---------------------------|----|

【표 목차】

| | |
|--|----|
| 〈표-1〉 언론보도 인권 모니터링 범위 | 3 |
| 〈표-2〉 2021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범위 | 5 |
| 〈표-3〉 학생인권 모니터링 수행체계 | 7 |
| 〈표-4〉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절차 | 32 |
| 〈표-5〉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 | 33 |
| 〈표-6〉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분석표 | 34 |
| 〈표-7〉 4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36 |
| 〈표-8〉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38 |
| 〈표-9〉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0 |
| 〈표-10〉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2 |
| 〈표-11〉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3 |
| 〈표-12〉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5 |
| 〈표-13〉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6 |
| 〈표-14〉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47 |

빈 면

제1장 서론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생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2013년 7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2014년 8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헌법」, 국제연합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4조에 의하면,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34조(인권 모니터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차기 년도 인권실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전라북도는 2014년부터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를 통하여 전라북도 소재의 모든 학교에서 학생인권과 관련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였고, 2017년 전라북도 소재 767개의 모든 학교가 기본 인권, 성 인권, 장애인 인권, 노동 인권 등의 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학생인권 교육의 실태 조사는 인권교육과 관련한 모니터링 활동으로 인권교육 실시여부와 효과성을 파악하는 수준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전라북도의 학생 인권의 침해 상황 및 향상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이에 언론보도 자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전라북도 및 타 시도에서 학생인권의 실

현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보다 광범위한 영역에서 학생 인권 침해 및 침해 가능성(위험요소)을 확인하고, 전라북도교육청이 새로운 인권 정책이나 제도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보고서는 2022년 4월부터 2022년 11월까지 언론 보도에 나타난 기사 자료 분석 및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하여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된 다양한 학생인권 활동이 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인권 침해 환경의 개선, 인권정책의 방향 및 인권 향상의 사례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학생인권의 모니터링을 통해 학생의 인권 보호 및 인권 침해의 상황을 확인하고, 학생 인권 실태 조사 과정에서 부당하게 유출되는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며, 이에 대한 긍정적 사례의 확장 및 인권침해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의제 발굴과 학생인권조례의 실효성 있는 이행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현재의 학생인권 모니터링에서 검토되지 않았던 헌법, 형사법, 행정법 등 분야별 학생인권 관련 현황과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전라북도 교육청의 학생인권 관련 새로운 정책과 제도로 학교에서 인권의 충분한 보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연구 목적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면 아래와 같다.

-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인권 침해의 예방적 활동 및 침해 유형 파악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정책과 제도 홍보 및 실효성 있는 이행 유도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및 학생 인권 보장을 위한 개선 방안과 대안 제시
- 인권 모니터링을 통해 언론에의 피의사실 공포로 인한 학생과 교사의 피해 사례를 발굴하여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침해에 대한 구제 방안을 제시

학생인권 모니터링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된 학생의 권리를 중심으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를 분석하고, 인권의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권보호 및 침해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문제로 파악된 내용의 개선 방안과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학생인권 모니터링은 학생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되어 도내 학생인권 향상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효과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1) 인권 모니터링 범위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의 활동 범위는 전라북도 내 언론보도 및 방송 기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타 시도의 학생인권 이슈와 유사 사례를 비교하기 위하여 전국 단위의 언론보도 기사도 함께 분석하였다.

전라북도 내 언론 보도는 전북일보 외 14개 신문사와 KBS 전주 외 3개 방송사, 타 시도 사례 분석은 한겨레신문 외 7개 및 전국 언론사로 신문사와 방송 홈페이지를 활용하였다.

위와 관련한 인권 모니터링 언론 보도의 범위는 아래 <표-1>과 같다.

<표-1> 언론보도 인권 모니터링 범위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EBS 뉴스 | www.news.ebs.co.kr/ | |
| 9 | 그 외 전국 신문사 · 방송사 | | |

(2) 인권 모니터링 내용

본 실태조사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제2장 학생의 인권을 반영하여 아래 <표-2>와 같이 학생인권 모니터링의 내용을 설정하였다.

인권 모니터링의 주요 내용은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 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이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하여 학생의 주요 권리 내용에 해당하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기사를 수집한 후, 기사 내용을 분석하였다. 기사내용을 분석하여 쟁점 사항을 도출하고 시사점과 대안을 제시하였다.

모니터링을 한 기사의 내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기사 및 방송을 추가적으로 검색하였으며, 타 시도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

<표-2>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범위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4 | 6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1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1 | 5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9 | 3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2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3 | 1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1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1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1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1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3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1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2 |
| | 건강에 대한 권리 | | 6 | 4 |
| | | | | |
| 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0 | 28 | 27 |

2. 연구방법

(1) 내용분석

○ 연구 기간: 2022년 4월 ~ 11월

○ 연구 범위: 도내·외 학생인권 관련 보도(인터넷 및 신문기사, 언론 보도 등)

○ 연구 내용:

- 월별 학생인권 관련 기사내용 모음

| 번호 | 날짜 | 언론사 | 기사 내용 | 인권 범위 |
|----|-------------|-------|------------------|----------------|
| 1 | 2022. 4. 1. | 전북일보 | 학교폭력 실태 조사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 2 | 2022. 5. 1. | 새전북신문 | 아동의 전인적 인 발달 ... | 어린이들의 학습권 |
| | | | | |
| | | | | |
| | | | | |

- 월별 학생인권 기사내용 사례분석 및 쟁점에 따른 대안 제시

| 제목 | 예시) 학교 폭력 | | |
|---------------|---|-------|-------------|
| 출처 | 전북일보 | 기사 날짜 | 2022. 5. 1. |
| 기사 주소 | http://www..... | 기자 | 홍길동 |
| 인권 범위 | | |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대되고, 등하교길 및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리포트.... | |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 | |
| | | | |
| | | | |
| | | | |

○ 분석 방법

- 기사 내용 분석 (키워드 및 내용분석)

(2) 모니터링 수행체계

학생인권 모니터링은 아래와 같은 수행체계로 진행하였다. 매월 전라북도 내 언론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와 전국 언론기사 및 보도자료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학생인권 관련 기사를 검색하는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으며,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에 해당하는 사안을 검색하였다. 검색한 기사를 대상으로 학생인권 내용과 쟁점을 파악하였으며,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해 유사 사례를 파악하고, 타 시도 사례를 함께 조사하였다.

학생인권과 관련된 기사를 모니터링한 후, 월별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4월부터 11월까지 작성한 월별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표-3> 학생인권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 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 보고 | -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보고 - 월별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월별 학생인권 관련 주요 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빈 면

제2장 문헌검토

I. 인권과 학생인권

인권이란 어느 시대나 사회에서 사람으로서 당연히 누리고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를 처음으로 확인한 것이 미국 버지니아 권리장전과 프랑스 인권선언인데, 인권 또는 인간의 권리로 표현되었다. 인권은 인권사상을 바탕으로 하여 인간이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리는 인간의 생래적·천부적 권리인 자연권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인권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법률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는 인권을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인권은 단순히 사람이 사람이기 때문에 갖는 권리이고, 모든 사람이 시민으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노동자로서, 또는 어떤 결사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가지느냐와 상관없이 누리는 보편적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세계인권선언의 전문¹⁾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인권이란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보편적인 권리이므로 학생이라는 이유로 인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이다. 학생인권의 법적 근거는 당연히 헌법에서 찾아야 하고, 대한민국의 헌법에 의하여 학생인권이 보장되고 있다. 학생인권과 관련하여 우리

나라는 1991년 12월 23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을 조약 제1072호로 비준함에 따라 학생인권의 보장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과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엔 아동 협약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학생인권은 보편적인 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 그 밖에도 「교육기본법」 제12조에 따르면 학습자는 “①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 ② 교육 내용·교육 방법·교재 및 교육 시설은 학습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개성을 중시하여 학습자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마련되어야 한다. ③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 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학생의 인권존중과 학생이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학교에서의 학생인권 보장을 명문화하고 있다. 이 밖에도 「근로기준법」 제64조부터 제72조에서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특별히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생인권은 헌법적 정당성을 인정받으며, 학생인권의 보장을 증진하여야 할 각종 관련 법률에 따라 마땅히 우리사회가 학생인권을 보장하여야 할 법적인 정당성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학생인권의 보장은 이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각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에 맞는 조례가 제정이 되어 학생인권 보장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나, 학생인권의 본질적인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학생인권법의 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²⁾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6개의 시도별로 비슷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보장 차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므로 이하에서는 시도별 학생인권조례 현황을 비교해 보고,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검토해본다.

1)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 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3]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므로, 이에,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유념하면서 학습 및 교육을 통하여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하여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식되고 준수되도록 노력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국가가 성취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인권선언을 선포한다.”

2) 2021년 11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시 구제를 위한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일명 ‘학생인권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학생인권조례 근거 조항 마련 △학생에게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가정환경, (학업)성적,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 지향,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 이유에 의한 차별 행위 등을 ▲학생인권의 침해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및 학생회의 법제화 ▲학칙 제·개정 시 학생의 참여 보장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의 참여 보장 ▲인권침해의 조사와 구제를 위한 ‘인권옹호관’의 설치 등이다. 출처: 교육플러스(e뉴스통신)(<http://www.edpl.co.kr>)

II. 학생인권조례

1. 학생인권조례 제정 현황

2022년 12월 현재, 경기도, 서울특별시,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충청남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6개의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교육권, 평등권, 자유권 및 정보권, 참여권, 권리구제절차, 소수(자)학생의 권리(보장) 등을 학생인권으로 명시하였다. 또한 학생인권조례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각 조례마다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과정은 순탄치 않게 진행되었는데, 다른 시도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빠져 있어 향후 조례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이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담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제주 학생인권조례)이 우여곡절 끝에 최종 관문을 통과하였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되기까지 반대 단체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일부 핵심 내용들이 수정되는 등 진통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전국 6번째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지역이 되었다.

제주도 학생인권조례는 ①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②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③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④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⑤ 자치와 참여의 권리, ⑥ 복지에 관한 권리, ⑦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⑧ 소수 학생의 권리, ⑨ 인권교육 및 인권실천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⑩ 학생인권상당 및 인권침해의 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의 핵심적인 내용은 타 시도에서 일찍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기초로 하고 있다.

각 지역의 학생인권조례는 세부적인 내용엔 조금씩 차이를 두고 있으나 전체적인 틀은 같다. 가장 나중에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제주도와 각 시도별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구성은 유사한데, 첫째, 자유권으로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생활의 의미가 다양해지고, 사생활 보호에 대한 인식도 높아진 만큼 학교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시대 변화에 맞게 해석하고 보장할 필요성에 부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어서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행복추구권)와 제12조(신체의 자유)를 구체화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양심·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와 민주시민 사회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보장하기 위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둘째, 교육권과 관련하여 「대한

민국 헌법」 제3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3조,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통해서 유엔에서 제시한 학습권의 4대 요소(가용성·접근성·수용성·적용성)를 구체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자치권 및 참여권은 학생을 교육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간주하여 학생의 참여가 형식적인 모습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참여를 통한 적극적인 정책결정 참여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복지권은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모든 학생들에게 보장 되도록 명문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차별금지’ 및 평등권은 「대한민국 헌법」, 「교육기본법」, 「유엔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의 법규범에서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평등권과 평등의 원칙을 규정한 것이므로 학생들은 부당하게 또는 자의적으로 차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선언한 것이며, ‘소수(자) 학생의 권리(보장)’은 차별금지의 구체화된 조항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는 학생이 폭력, 절도, 시험 부정행위 등과 관련하여 조사나 징계를 받을 경우에도 공정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존중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이다. 일곱째, ‘권리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는 부당한 법률, 명령, 지침 등에 따르지 않고 보편적 인권에 따라 행동하고 본인을 방어할 수 있는 권리와 「대한민국 헌법」 제26조에 규정되어 있는 ‘청원권’을 명시한 것이다.

각 시·도마다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은 대체로 두발·복장의 자유 등 개성 실현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의 자유, 참여권, 휴식권,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이 학교에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내용을 명시하고, 이러한 권리를 신장시키기 위한 구체 기구나 학교와 교육청의 의무를 정하고 있다. 이처럼 학생인권조례는 학교에서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는 학생인권의 침해를 방지하고, 지켜야 할 학생인권의 기준을 제시하는 자치법이라는 의미가 있다. 조례의 규정 형식을 보면 대체로 ‘학생은 ○○○ 권리를 가진다.’는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다. 결국 이는 인권의 보편성에 따라 학생이라면 누구나 학생인권의 보호 대상으로 포섭되고, 학생인권이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조례를 통해 실질적으로 학생의 인권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만 조례의 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생활규정과 학칙에는 진학지도라는 명목 아래 관행적으로 특히 체벌, 두발·복장규제, 종교강요, 소지품 검사, 휴대폰 사용금지 등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가 지적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학생인권법 제정을 통한 학생인권 보호의 증진이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기 어려운 상황에서 시도별로 자치법규를 통해 무엇이 인권이고 인권침해인지 명확히 규정하고 개입하려는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대한민국헌법」,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되었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인권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학생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각종 관련 제도 개선과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여 제정되었다.³⁾ 이 연구보고서의 주된 연구목적인 학생인권 모니터링이 실태 파악과 사례별 유형화를 위해 이하에서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1) 교육권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제5조(학습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을 자의적으로 운영하거나 학생에게 임의적인 교내·외 행사 참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근거한 특성화 고등학교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일시적 장애를 포함한 장애 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을 겪는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자기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고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인권을 옹호하고 자기나 타인의 인권을 위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이 조례의 주요내용을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2) 평등권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① 학생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의 정의에 해당하는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②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3) 전라북도교육청,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2014, 7면.

(3) 자유권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① 학생은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모든 물리적·언어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 내 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긴급구조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에 대한 권리)

-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피해자를 구조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관계기관 및 지역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휴식을 취할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개성 있는 자아의 형성·발달을 위하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취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교육감은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12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③ 교직원은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을 열람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⑤ 학교의 장은 다른 방법으로는 안전 등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 여부나 설치 장소에 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치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① 학생은 가족, 교우관계, 성적, 징계기록 등 사적인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교외에서 이름표의 부착을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교육비, 급식비 미납사실 등 학생에 관한 사적 정보를 본인 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학생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함부로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정보에 관한 권리)

- ①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언제든지 열람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학교에 대해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에 관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공개를 연기할 수 있으며,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이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 ④ 학생 또는 보호자는 학생 본인에 관한 기록에 부정확한 내용, 교육활동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경우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참여권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2.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3.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권)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들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5) 교육복지권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복지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학습 부진, 폭력 피해, 가정 위기, 비행·일탈 등 각종 위기상황 극복과 적성 발견, 진로 모색 등 정체성 발달을 위하여 학교에서 상담 등 적절한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다문화가정 등 경제·사회·문화적 사유로 권리 실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배려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예산 등의 자원을 배정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이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를 누리기 위해 필요한 상담과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수립·정비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별한 상담과 돌봄이 필요한 학생을 위하여 아동복지 및 인권과 관련된 지역 사회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특히 보호자를 교육하고 보호자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적절한 양과 질의 도서와 도서관 공간 확보, 청결한 환경의 유지, 화장실과 적절한 탈의 및 휴게 공간의 확보, 적절한 냉·난방 관리, 녹지공간 확대 등 최적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교 공간의 성 인지적 설계를 통해 성 평등이 보장되는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 공연, 전시 등의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제2항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학교와 지역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4조(급식에 대한 권리)

- ① 학생은 안전한 먹을거리에 의한 급식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급식재료, 급식업체 등 급식 관련 정보를 학생에게 제공하고, 정기적으로 급식에 관한 의견조사를 실시하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친환경 농산물에 기초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은 유·초·중·고등학교의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절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학생인권구제절차

제8절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제26조(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 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한 시설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전라북도 내의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과 대안학교, 평생학습센터 등 대안 교육 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들 교육기관에서의 인권 보장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할 수 있다.

(7) 소수자 권리 보호

제3절 소수 학생의 권리 보호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 부모 가정, 조손 가정, 다문화 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 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절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 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절 학원 및 대안학교 등에서의 인권보장

제39조(학원, 대안학교, 평생교육 등)

-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 평생교육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으나 학생과 같은 연령대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학습을

제3장 학생인권 모니터링

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1.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1) 활동일시 : 2022년 4월 1일 ~ 2022년 11월 30일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및 타 시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3) 활동내용

○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를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 침해의 구제를 위한 권리

2.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1)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조사 | https://www.jjan.kr/article/20220414580293 | 전북일보 | 전북도 |
| 2 | 교육시민단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토론회 개최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442 | 전북도민일보 | 전북도 |
| 3 |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14살 소녀들의 1년 교육청 인권센터도 인정한 '교사 성희롱' 학교는 징계 없이 땀 질식 분리조치, 거짓 문서 발송까지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61.html | 한겨레 | 전북도 |
| 4 | 일기 안 쓴 초1에 명심보감 필사, 학대?... 지자체·교육청 판단 갈렸다.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819200940122 | 머니투데이 | 타 시도 |

(2)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오늘과 내일]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세요.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46446 | 새전북신문 | 전북도 |
| 2 | 어린이가 본 어린이 인권... “안전하게 놀 권리 아쉬워” |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2389/N#none | EBS 뉴스 | 전북도 |
| 3 | 전주시, 고위험군 아동 마음건강까지 챙긴다. | http://www.jjan.kr/article/20220525580356 | 전북일보 | 전북도 |
| 4 | 전북도교육청,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540 | 전북도민일보 | 전북도 |
| 5 | 인권위 “기숙사 생활 고등학생 휴대전화 금지, 통신 자유 침해”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2009003&wlog_tag3=naver | 서울신문 | 타 시도 |
| 6 | 충남교육청, 촘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http://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028 | 한국사회복지저널 | 타 시도 |
| 7 | ‘학생인권조례’ 충남 교육감 선거 뜨거운 감자로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11 | 충청투데이 | 타 시도 |

(3)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상상 초월 학폭'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버린 교실 | https://www.jjan.kr/article/20220621580047 | 전북일보 | 전북도 |
| 2 | 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달라” ‘쑥대밭’ 전북 A초 교사들 “지금은 별다른 대책 없어”, 법상 생활지도권 명시 촉구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0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이데일리 | 전북도 |
| 3 | 학교에 대한 민음의 대가가 2차 피해였나...초교 1년, 급우에게 학폭피해 | https://www.news1.kr/articles/?4718272 | 뉴스1 | 전북도 |
| 4 | 제주 A여고 학생인권 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권고 | https://www.yna.co.kr/view/AKR20210603098400065?input=1195m | 서울신문 | 타 시도 |
| 5 | 대전시교육청, 운동부 학생 대상 폭력과 부당행위 피해 실태조사 | https://www.nocutnews.co.kr/news/5775691 | 대전CBS | 타 시도 |
| 6 | “개구리 급식” 업체, 72개교에 김치 납품 중...서울시교육청, 과대학교 급식 분리 검토 |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221510011/amp | 경향신문 | 타 시도 |
| 7 |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52000004?input=1195m | 연합뉴스 | 타 시도 |

(4)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악마화 하지 말라"…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등생이 받은 편지 | https://www.joongan.co.kr/article/25087134 | 중앙일보 | 전북도 |
| 2 | 학폭 행동교정 없이… 대책 없는 ‘강제전학’ [심층기획 - 강제전학 제도 허와 실]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519781?OutUrl=naveur | 세계일보 | 전북도 |
| 3 | 수학여행 간 여고생·교사 159명 코로나 집단 감염… 학교 측 안 일한 대응 논란 | http://www.jjan.kr/article/20220720580277 | 전북일보 | 전북도 |
| 4 |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만전…자료집 개발·보급 | https://www.news1.kr/articles/?4739518 | 뉴스1 | 전북도 |
| 5 | 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 https://www.joongan.co.kr/article/25088921 | 중앙일보 | 타 시도 |

(5)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 | https://www.jjan.kr/article/20220828580264 | 전북일보 | 전북도 |
| 2 | 진안지역 돌봄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침예한 주장 대립, 그 결말은 | https://www.jjan.kr/article/20220816580121 | 전북일보 | 전북도 |
| 3 | 코로나 재유행속 재감염 속출… 개학 어찌나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364 | 전북중앙 | 전북도 |
| 4 | 골든타임을 지켜라’… 학교 ‘위기학생’ 사각지대 없앤다. | http://www.jjan.kr/article/20220809580206 | 전북일보 | 전북도 |
| 5 | 촉법소년, 형사 책임 능력과 교화 가능성 고려해야 |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8080300055#c2b | 경향신문 | 타 시도 |
| 6 |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 아냐… 어른 관점 문제 해결일 뿐”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7158?sid=103 | 국민일보 | 타 시도 |

(6)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교권 침해 예방·위기 행동 학생 제재 위해 '학생생활지도권' 보장돼야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516113434573 | 프레스이안 | 전북도 |
| 2 | “거기, 노키즈존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에스키즈존입니다!”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9/24/12MZK24IJNGT3EABSQ5T6A2N3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al&utm_campaign=naver-news | 조선일보 | 전북도 |
| 3 |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아동권리 침해는 어떤 것? | https://m.segye.com/view/20220921510333 | 세계일보 | 전북도 |
| 4 | 전북도교육청, 팽수와 함께 영어를... AI 팽톡 활용 수업 확산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1_0002020782&cID=10808&pID=10800 | 뉴시스 | 전북도 |
| 5 | 수업중 화장실 금지한 교장... 교사들도 '학생인권 침해' 반발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6639 | 오마이뉴스 | 타 시도 |

(7)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전북장애학생 인권침해.. '경각심 가져야!'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576 | 전라일보 | 전북도 |
| 2 | 전북 결식아동 급식비 한 끼 당 7천원, 물가 고공행진에 영양 부실 우려 |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239&sc_section_code=S1N6 | 전북도민일보 | 전북도 |
| 3 | 기초학력은 '인권'... 건강검진처럼 학생 기초학력 진단 실시 | https://www.jjan.kr/article/20221019580235 | 전북일보 | 전북도 |
| 4 |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린 20대 교사 징역형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8034600062 | 연합뉴스 | 타 시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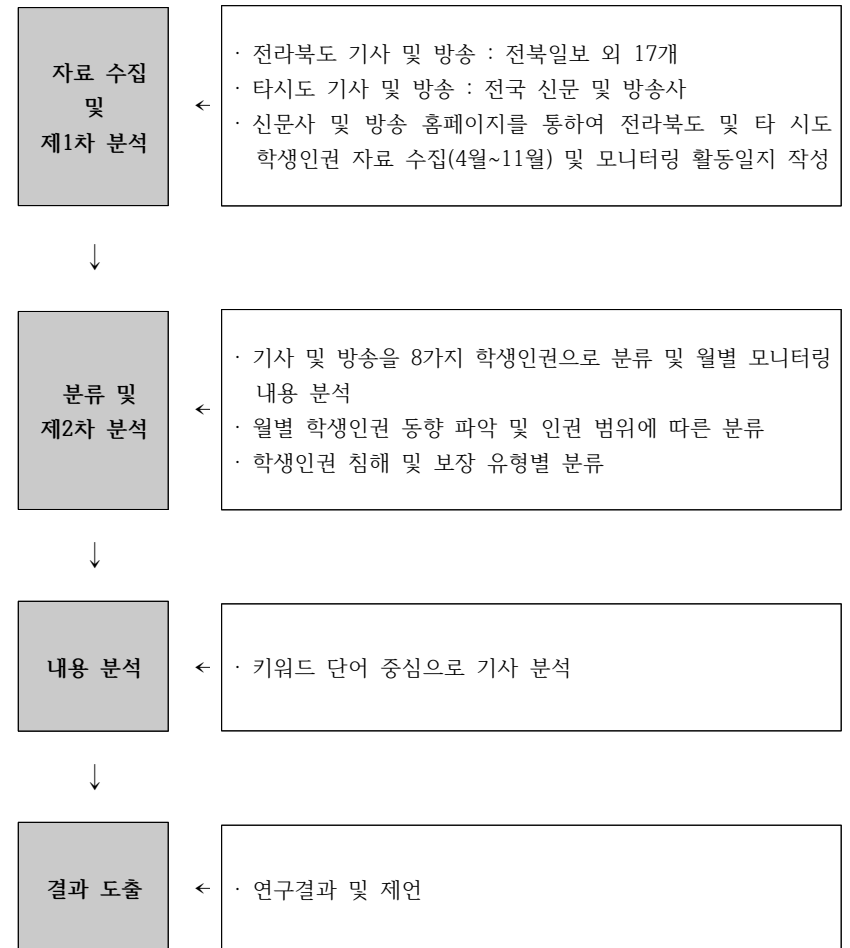
(8)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개요

| | 제목 | 출처 | 신문사 | 비고 |
|---|---------------------------------|---|-------|-----|
| 1 | 저소득층 학생들 생일 상 - 명절상 지원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1889 | 새전북신문 | 전북도 |
| 2 | "타지 통학 학생도 열차 운임비 지원합니다." | http://www.jjan.kr/article/20221122580173 | 전북일보 | 전북도 |
| 3 |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 http://www.jjan.kr/article/20221115580035 | 전북일보 | 전북도 |
| 4 | 김이재 도의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해야" | http://www.jjan.kr/article/20221121580047 | 전북일보 | 전북도 |

II.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분석

1. 학생인권 언론보도 기사 분석 절차

<표-4>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절차



2.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분석

전북일보 외 전국 언론사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하여 신문사 및 방송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학생인권조례 내용과 관련된 기사를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11월 30일까지 모니터링한 결과는 아래의 <표-5>와 같이 나타나고 있다.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은 4월 4건(타 시도 1건), 5월 7건(타 시도 3건), 6월 7건(타 시도 4건), 7월 5건(타 시도 1건), 8월 6건(타 시도 2건), 9월 5건(타 시도 1건), 10월 4건(타 시도 1건), 11월 4건으로 나타났고 8개월 동안 총 42건(타 시도 12건)으로 나타났다.

<표-5> 월별 모니터링 기사 및 방송

| 월별 | 전라북도 | 타 시도 | 합계 |
|----|------|------|----|
| 4 | 3 | 1 | 4 |
| 5 | 4 | 3 | 7 |
| 6 | 3 | 4 | 7 |
| 7 | 4 | 1 | 5 |
| 8 | 4 | 2 | 6 |
| 9 | 4 | 1 | 5 |
| 10 | 3 | 1 | 4 |
| 11 | 4 | 0 | 4 |
| 합계 | 29 | 13 | 42 |

언론사 기사 및 방송을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장에 따른 영역별로 분류하면 아래의 <표-6>과 같다. 언론 보도에 나타난 월별 학생인권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4월 5건, 5월 6건, 6월 8건, 7월 9건, 8월 6건, 9월 7건, 10월 5건, 11월 9건으로 나타났고, 8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의 내용과 관련된 모니터링 결과는 총 55건으로 나타났다.

<표-6>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분석표

| 학생인권 모니터링 내용 | | 2022년(타 시도 언론기사 포함) | | | | | | | | | |
|-----------------------|------------------------|---------------------|----|----|----|----|----|----|-----|-----|--|
| | | 계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
|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 10 | | | 1 | 3 | 1 | 2 | 1 | 2 | |
| |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1 | | | | 1 | | | | | |
| | 제7조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 | | | | |
| 소계 | | 11 | | | | | | | | | |
|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6 | 1 | 2 | | | | 2 | 1 | | |
| | 소계 | 6 | | | | | | | | | |
|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12 | 2 | | 5 | | 4 | | 1 | | |
| |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 2 | | 1 | | 1 | | | | | |
| |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 4 | 1 | 1 | | 1 | | 1 | | | |
| 소계 | | 18 | | | | | | | | | |
|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 | | | |
| |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2 | 1 | 1 | | | | | | | |
| |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 | | | | |
| | 제15조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 | | | | |
| 소계 | | 2 | | | | | | | | | |
| 제5절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제16조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 | | | |
| | 제17조 표현의 자유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 1 | | | | | | | | 1 | |
| |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 | | | | | | | | | |
| |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1 | | | | | | | | 1 | |
| | 소계 | 2 | | | | | | | | | |
|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 3 | | | | | | | 1 | 2 | |
| |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1 | | | | | | 1 | | | |
| | 제23조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 | | | |
| |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 2 | | | 1 | | | | 1 | | |
| |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 10 | | 1 | 1 | 3 | 1 | 1 | | 3 | |
| 소계 | | 16 | | | | | | | | | |
| 제8절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 | | | |
| | 제27조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 | | | | |
| 소계 | | | | | | | | | | | |
| 총계 | | 55 | 5 | 6 | 8 | 9 | 6 | 7 | 5 | 9 | |

8개월 동안 학생인권조례 분야별로 관련된 언론보도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영역에서 총 1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총 16건,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11건,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6건,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서 2건,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영역에서 2건으로 나타났다.

학습에 관한 권리의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교육청의 AI를 이용한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과 기초학력 신장을 위해 진단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양성평등과 장애인의 인권보호 정책 및 홍보, 어린이 비하 표현이나 노키즈존과 같은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인권 침해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계 전체의 대안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권이 침해되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안전과 휴식에 대한 권리로서, 어린이들이 맘껏 놀고,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관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사생활의 자유에 관한 내용으로서, 기숙사 거주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기숙사 생활규정은 과잉 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고 학습권이나 건강권 등의 인권 침해한다는 내용이다.

3. 언론보도 기사 학생인권 모니터링 키워드 분석

<표-7> 4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조사 | 제9조 제21조 | 전북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 피해회복, 학교폭력 예방, 인권 존중, 학교 문화 | 전북도 |
| 2 | 교육시민단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토론회 개최 | 제8조 | 교육시민사회단체, 양성평등, 교육환경, 성인지관점, 성주 류화 정책, 성평등위원회 | 전북도 |
| 3 |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14살 소녀들의 1년 교육청 인권센터도 인정 한 ‘교사 성희롱’ 학교는 징계 없이 땀질 식 분리조치, 거짓 문서 발송까지 | 제9조 | 교사, 스쿨 미투, 성희롱, 성 폭력, 인권센터, 성고충심의 위원회 | 전북도 |
| 4 | 일기 안 쓴 초1에 명 심보감 필사, 학대?… 지자체·교육청 판단 | 제11조 제14조 | 일기, 명심보감, 휴식권, 사 생활의 자유, 행동의 자유권 | 타 시도 |

4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4건(타 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등에서 나타났다. 4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7>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1) 전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의 전수 조사 실시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려고 하고 있음. 2) 교육시민단체에서 성평등 전담조직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으로 양성평등의 교육환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함. 3)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생들의 보호가 미흡함. 4) 일기를 안 쓴 초등 1학년에게 명심보감을 필사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임.

<표-8>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 제11조 제21조 | 아동인권, 아동의 권리, 아동의 존엄성, 놀 권리, 휴식권, 사회적 관계 형성 | 전북도 |
| 2 어린이가 본 어린이 인권... “안전하게 놀 권리 아쉬워” | 제10조 | 아동인권, 안전, 보건, 건강, 행복, 놀 권리 | 전북도 |
| 3 전주시, 고위험군 아동 마음 건강까지 챙긴다. | 제25조 | 아동, 청소년, 정신 건강, 심리·정서적 지원 | 전북도 |
| 4 전북도교육청,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 제8조 | 양성평등, 양성평등교육, 양성평등 문화, 성인지 감수성 | 전북도 |
| 5 인권위 “기숙사 생활 고등학생 휴대전화 금지, 통신 자유 침해” | 제13조 | 기숙사, 휴대전화, 통신의 자유, 행복추구권, 과잉금지의 원칙 | 타 시도 |
| 6 충남교육청, 촘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제5조 제8조 제21조 제38조 | 코로나 19, 장애 학생, 인권 침해 예방, 인권 보호, 인권지원단, | 타 시도 |
| 7 ‘학생인권조례’ 충남교육감 선거 뜨거운 감자로 | 제7조 | 학생인권조례, 학생의 존엄과 가치, 학교교육과정, 인성 교육 | 타 시도 |

5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7건(타시도 3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38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서 나타났다.

5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8>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보장이 필요

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관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맘껏 놀고,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도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타 시도 사례에서는 C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C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는 내용이다.

<표-9>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상상 초월 학폭’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버린 교실 | 제9조 제21조 | 학교폭력, 교육을 받을 권리, 교사의 수업할 권리, 학생인권조례, 학생생활지도법, 학생생활지도조례 | 전북도 |
| 2 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 달라.” ‘쑥대밭’ 전북 A초 교사들 “지금은 별다른 대책 없어”, 법상 생활지도권 명시 촉구 | 제9조 제21조 | 학교 폭력, 학생인권조례, 교원의 생활지도법, 생활지도권 | 전북도 |
| 3 학교에 대한 믿음의 대가가 2차 피해였나...초교 1년, 급우에게 학폭 피해 | 제9조 제21조 | 학교폭력, 학생인권조례, 교육의 기회, 학습권, 교권, 생활지도권 | 전북도 |
| 4 제주 A여고 학생인권 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 권고 | 제5조 제8조 제9조 제21조 | 성차별, 성희롱, 성추행, 언어폭력, | 타 시도 |
| 5 대전시교육청, 운동부 학생 대상 폭력과 부당행위 피해 실태조사 | 제9조 제21조 | 학생 선수, 인권보호, 폭력, 부당 행위 | 타 시도 |
| 6 ‘개구리 급식’ 업체, 72개교에 김치 납품 중...서울시교육청, 과대학교 급식 분리 검토 | 제5조 제21조 제24조 제25조 | 학교 급식, 열무김치, 개구리 사체,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CCP) | 타 시도 |
| 7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 제5조 제21조 제25조 | 학교폭력, 가해 학생, 강제 전학, 인권 침해, 국가인권위원회, 행동 자유권, 건강권, 학습권 | 타 시도 |

6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7건(타 시도 4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6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9>와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다. 교사가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에 의해 학교 내 안전한 학습 환경이 위협받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생 생활지도조례의 제정, 관련 교육법 개정이나 학생생활지도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 제주의 A여고의 일부 교사의 성차별적 폭언 및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의 증언이 사실로 나타났다. 몇몇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학교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학교 전반의 문제이다.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및 학생인권 기구,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등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 제기된다.

<표-10>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악마화 하지 말라”... 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등생이 받은 편지 | 제5조 제9조 | 학교 폭력, 강제 전학, 가정 환경, 아동 학대, 가해학생 프로그램 | 전북도 |
| 2 학폭 행동교정 없이... 대책없는 ‘강제전학’ [심층기획 - 강제 전학제도 허와 실] | 제5조 제9조 | 학교 폭력, 강제 전학, 폭탄 돌리기, 문제 학생, 낙인, 가해학생 프로그램 | 전북도 |
| 3 교사 159명 코로나 집단 감염... 학교 측 안 일한 대응 논란 | 제10조 제25조 | 수학여행, 코로나19, 안전, 건강 | 전북도 |
| 4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만전...자료집 개발·보급 | 제5조 | 학습권, 고교학점제, 최소학업성취수준, 교수·학습 자료집, 원 자료집, | 전북도 |
| 5 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 제6조 제11조 제21조 | 기숙사, 주말 외출, 자기주도 학습, 국가인권위원회, 일반적 행동자유권,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 타 시도 |

7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타 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7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0>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새 학교에 적응 못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집단활동시 코로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 시도 사례로서,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의 외출 제한 조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

에도 반하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표-11>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 . .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 | 제9조 | 성폭력, 성희롱, 학생인권조례, 교권보호위원회 | 전북도 |
| 2 ‘진안지역 돌봄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침해한 주장 대립, 그 결말은 | 제5조 제9조 | 초등 돌봄 교실, 아동학대, 학생인권교육센터, 학생인권조례 | 전북도 |
| 3 코로나 재유행속 재감염 속출 . . . 개학 어쩌나 | 제5조 제11조 제25조 | 전염병, 코로나, 재감염, 재유행, 방역 | 전북도 |
| 4 골든타임을 지켜라’ . . . 학교 ‘위기학생’ 사각지대 없앤다. | 제9조 제25조 | 위기긴급 지원단, 골든타임, 애도교육, 고위험군 심리검사,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 | 전북도 |
| 5 촉법소년, 형사 책임 능력과 교화 가능성 고려해야 | 제5조 | 촉법소년, 형사책임능력, 형사처벌, 보호처분, 교화, 재사회 | 타 시도 |
| 6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 아냐 . . . 어른 관점 문제 해결일 뿐” | 제5조 | 놀이 권리,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 창의성,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 | 타 시도 |

8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6건(타시도 2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1>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돌봄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의 문제로 아동, 학생의 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해 균형점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교육청은 행정력을 활용하여 현재 필요한 방역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감염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방역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학교생활에 적응력 높이기 위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주관의 위기학생 지원 긴급 통합 시스템 구축은 위기재발 방지와 예방에 극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하다.

<표-12>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교권 침해 예방·위기 행동 학생 제재 위해 ‘학생생활지도권’ 보장돼야 | 제5조 | 교권, 교권 침해, 교권 보호, 교육 활동, | 전북도 |
| 2 “거기, 노키즈존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에스키즈존입니다!” | 제8조 | 에스키즈존, 노키즈존, 노존, 노시니어존, 노틴에이저존, 노교수존, 케어키즈존 | 전북도 |
| 3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아동권리 침해는 어떤 것? | 제8조 | 아동 비하, 주린이, 노키즈존, 아동 인권, | 전북도 |
| 4 전북도교육청, 팽수와 함께 영어를... AI 팽톡 활용 수업 확산 | 제5조 제22조 | SW·AI기반, EBSe AI, 팽톡 프로그램, 인공지능 기술, 스마트 교육, 창의·융합수업, 미래교육환경 | 전북도 |
| 5 수업중 화장실 금지한 교장... 교사들도 ‘학생인권 침해’ 반발 | 제11조 제25조 | 수업시간, 화장실, 정수기 사용, 수업 참여도, 생리현상, 타 시도 인권침해, | |

9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타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9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2>와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키즈존과 같은 노존(No Zone)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 유사한 내용으로서, 어린

이 비하 표현은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타 시도 사례로서, 수업시간 중 화장실,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표-13>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전북장애학생 인권침해... ‘경각심 가져야!’ | 제8조 제21조 제38조 | 장애학생, 인권침해, 신체폭력, 가정폭력(학대), 성추행 | 전북도 |
| 2 전북 결식아동 급식비 한 끼 당 7천원, 물가 고공행진에 영양 부실 우려 | 제21조 제24조 | 결식아동, 급식, 급식비, 급식카드, 영양 | 전북도 |
| 3 기초학력은 ‘인권’ ... 건강검진처럼 학생 기초학력 진단 실시 | 제5조 | 기초학력, 인권, 진단평가, 학력 향상, 학습 지원 | 전북도 |
| 4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 린 20대 교사 징역형 | 제9조 | 초등학생, 숙제, 청소용 밀대, 엉덩이, 체벌, 타박상, 교육적 목적, 형사처벌 | 타 시도 |

10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4건(타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4조 급식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10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3>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지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데,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물론 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식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의 진단평가

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타 시도 사례로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표-14>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학생인권 관련 키워드

| 기사 제목 | 인권 조례 | 키워드 | 비고 |
|-----------------------------------|------------------------------|--|-----|
| 1 저소득층 학생들 생일상 - 명절상 지원 | 제18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 저소득 학생, 생일상, 명절상, 구강진료, 복지, 건강권, 학생의회, 학부모협의회, 자치권·참여권 | 전북도 |
| 2 “타지 통학 학생도 열차 운임비 지원합니다.” | 제5조 제21조 | 열차운임비, 통학, 주민등록, 열차 정기승차권 | 전북도 |
| 3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 제5조 | 위봉산, 근거리의 학교, 위험한 통행로, 학급편제, 통학편의 | 전북도 |
| 4 김이재 도의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해야” | 제5조 | 청소년, 호기심, 충동, 조절능력, 인터넷, 스마트폰, 절제 | 전북도 |

11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등에서 나타났다.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4>와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학생들의 지원으로 복지와 건강권 등의 증진과 학생의회 등의 설치로 자치권·참여권 등의 증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익산시가 장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완주군 동상면에서 근거리 학교의 배정과 관련하여, 보

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하여,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제4장 연구결과 및 제언

I.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2022년 4월 1일에서 2022년 11월 30일까지 총 8개월에 걸쳐 전라북도 및 다른 지역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등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관련 모니터링을 하였다. 특히 학생인권 관련 사항 중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등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하였다.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실현에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시사점 및 대안을 제시하였다. 학생인권 모니터링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기사, 방송 등에 보도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관련 학생인권 현황을 살펴보면, 4월 4건(타 시도 1건), 5월 7건(타 시도 3건), 6월 7건(타 시도 4건), 7월 5건(타 시도 1건), 8월 6건(타 시도 2건), 9월 5건(타 시도 1건), 10월 4건(타 시도 1건), 11월 4건으로 나타났고 8개월 동안 총 42건(타 시도 12건)으로 나타났다. 분야별로는 학생인권조례 제3절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영역에서 총 18건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제7절 복지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총 16건, 제1절 교육에 관한 권리 영역에서 11건, 제2절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영역에서 6건, 제4절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영역에서 2건, 제6절 자치와 참여의 권리 영역에서 2건이 보도되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별 조항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가 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와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가 10건,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6건,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가 4건,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가 3건,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및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가 각 2건으로 그다음으로 많이 보도되었다. 이외에도 제6조 정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와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및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및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가 각각 1건씩 보도되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살펴보면, 최근에는 폭력, 학습,

차별, 휴식, 복지 등과 관련된 쟁점들이 많은 이슈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폭력은 학생인권 분야에서 중요한 과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에는 학생들의 SNS 활동이 증가하였으며,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관계 형성이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서의 언어적 폭력 등도 증가하였다. 그러므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폭력 예방 교육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폭력은 전국적으로 여전히 문제되고 있으며, 관련된 지속적인 교육과 감독기관의 관리가 중요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인권 침해의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므로, 교육계 전체의 대안 마련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권이 침해되어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최근 들어서는 학생들의 복지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는 현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채식 제공을 통한 급식에 관한 권리 증진, 건강 검진을 통한 학생 건강권 증진에 관한 기사가 보도된 바 있다. 이러한 복지에 관한 사례 등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복지혜택의 제공은 학습권 보장과도 연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반 학생과 소수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문제들도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코로나 19 비대면 수업 이후 대면 수업 전환을 계기로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 보장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등하굣길 학교 주변의 공작물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기사 등, 학생들의 교통안전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과 휴식에 대한 권리로서, 어린이들이 맘껏 놀고,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고,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관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섯째, 학생들의 개성 실현과 관련하여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 사이에 간극이 여전히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학생인권조례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학생은 복장, 두발 등 용모에서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즉 학교생활규정에 근거한 학생의 용모에

대한 제한이 전면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제한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다. 현재 많은 학교에서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광범위하게 해석함으로써 학생들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여섯째, 학생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가 문제되는 경우가 각급의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데,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소지와 사용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기숙사 생활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며,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의 외출을 제한하는 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있었다.**

II. 연구제언

전라북도는 2013년 7월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학생의 인권이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인권 향상과 관련된 많은 진전이 이루어졌다. 특히 1990년에 발효된 유엔 「아동권리협약」 및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과 관련된 내용들이 교육 현장에서 많이 실현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교육의 객체’로만 인식되어 왔던 학생들이 ‘교육의 주체’로 인정되는 것이다. 다만, 학생인권조례의 이행에 있어서 일부 부족한 점이 있으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인권모니터링 결과에서도 나타났다.

학생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교육청의 활동은 긍정적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차후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할 학생들에게 주체적인 능력을 함양시키는 데 긍정적이므로 지속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라북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생인권조례와 학교생활규정이 충돌하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학교 단위로 학생들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학생의 자치와 참여의 권리에 핵심적인 요소라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전형적인 학교폭력 외에도 최근에는 SNS 등 온라인 공간에서의 혐오 표현, 집단 따돌림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튜브 등을 운영하는 교사에게 의한 학생인권 침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한 온라인상 혐오표현, 모욕, 집단 따돌림, 사생활 및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된 표준교육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도 있다. 이를 위해 실제 교육현장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진행된 학생인권 모니터링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 중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인권들을 선별하고 그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장기적으로는 ‘교육 목적상 정당한 사유’ 등 학생인권조례 중 그 내용이 충분히 명확하지 않아 자의적인 해석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규정에 대한 보완 및 온라인·비대면 교육환경에서 발생하는 차별과 혐오의 문제 등과 같이 시대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유형의 학생인권도 조례에 편입할 필요성이 있다.

참고문헌

강명숙(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교육적 의미, 법과인권교육연구.

경기도교육연구원(2017), 『2017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경기도교육연구원(2019), 『2019 경기도 학생인권 실태조사』.

구정화(2014), 학생의 인권보장 정도와 교권 존중과의 관련성, 법과인권교육연구.

구정화(2016), 일상의 인권경험이 초등학생의 인권 인식에 미치는 영향, 시민교육연구.

국가인권위원회(2016),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

교육부(2018), 『학생 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

권순정(2015),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생들의 인권 경험: 서울 S 고등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인류학연구.

김경원(2012),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일간지 사설 및 칼럼 분석,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김병준(2018), 학생인권 보장과 학교 인권교육의 발전과제, 법과 사회.

김태호(2014), 부산지역 교육주체의 학생인권조례 쟁점에 관한 인식 연구, 법과 인권 교육연구.

남복희(2018), 한국사회의 혐오표현 실태분석,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철규(2015), 학생인권조례 제정 과정에서의 쟁점 분석: 강원도 사례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현정 · 김한나 · 홍유정(2017), 토픽모델링을 활용한 학생인권조례의 사회적 이슈 분석, 아시아 교육연구.

배유진 · 김광병(2017), 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조례 개선에 관한 연구, 법과 인권교육 연구.

배한진 · 진미정(2017),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고등학생 저녁시간 및 야간자율학습 시간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서울시교육청(2015),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최종보고서』.

이형석(2015),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 국가법연구.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4), 『2014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2018), 장애 관련 언론보도 및 일상생활 모니터링 쟁점

분석 및 제언, 장애와 반성폭력.

전라북도교육청(201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해설서』.

전라북도교육청(2017), 『전라북도 학생인권 교육 실태조사』.

전라북도교육청(2018),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2019), 『2019 전라북도 인권 모니터링 연구보고서』.

정희진 · 강창희(2015),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행동에 미친 영향 : 관대한 교육방법의 효과, 노동경제논집.

조금주(2006), 2006년도 중·고등학생 인권 실태 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청소년학 연구.

조금주(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 연구.

충남청소년인권+, 충청남도 공익활동 지원센터(2019), 『2017 충남 학생인권 실태조사』.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2019), 민주주의의 사각지대 2019 학생인권을 말한다.

최숙 · 김숙(2015), 언론의 어린이 관련 인권보도에 관한 부모와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최형찬(2011), 인권,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인권을 보장하는가, 범한철학.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2017),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정보 보고서』.

부록: 월별 모니터링 활동일지

※ 2022년 4월부터 11월까지 모니터링한 학생인권 관련 언론 기사를 전라북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 4인(전주 2인, 군산 1인, 익산 1인)에게 제공한 후, 학교 현장에서 중요도 있는 기사 4건을 선정하도록 하였다. 각각 선정한 기사에 대하여 학교 현장에서 바라보는 쟁점사항과 시사점 및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총 4인의 교사가 각각 선정한 기사에 대한 쟁점 사항과 시사점 및 대안은 해당 기사 항목에 별도로 작성하였다.

전라북도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5.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 1) 활동일시 : 2022년 4월 1일 ~ 4월 30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인권 내용과 쟁점 파악 - 전국 기사와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4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4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 시도 유사 사례 및 타 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전국의 기사를 검색함(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1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1 | 1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1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1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3 | 2 |

4.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4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4건(타 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14조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등에서 나타났다.
-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교육청이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시민단체들이 성평등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평등 전담조직 및 성평등위원회의 구성 및 성평등 교육환경의 점검과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을 하였는데, 이에 대한 징계와 학생들의 보호가 미흡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타 시도 사례로서, 일기를 안 쓴 초등 1학년에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하게 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내용이다.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 조사 | 번호 | 1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1.4.14 |
| 기사 주소 | https://www.jjan.kr/article/20220414580293 | 기자 | 이강모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학교폭력 실태 조사로,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 | | |
| 기사 내용 | <p style="text-align: center;">전북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p>  <p>전북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도내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2022년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p> <p>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는 응답 학생 가운데 1,225명(1.3%)이 학교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전년 대비 언어폭력 비율이 크게 증가하고 집단 따돌림, 금품 갈취, 사이버폭력, 강요, 성 관련 사안 등의 비율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이번 조사는 도내 초등학교 4~6학년 및 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p> <p>학생들이 스마트폰과 가정의 PC 등을 활용해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사이트(https://survey.statschool.net/survey/answer.jsp?b=49803)에 접속해,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응답과 학교폭력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등 5개 영역 21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다.</p> <p>특히 설문에 참여한 학생들은 온라인에 접속할 때, 별도 회원 가입 없이 학교명 및 사전에 부여된 학교 코드번호를 입력한 후 조사에 참여할</p> | | |

| | |
|--------------------------------|---|
| | <p>수 있으며,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비밀로 보호된다.</p> <p>조사 결과는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유레카 통계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분석한 후 학교 알리미를 통해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예방하여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p><내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교육청의 학교폭력 실태 전수 조사 실시 - 학교폭력 피해·가해·목격 응답과 학교폭력의 예방 및 피해회복 방안 등 5개 영역 21개 문항 - 스마트 폰 등의 온라인 방식으로,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 비밀 보장 - 학교폭력에 대응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여, 학생들의 인권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 <p><쟁점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의 개선 방안 도출 ②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제고 방안 마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① 학교폭력 실태조사 방식의 개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태조사가 학생들에게 의례적인 행사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학생들이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교육당국과 학교가 학교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p>- 울산시교육청의 경우 실태조사 참여 전 학교폭력 예방 교육 동영상 시청하게 되어 있어, 조사 참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 교육과 인식개선을 병행하고 있음. 이러한 방법은 학교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동영상 시청을 번거로운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 오히려 응답률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음. 따라서 실태조사 참여시 학교폭력이 근절되어야 하는 간결하면서도 강력한 (시각적·청각적)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음</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교육청은 실태조사 시스템에 시각장애 학생을 위한 음성지원과 다문화 가정 학생을 위해 7개 언어를 지원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전북도교육청의 조사방식에 소수 학생에 대한 배려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수 학생에 대한 배려 방안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이번 조사에서의 학생 응답률은 전년도 등과 비교하여 학생들의 응답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p>② 실태조사 결과의 활용 제고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하고, 관련 사이트에 조사 내용을 공시하여 학생, 학부모 등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예방과 대응을 위해 시급히 개입할 학교폭력 유형을 선별하여 교육당국의 역량을 우선적으로 투입할 필요가 있음. 예컨대, 해당 학교폭력 유형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대응 및 처리절차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울산시교육청, 오늘부터 학교폭력 실태 전수조사 (뉴스1, 2022.04.1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411_0001828007&cID=10814&pID=10800</p> <p>경기도교육청, 5월 8일까지 학교폭력 실태조사(뉴스1, 2022.04.11.) https://www.news1.kr/articles/?4643981</p> |
| 타 시도 사례 | <p>부산광역시교육청, 2022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부산광역시교육청 블로그, 2022.4.11.) https://blog.naver.com/with_pen/222691510024</p> <p>경상남도교육청, 학교폭력 실태조사와 학교폭력 종류와 대응법 (경상남도교육청 블로그, 2022.4.21.) https://blog.naver.com/gne_education/222706884037</p> |

| | | | |
|-------|---|----|-----------|
| 제목 | 교육시민단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토론회 개최 | 번호 | 2 |
| 출처 | 전북도민일보 | 날짜 | 2022.4.22 |
| 기사 주소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442 | 기자 | 이휘빈 |
| 인권 범위 | 평등권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학생인권조례 제8조) | | |
| 주제 | - 성평등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로, '성평등 전담 조직'과 '성평등위원회'에 대한 제안 및 토론 | | |
| 기사 내용 | <p>교육시민단체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토론회 개최</p>  <p>전교조 전북지부, 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오후 전북도교육청 별관에서 토론회를 열었다.</p> <p>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에 제정된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평등교육환경조례)'에 대해 조례상 도교육청에 두게 되어 있는 '성평등 전담 조직'과 '성평등위원회'에 대해 얘기했다. 전북을 제외한 나머지 15개 시도교육청에서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분석하고, 전북도교육청이 전담기구를 어떻게 설치·운영하면 좋겠는지 제안·토론했다.</p> <p>양민주 전북학생인권심의회위원은 “2018년 이후 전국적으로 스쿨미투가 이어질 때 전북지역에서도 힘겹게 발언한 스쿨 미투가 있었지만, 교육청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고, 교육환경 점검과 대책 마련도 내실 있게 추진되지 못했다”라며, “조례에 따른 형식의 틀도 갖추지 않았다는 것은 성평등 의제를 철실하게 인지하지 못한다는 증거”라고 평가했다.</p> <p>김고종호 전교조 전북지부 정책실장은 “성평등 의제는 도교육청 전체의</p> | | |

| | |
|-------------|---|
| | 정책 모니터링과 조직 문화의 개선을 통해 성인지관점 확산과 성주류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전체 부서를 조율할 수 있는 정책공보담당관실에 성평등 전담 조직을 두고 성평등위원회 산하에 ▲교육 ▲정책모니터링 ▲사안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
| 내용분석 및 쟁점사항 | <p><내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 및 활성화 조례(성평등교육환경조례)'에 따른 '성평등 전담 조직'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방안 - 피해자의 보호, 성평등 교육환경의 점검과 대책 마련 - 성평등위원회 산하에 교육, 정책모니터, 사안, 거버넌스 등을 다루는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이 제시됨 <p><쟁점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평등 전담조직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② 양성평등 교육환경의 지속적 추진 방안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성평등 전담조직과 성평등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제안을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 성평등 전담조직과 성평등위원회의 신설은 임의적임(양성평등 조례 제4조 제3항, 제6조 제1항). 조직·위원회간 업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전북학생인권센터의 관할 업무로 포함시키는 방안 검토 필요 ② 양성평등 교육환경의 지속적 조성 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실태 조사에 양성평등 교육환경에 관한 인식 및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점검 - 성인지감수성은 종래 보수적이었던 남성 위주로 구성된 대법원에서도 성폭력사건의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는 성인지감수성에 대한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 환기와 노력의 결과로 판단됨. 우리 사회의 민주시민으로 성장·생활할 학생들에 대한 '성인지감수성 교육 강화'는 필수적임 |

| | |
|--------------------|---|
| | - 전북도내 학교 건물 신축, 리모델링 및 보수시 '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을 사업 시행업체에 대한 평가 요소의 하나로 추가하는 방안 검토(양성평등 조례 제2조 3. 가. 참조)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영유아 교사 양성평등 교육(전북도민일보, 2022.4.1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9085 |
| 타시도 사례 | 성평등 의식문화 확산 협력(목포 MBC, 2022.4.22.) https://mpmbc.co.kr/article/gxTFY8nN7bQpkYq |

| | | | |
|-------|---|----|------------|
| 제목 |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14살 소녀들의 1년 교육청 인권센터도 인정한 '교사 성희롱' 학교는 징계 없이 땀질식 분리조치, 거짓 문서 발송까지 | 번호 | 3 |
| 출처 | 한겨레 | 날짜 | 2022.4.15. |
| 기사 주소 |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1861.html | 기자 | 엄 지 원 |
| 인권 범위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생들의 보호가 미흡함 | | |
| 기사 내용 |  <p>‘그 쌤’은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왔다. 실습이 많은 수업을 담당하는 ㄱ교사는 학생들을 불러 간식을 챙겨주거나 가까이 다가와 학습 내용을 알려주곤 했다. 담임을 맡은 학생들의 부모에게도 아이의 사소한 근황을 전해 주는 등 친근한 교사였다. “유치원 선생님처럼 신경을 써준다 생각하고 저는 정말 고맙게 받아들였어요.” 2022년 2월14일 전북 김제에서 만난 이 중 학교의 한 학부모는 말했다. “그 뒤에 제가 나중에야 깨달은 거죠. 내가 너무 사람을 믿었구나.”</p> <p>ㄱ교사와의 대화가 불편하다는 걸 아이들은 조금 더 빨리 알게 됐다. 부적절한 신체 접촉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찻찻한 느낌”과 “불편한” 기분을 가지면서도 친구들에게도, 어른들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내가 예민한가’ 고민</p> | | |

한 아이들은 그저 어떻게든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 스스로 노력해야 했다. 용기를 낸 한 학생(당시 중학교 2학년)이 몇몇 1학년 후배의 목소리를 들어 2021년 5월 학교 쪽에 피해를 제보하면서 알음알음 친구들끼리만 공유하던 비밀이 세상으로 나왔다.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가 조사를 시작한 것이다.

“불쾌했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 “무서웠다”

<한겨레21>이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인권센터의 이 학교 인권침해 사건 조사 결정문엔 13~14살 학생들이 겪은 혼란이 고스란히 녹아 있다. 첫 피해 신고 이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뤄진 전수조사 성격의 설문조사(2021년 6월9일)에서 아이들은 이렇게 고발했다. “(선생님이 수업 때 신체 접촉을 시도해) 기분이 썩 좋지 않았음.” “친구가 (선생님이) 무섭다고 자신이 겪은 일을 쓰지 말라며 울었음.” “내가 직접 본 것(신체 접촉)도 많고, 그걸 본 나도 불쾌했음.” “다른 학생이 (신체 접촉을 두고) 선생님께 불쾌하다고 말씀드렸으나 다음번에도 똑같은 일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직접 전해 들었음. 매우 기분이 안 좋았고 나도 당할까봐 무서웠음.” “선생님이 자꾸 주말에 만나자고 한다는 것을 들었음. 그 친구가 되게 당혹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났음.”

학생들이 쏟아낸 제보를 보면, 이 학교 학생 상당수는 최초 피해 신고가 이뤄지기 전 이미 1교사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이 직접 겪지 않은 경우에도 타인에게 듣거나 목격한 학생이 여럿이다. 학생들은 ‘1교사가 여학생들에겐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남학생들에겐 심한 체벌을 일삼았다’고도 입을 모았다. 나중에 인권센터의 조사에 응한 피해 학생 여럿에게서 “1교사가 남학생에게 ‘엎드려뻥쳐’를 시키거나 때리는 걸 봤다”는 증언이 비슷하게 반복됐다.

초기 조사에서 1교사는 잘못을 인정했다. 그는 2021년 6월16일 인권센터 면담조사에서 “학생들이 그렇게 느꼈다면 그게 맞는 것 같다”고 신체 접촉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사실확인서도 제출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모두 인지하였고 아이들에게 미안함이 많이 남습니다.” 태도는 나중에 돌변했다. 이듬해인 2022년 1월 학부모들의 요청으로 이뤄진 재조사에서 그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걸 다 ‘성희롱이다’라고 이야기하면 남교사는 학교생활을 할 수가 없다.” 그가 태도를 바꾼

반년 새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10명 넘게 피해 호소…학교는 딱 1명만 조사

1차 조사(2021년 6월) 당시 인권센터가 학교 쪽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고 1교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하면서 사건은 매끄럽게 해결되는 듯 보였다. 피해 학생의 부모들도 학교를 믿어보기로 했을 때다. “학교전담 경찰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니 고소하시는 게 좋겠다.’고 하는데 생각해보겠다고만 했죠. 고소는 너무 무섭고, 학교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생각했어요.”(피해 학생 부모 ㄴ씨)

그러나 학교 쪽의 대처는 교육부가 2020년 9월 내놓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처리 대응 매뉴얼’과는 거리가 멀었다. 10명이 넘는 학생이 피해를 호소했지만 교내 성고충심의위는 단 한 명의 피해자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피해 관계자들이 성고충심의위가 열렸단 사실도 모른 채 지내는 동안 학교 쪽은 1교사의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다. 학교 쪽은 ‘징계위원회의 결의사항’이라며 △1교사의 공개 사과 △2021학년도 담임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문서를 피해 학생 부모 일부에게 발송(2021년 8월)했다. 징계 여부를 의결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도, 징계 내용을 결정하는 징계위원회도 열리지 않은 것을 학부모들은 나중에야 알았다. 거짓 문서를 꾸며 발송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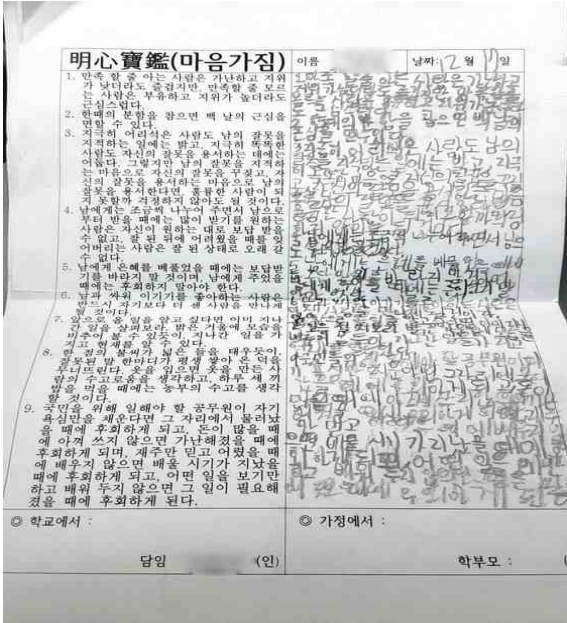
1교사의 ‘사과’도 없었다. 학교 쪽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사이 학생들은 새로운 피해를 맞닥뜨렸다. 학교 성폭력 매뉴얼엔 ‘가해자와 적극 분리해 최대 피해자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중학교 수업에서 배제된 1교사가 고등학교 수업을 위해 중·고교가 공유하는 실습실을 찾을 때마다 피해 학생들은 곳곳에서 그를 마주쳤다. “학교에서 마주친 1교사가 아이에게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말고 지나가라’거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한 일이 있다고 하더군요.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학부모 ㄴ씨의 설명이다. 청소년들에게 노골적인 2차 가해가 이뤄진 것이다. 나중에 학교 앞에서 1교사를 마주쳤던 학부모 ㄴ씨는 이렇게 말했다. “저도 그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심장이 두근거리더라고요. 아이들은 오죽했을까요?”

학교는 학부모의 마지막 믿음까지 저버리고

믿고 맡겨둔 학교 쪽의 대응에 실망한 학부모들은 결국 직접 움직이기 시작

| | |
|--|--|
| | <p>했다. 수사기관을 찾아 신고하고 상처받은 아이들을 지킬 방법을 찾으려 법 조문과 매뉴얼을 뒤졌다. 학교 쪽은 뒤늦게 복수의 피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고충심의위를 다시 열고 1교사를 2개월 직위해제 처분(2021년 11월) 했지만 끝내 '징계'엔 나서지 않았다. 직위해제는 일시적으로 보직을 맡기지 않는 것이어서 징계와는 성격이 다르다. 그즈음 다른 학부모들 사이에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니냐”는 말도 새어나왔다. 자녀가 직접 피해를 당하진 않았지만 피해 학생 부모들과 발을 맞춰온 학부모 2씨는 이렇게 말했다. “처음엔 저도 아이들이 오해했나 했어요. 그런데 사과 없는 그 선생님과 무책임한 학교를 보면서 이대로 두면 누구든 또 다른 피해자가 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p> <p>“학교는 학부모들의 마지막 남은 신뢰마저 지켜주지 않았다. 1교사의 직위해제 처분기간이 만료되는 2022년 1월이 다가오는데도 학교가 후속 대책을 내놓지 않자 학교를 옹호해온 학부모들마저 등을 돌렸다. 당시 이 학교 1·2학년 학생 학부모들은 한 명의 '열외'도 없이 마음을 모아 학교 쪽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학교는 대응 주체로서 절차에 맞게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마땅하나 미흡했으며, 이로 인해 학부모 사이에 오해와 역측이 발생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었습니다.” 내용증명에서 이들은 △1교사와 학생 분리 △해당 과목 기간제 교사 채용 등을 요구했다. 그제야 학교는 “피해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 점 사과드립니다”며 1교사의 휴직 소식을 학부모들에게 전했다.</p> <p>그리고 2022년 3월, 학부모들의 요구로 재조사한 인권센터의 결정문이 나왔다. 이 사건을 살핀 전북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피해 학생들이 피해가 지속되는 동안 피신청인(1교사)과 종전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지속될 거라는 불안감과 두려움이 상당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지 못한 자괴감과 분노,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해 다른 학생에게도 피해를 입혔다는 자괴감 등도 상당했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피신청인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여, 피해 학생들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밝혔다. 인권센터 관계자는 “2021년 이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징계 권고를 학교 쪽이 이행하지 않아 지역 교육계에 큰 혼란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올해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사학의 징계를 지도·감독할 교육청의 권한이 강화된 만큼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p> |
|--|--|

| | |
|-----------------------------|---|
| | <p>제때 진정한 사과와 분리만 했어도 경찰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진정성 있는 사과와 적절한 분리조치만 제 때 이뤄졌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학부모들은 입을 모았다. 그러나 피해 학생들은 사과 한 번 받지 못한 채 14살의 1년을 견뎌다. “아이가 ‘엄마, 어른들이 다 잘못된 건데 왜 내가 그걸 책임져야 해?’ 하더라고요. 맞는 말이더군요.” 엄마는 이 싸움을 끝낼 수 없다. 엄마들이 지켜보지 않으면 학교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테니까. 남은 것은 1교사의 징계와 피해자 회복이다.</p> <p><한겨레21>은 이 학교 교장과 가해자로 지목된 1교사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를 남겼지만, 양쪽 다 연락을 받지 않았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김제의 한 중학교에서 교사의 학생들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 등에 대해서,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인권센터)가 조사를 시작 - 전북교육청 인권센터가 학교 쪽에 성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사건을 조사하고 1교사의 징계 절차를 진행하라고 권고함 - 그러나 학교 쪽은 1교사의 징계 없이 사안을 마무리했고, 교사의 사과도 없었다.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p>학생들에게 성희롱을 한 교사에 대한 징계와 학생들의 보호가 미흡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p>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p>충북 스쿨미투 지지모임 “교육감 사과…1인시위 종료” / (연합뉴스 2022.4.25.) https://www.yna.co.kr/view/AKR20220425104000064?input=1195m </p> |
| <p>타시도 사례</p> | <p>제천성폭력상담소, 청소년 위한 ‘찾아가는 성인권 교육’ 진행 / (충북 브레이크뉴스 2022.4.07.) https://www.breaknews.com/885480</p> |

| | | | |
|-------|--|----|-----------|
| 제목 | 일기 안 쓴 초1에 명심보감 필사, 학대?…지자체·교육청 판단 갈렸다. | 번호 | 4 |
| 출 처 | 머니투데이 | 날짜 | 2022.4.08 |
| 기사 주소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40819200940122 | 기자 | 이영민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을 취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1조), - 사생활의 비밀(정보)을 보호 받을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4조), -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헌법 제12조) | | |
| 주제 | -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제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 | |
| 기사 내용 |  <p>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교사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이 나왔다.</p> <p>동일한 사항을 두고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해당 지자체(광주 남구)와는 상반된 결정이다.</p> | | |

| | |
|--|--|
| <p>8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초교 1학년생의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p> <p>소위원회는 해당 학교장에게 경고조치와 더불어 인권관련 교육 이수, 상벌 점제 운영 현황 점검, 필요할 경우 시정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p> <p>소위원회는 교사가 피해 학생을 포함한 학생들의 점심시간을 제한, 보충지도를 실시한 점은 생활교육의 일환이더라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해 인권을 침해한 사례라고 결론지었다.</p> <p>앞서 지난해 12월 광주 한 초등학교 학부모 A씨는 아들 B군(8)이 담임교사에게 6개월간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금지 처분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명심보감을 한자씩 옮겨 적는 '머쓱이' 처벌을 받았고, 점심시간 이후에는 화장실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했다는 주장이다.</p> <p>학교 측은 B군이 미술 준비물을 가져오지 않았고, 일기를 쓰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입장문에서 "감금이 아니라 학습 습관·생활 규범 내면화를 위한 보충 지도였고,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를 도입했다"고 주장했다.</p> <p>1차 수사를 진행한 남부경찰은 광주경찰청으로 해당 사건을 이관했고, 광주경찰청은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현재까지 수사하고 있다.</p> <p>광주시교육청 학생인권 구제 소위원회가 인권침해 결론을 내린 것과 달리 관할 지자체인 남구는 동일 사항에 대해 정서적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해 시교육청과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p> <p>지난 2월24일 남구 아동행복과장 주재로 열린 통합사례판단 회의에서 아동전문기관 관계자, 상담심리학 대학교수, 아동학대예방 경찰관, 남구청 직원 등 총 6명은 만장일치로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의견을 모았다.</p> | |
|--|--|

전라북도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6.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 1) 활동일시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4) 연구원 : 총 2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 |
|--------------|---|
| | <p>이번 사례는 아동학대가 아니라 일반사례이자 적절한 학교 측의 교육지침이며 참고인 학생 6명 모두 교사의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데 따른 것이다.</p> <p>특히 교사가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명심보감을 필사시키지 않아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지역 내 다른 학교에서도 이 같은 행위를 교육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부가적인 판단 근거로 작용했다고 남구는 설명했다.</p> |
| 내용분석 및 쟁점사항 | <p><내용분석></p> <p>일기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점심시간 교실 밖 외출을 제한하고 명심보감을 필사시킨 교사의 행위가 '인권침해'라는 광주시교육청의 판단.</p> <p><쟁점사항></p> <p>① '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휴식권',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 여부</p> <p>②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의 충족 여부</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과제를 하지 않은 학생들에 대한 교사의 제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신중해야 할 것이다.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일기 안 썼다고 초1에 명심보감 필사...교육청 "인권침해"</p> <p>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20408/112766377/1 (동아일보 2022.4.08.)</p> <p>'머쓱이 으쓱이' 교사에 광주교육청 '인권침해' (오마이뉴스 2022.4.20.)</p> <p>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27992</p> |
| 타시도 사례 | <p>점심시간에 초등 1학년에 '명심보감' 쓰기 강요...광주교육청 '인권침해' (한겨레 2022.4.10.)</p> <p>https://m.hani.co.kr/arti/area/honam/1038247.html</p> |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인권 내용과 쟁점 파악 - 전국 기사와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4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4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4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 시도 유사사례 및 타 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2 |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1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 1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1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 1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2 | 4 |

4.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5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7건 (타시도 3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제38조 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등에서 나타났다.

○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관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맘껏 놀고,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타 시도 사례에서는 C 교육청에서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C 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는 내용이다.

5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 목 |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 번 호 | 5 |
| 출 처 | 새전북신문 | 기사 날짜 | 2022.5.24 |
| 기사 주소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46446 | 기자 | 한선희 |
| 인권 범위 | - 휴식을 취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1조) | | |
| 주제 | - 아동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 형성의 보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터와 기관 등과 같은 시설이 필요하다. | | |
| 기사 내용 | <p>[오늘과 내일]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p>  <p>올해는 어린이날 제정 100주년 되는 해입니다. 이를 기념하여 우리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5월 2~4일까지 우리나라 “전통놀이터”를 개장하였습니다. 3일 동안 아동 150여명과 온 가족이 세대를 넘나드는 놀이를 경험하였습니다. “딱지치기, 사방놀이, 비석치기, 고무줄놀이, 달고나, 공기놀이”등 전통놀이 13가지를 배우고 즐기며, “재활용품을 활용한 홍보간판 만들기, 일회용품 없이 음료 마시기”와 같이 기후환경을 지키기 위한 작은 행동을</p> | | |


| |
|---|
| <p>실천하고, “아동권리협약 보물찾기”를 통해 아동 권리를 놀이로 배워보았습니다.</p> <p>“어린이날”을 만드신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최초 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색동회”를 중심으로 아동인권운동의 효시가 되었습니다. 아동문학가이기도 하셨던 선생님은 어린이라는 단어를 1921년 공식화하셨고 1923년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제정하여 본격적인 아동문화운동을 펼치셨습니다. 이때는 시기적으로 식민지 지배 시대로서 “장유유서” “효”사상의 규범이 지배적인 시기였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아동과 아동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지금 현재의 어린이날은 1956년 공식적으로 5월 5일로 제정되었습니다.</p> <p>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동권리에 대한 국제적인 활동보다 앞선 것으로 우리나라의 아동권리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였고 아동의 조화로운 전인발달을 위한 기초적인 조건을 마련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24년 국제연맹(현 UN)에서 아동을 위한 기초사항의 보장, 사회적 존재로서의 성장과 유지를 위한 교육권제공, 노동 착취로부터의 보호 등을 다루고 있는 제네바선언보다 더 확장된 개념의 어린이공약이 1923년 발표되었고 “어린이를 재래의 윤리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인격적 예우를 허하게 하라”, “어린이를 재래의 경제적 압박으로부터 해방하여 만 14세 이하의 그들에게 대한 무상 또는 유상의 노동을 폐하게 하라” “어린이 그들이 고요히 배우고 즐거이 놀기에 족한 각양의 가정 또는 사회적 시설을 행하게 하라”가 그 내용입니다. 성인 중심의 전통적인 사회적 풍토를 변화시켜 아동들에게도 존댓말 쓰기 운동을 실시하고 아동의 존엄성, 지위를 존중함으로써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했다는 것은 거대한 업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p> <p>소파 방정환 선생님께서 어린이날을 제정하시고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을 읽어보면 지금 우리 시대의 어른들이 어린이를 대하는 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산보와 원쪽(소풍),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달라는 것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p> <p>최근 우리나라 아동 학업성취도는 세계적으로 최상위 수준이고, 물질적으로 풍족하여졌으나 사회관계를 만들고 유지되는 기회는 축소되어 사회성과 창의성 발달에 중요한 사회관계 형성의 기회는 줄어들었습니다(2018년 아동실태조사). 놀 권리에 대한 균형 있는 인식이 미흡하여 아동이 부모와 함께</p> |
|---|

| | |
|----------------------|--|
| | 보내는 시간은 하루 평균 48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OECD 국가 평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하루 2시간)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와 불안에 비해 놀이 및 사회적 관계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과도한 학구열과 학생은 놀면 안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분석되고 있습니다(아동보고서설문 2018.). 아동이 전인적인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휴식과 놀이, 사회적 관계형성 기회보장 (인지·정서발달, 창의성·사회성발달)이 필요하며, 놀고 싶을 때 놀고 쉬고 싶을 때 쉴 수 있는 세상에서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100년 전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 만한 놀이터와 기관 같은 것을 지어 주시오” 지금도 컷가에 울립니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아 아동의 전인적 발전을 위해서는 가족들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이는 사회풍토를 만들고, 아동이 놀고 쉴 수 있는 놀이시설 등이 필요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 전북도교육청이 전북도, 전주시, 각 군 등 지자체와 협의하여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소재지 주변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의 휴식 및 놀이 환경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시킬 필요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놀며 쉬며 배우며...‘우리들만의 아지트’ 어때요? (한겨레, 2022.05.17.) https://m.hani.co.kr/arti/society/schooling/1043114.html 어린이가 바라는 공약, 나이제한 놀이터, 노키즈존...“맘껏 놀 곳이 없어요” 하소연 (국제신문, 2022.05.10.)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511.22012003188 |
| 타 시도 사례 | 서울 어린이 놀이환경 전반 ‘업그레이드’(환경과 조경, 2022.05.02.) https://www.lak.co.kr/news/boardview.php?id=13430 전국 첫 지붕 있는 놀이터 추진...“아이들 놀 권리 보장위해 사업 확충해야” (매일신문, 2022.05.06.)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0616105476130 |

| | | | |
|-------|---|-----|-----------|
| 제 목 | 어린이가 본 어린이 인권... “안전하게 놀 권리 아쉬워” | 번 호 | 6 |
| 출 처 | EBS 뉴스 | 날 짜 | 2022.5.05 |
| 기사 주소 |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12389/N#none | 기 자 | 이 상 미 |
| 인권 범위 | - 안전에 대한 권리(인권조례 제10조) | | |
| 주제 | - 어린이들이 맘껏 놀고, 안전하게 자라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 | | |
| 기사내용 | <p>어린이가 본 어린이 인권... "안전하게 놀 권리 아쉬워"</p>  <p>어린이날뿐 아니라 평소에 더 행복하고 더 존중받고 싶다는 우리 어린이들의 바람입니다. 최재복 어린이가 오늘 하루 EBS의 특별한 일일 기자가 되어, 어린이 인권에 대한 고민과 바람을 전해주었습니다. [리포트] 제가 직접 친구들과 만든 동화책입니다. 학원에 가는 대신, 놀이터에서 놀고 싶은 주인공이 나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학원을 많이 다니는 거야? 놀지도 못하고 속상해" 학교에서 여섯, 일곱 시간씩 공부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 수업을 마치면, 우리는 대부분 학원에 갑니다. 집에 오는 시간이 밤 10시를 넘길 때도 있습니다. 사실, 누구 위해 이래야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는 생각도 듭니다.</p> | | |

| | |
|--------------------------------|--|
| | <p>인터뷰: 최새봄 6학년 / 전주 효천초등학교</p> <p>"저도 그렇고, 제 주변 친구들도 그렇고, 학원이 기본적으로 끝나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사이더라고요. 부모님의 욕심으로 학원에 다니는 일 없이, 자기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놀 권리가 좀 많이 지켜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p> <p>우리 건강을 위협하는 건 공부만이 아닙니다.</p> <p>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길은 얼마나 안전할까요?</p> <p>커다란 가게 홍보 풍선에, 걸려 넘어지기 쉬운 전선까지, 위험한 물건 투성입니다.</p> <p>인터뷰: 최새봄 6학년 / 전주 효천초등학교</p> <p>"학생들이 이렇게 다니는데 조형물들이 너무 많아서 길을 가는데 막히고, 걸려 넘어질 수가 있어서 많이 불편했어요. 직접 눈으로 봐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요."</p> <p>학교나 놀이터 주변에서 빠르게 달리는 자동차 때문에 놀랄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p> <p>하지만 밤늦게까지 학원에 다니는 일상도, 위험한 등굣길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p> <p>그래서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고, 신나게 놀고,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했습니다.</p> <p>인터뷰: 서지원 간사 / 굿네이버스 전북지역본부</p> <p>"아이들이 주체가 되어서 자신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본인들이 찾아 나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도 자신의 권리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어른들이 미처 보지 못하고, 몰랐던 아동들이 느끼고 있는 권리를 전달할 수 있었던 부분이어서..."</p> <p>어른들도 한때는 모두 어린이였습니다.</p> <p>우리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모든 어린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존중하면 좋겠습니다.</p> <p>EBS뉴스 최새봄입니다.</p> |
| 내용분석 및 쟁점사항 | <p>- 어린이날을 맞아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EBS 일일기자로서, 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대되고, 등하교길 및 일상생활 공간의 안전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리포트를 한 내용</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특히 초등학생들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도내 교육기관에 아동을 위한 키즈카페에 대응하는 저렴한 비용 또는 무상으로 운영되는 초등학생을 위한 놀이카페를(elementary cafe) 설치하는 방안 검토 필요</p> |

| | |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횡단보도도 없이 등교"...어린이가 위험하다 (KBS뉴스, 2022.5.0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56581</p> <p>어린이 안전사고, 1~3세때 제일 많이 발생한다. (베이비뉴스, 2022.5.24.)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5306</p> |
| 타시도 사례 | <p>전국 첫 지붕 있는 놀이터 추진..."아이들 놀 권리 보장위해 사업 확충해야" (매일신문, 2022.5.06.) http://news.imaeil.com/page/view/2022050616105476130</p> <p>인천중구시설관리공단, 영종국제도시 內 어린이놀이시설 65개소 소독 실시 (영종뉴스, 2022.05.17.) http://www.yeongjo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8884</p> <p>세종 도시교통공사,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 버스 교육 재개 (충청신문, 2022.05.28.)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13113</p> <p>여수시와 여수소방서 합동,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학당' 진행 (현장뉴스, 2022.05.29.) http://www.field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4140</p> |

| | | | |
|-------|--|-------|-----------|
| 제 목 | 전주시, 고위험군 아동 마음건강까지 챙긴다. | 번 호 | 7 |
| 출 처 | 전북일보 | 기사 날짜 | 2022.5.25 |
| 기사 주소 | http://www.ijan.kr/article/20220525580356 | 기자 | 강 정 원 |
| 인권범위 | 건강에 관한 권리(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아동·청소년들이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 | | |
| 기사 내용 | <p>전주시, 고위험군 아동 마음건강까지 챙긴다</p>  <p>전주시와 아동센터가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p> <p>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5일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마음쑥쑥 지역튼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p> <p>이날 협약은 양 기관이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스트레스 완화 및 자존감 향상을 통해 건강한 일상생활 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추진됐다.</p> <p>최근 교육부가 발표한 학생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 초등학교의 43.2%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등교 수업차질과 대외활동 감소 등으로 인해 학업 스트레스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약 26%의 초등학교생들이 우울감 및 불안감을 나타내고, 31.5%가 대인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p> | | |

| | |
|---------------|--|
| | <p>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p> <p>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전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한 뒤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집단프로그램(△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정서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p> <p>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는 향후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주관하는 '마음쑥쑥 지역튼튼' 사업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연합회 소속 지역아동센터 67곳에 사업 홍보 및 안내 역할을 수행하기로 했다.</p> <p>김신선 전주시보건소장은 "지역 내 아동·청소년들에게 건강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을 통해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킬 것"이라고 전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p>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주시지역아동센터연합회와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 프로그램인 '마음쑥쑥 지역튼튼'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주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정신건강검진을 통해 고위험군을 발굴한 뒤 상담 및 사례관리, 의료비 지원, 집단프로그램(인지행동 치료 프로그램, 자존감 증진 프로그램, 정서관리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계획임</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내 초·중등학교에 정신건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를 지정하고, 학생 상담 및 지원을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 담당 교사가 아동·청소년 발달과 상담에 관한 전문지식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지자체의 정신상담센터 등과 협조를 강화하여 초·중등학생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건강증진원-굿네이버스, 아동 건강증진 위한 업무협약(의학신문, 2022.5.18.)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760</p> <p>장수군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실시 (전북도민일보, 2022.5.11.)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712&sc_</p> |

| | |
|--------|--|
| | section_code=S1N1 |
| 타시도 사례 | <p>적십자 서울시지사, 코로나19로 상처받은 아이들의 마음건강 돌본다. (TV서울, 2022. 5. 26) http://www.tvseoul.kr/news/article.html?no=44577</p> <p>상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캠페인 ‘HAND(Have A Nice Day)’ 운영 http://www.naewoe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07357</p> |


| | | | |
|-------|--|-----|-----------|
| 제 목 | 전북도교육청,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 번 호 | 8 |
| 출 처 | 전북도민일보 | 날짜 | 2022.5.10 |
| 기사 주소 |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81540 | 기자 | 이휘빈 |
| 인권 범위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인권조례 제8조) | | |
| 주제 | - 양성평등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을 시작 | | |
| 기사 내용 |  <p>전북도교육청이 10일 오후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업무담당자 사전협의 회를 갖고 양성평등 학교문화 조성·확산을 위한 중점학교 운영 및 지원 방 안을 협의했다.</p> <p>양성평등 중점학교는 교실 속 성평등 실천문화를 조성하고 교육과정과 연 계하여 다양한 체험 중심의 양성평등교육을 활성화하는 것이 운영 목적 이다.</p> <p>올해 지정된 학교는 소양초등학교, 고산중학교, 전주만성중학교, 푸른꿈 고등학교 등 4개 학교이다.</p> <p>이들 학교에는 각 700~900만 원의 예산이 지원되어 양성평등한 교육환경 구축과 교육과정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 활동, 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연수, 가정과 연계한 학부모 연수 등 학생과 교사, 가정이 함께하는 프로그 램과 운영사례 발굴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실천하게 된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은 존중과 배려가 있는 교실 인권을 위해서도</p> | | |

| | |
|--------------------------------|--|
| | 꼭 필요하다”면서 “중점학교를 시작으로 학교와 가정과 지역사회에 이르기까지 성인지각수성이 향상되고 양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p><내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교육청 4개 학교를 양성평등 중점학교 운영 <p><쟁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의 중점학교 운영이 양성 평등 문화 확산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제도인지 여부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00~900만 원의 예산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 확대가 필요 - 전남도교육청이 개발한 성인지교육극 샌드아트와 영상 연계 양성평등교육지도서 'LOVE MYSELF: 함께하는 나다움을 찾아가는 여행'에 관한 자료 입수 및 분석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남고생들 “학교선 이젠 남자가 역차별… 여자대학 왜 필요한가.” (조선일보, 2022.5.18.)</p> <p>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5/18/AZY6GAO4HBHMDJAFMAHSXW4HEM/</p> |
| 타 시도 사례 | <p>전남교육청, 양성평등교육… 인권·다양성 기반 다진다 (천지일보, 2022.5.21.)</p> <p>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983579</p> |

| | | | |
|--------------|---|-----------|-----------|
| 제목 | 인권위 “기숙사 생활 고등학생 휴대전화 금지, 통신 자유 침해” | 번호 | 9 |
| 출처 | 서울신문 | 날짜 | 2022.5.11 |
| 기사 주소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12009003&wlog_tag3=naver | 기자 | 신용아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생활의 자유(학생인권조례 제11조) -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통신의 자유(헌법 제18조), 과잉금지의 원칙(헌법 제37조 제2항)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숙사 거주 학생의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기숙사 생활규정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고 헌법상 통신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 | |
| 기사 내용 | <p>인권위 “기숙사 생활 고등학생 휴대전화 금지, 통신 자유 침해”</p>  <p>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전면 금지하는 행위는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기숙형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일요일 일부 시간대에만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하고 노트북·태블릿PC 등 전자기기를 지정된 와이파이 구역 이외의 장소에서 사용하면 한 달간 기기를 압수하는 등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에 학교 측은 학생이 요구하면 담임교사의 허가를 받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고 교내 공중전화도 사용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 전자기기를 와이파이 구역 외 장소에서 사용하면 학업과 무관하게 쓸 소지가 많다는</p> | | |

| | |
|--------------------------------|---|
| | <p>점 등을 고려해 이용을 금지했다고 했다.</p> <p>인권위는 학교 내에서 학생의 휴대전화·전자기기 소지 및 사용을 일과 시간 이후 기숙사 생활에서도 전면 제한하는 것은 헌법 37조 2항에 따른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헌법 10조(행복추구권)와 18조(통신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욕구와 행동을 통제·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교육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했다.</p> |
| 내용분석 및 쟁점사항 | <p>국가인권위원회는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 전면 금지는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행복추구권과 통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경북의 한 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에 거주하는 학생의 휴대전화 및 전자기기 소지·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기숙사 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함</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시사점> 초·중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이용 등 규제 정책의 정당성 및 허용 범위</p> <p><대안제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학교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의 전자기기 소지·이용을 전면 금지하기보다는, 기숙사 공동체 내에서 토론을 통해 규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p>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인권위 “고교 기숙사에서 휴대전화 사용 금지는 통신 자유 침해”(KBS, 2022.05.1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60297&ref=A</p> <p>권리 찾는 10대가 세상 바꾼다…인권위 진정 5년 새 2배 늘어(서울신문, 2022.05.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525500211&wlog_tag3=naver</p> <p>인권위 “고교 기숙사생 과도한 외출 제한, 행동자유권 침해”(동아일보,</p> |

| | |
|-------------------|--|
| | <p>2022.05.0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506/113262444/2</p> |
| 타시도 사례 | <p>기숙사 내 휴대전화 이용 제한한 고등학교…인권위, “인권 침해”(경향신문, 2022.05.11.) https://m.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205111200011</p> |

| | | | |
|-------|---|----|-----------|
| 제목 | 충남교육청, 촘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번호 | 10 |
| 출처 | 한국사회복지저널 | 날짜 | 2022.5.2. |
| 기사주소 | http://www.ksw-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7028 | 기자 | 정세연 |
| 인원 범위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헌법 제1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4조 제1항, 학생인권조례 제8조),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헌법 제31조 제1항,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4조) | | |
| 주제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 | | |
| 기사내용 | <p>충남교육청, 촘촘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안전망 구축</p>  <p>코로나19로 인해 장애학생의 고립이 가속화되고, 학대 및 가정폭력, 생활고로 인한 위기 가정이 증가해 학교 안팎으로 취약학생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p> <p>이에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p> <p>현재 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와 14개 시·군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을 조직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 학교현장 방문 ▲인권침해 가해·피해학생 특별관리 및 지원 ▲인권침해 고위기 더봄학생 관리</p> | | |

| | |
|---------------|--|
| | <p>▲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연수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위기 가정 밀착 지원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을 저해하는 문제행동 중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작년 대비 인권침해 피해 학생에 대한 심리·정서 회복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하여 상담치료비를 신청 학생 1인당 1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p> <p>이와 관련해 교육청에서는 충남 장애학생 인권지원단과 도내 특수학교 교감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했으며, 연수는 ▲202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매뉴얼 안내 ▲장애학생 위기 행동 지원 ▲인권보호 관련 법규 이해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진행돼 인권지원 담당 인력의 전문적 역량 강화를 도왔다.</p> <p>김지철 교육감은 “장애학생들이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촘촘한 회복 지원이 필요하다.”며, “인권지원단의 활성화를 통해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p><내용 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남교육청은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의 활동을 강화하고, 장애학생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인권보호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힘 <p><쟁점 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 강화 방안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한 실태 조사 및 예방 교육 등 도교육청 차원에서 정기적인 점검 및 지도 업무를 정례화 할 필요성이 있음 <p><대안 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도내 특수학교 및 초·중등학교 장애학생 교육권 보장을 위한 실태 점검 및 교육 등을 정례화 할 필요가 있음 |

| | |
|--------------------|--|
| | - 특수교사 인원을 늘리기 위한 예산확보 노력 필요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장애학생 인권은 우리가 지켜요"(세종의 소리, 2022.5.1.) www.sjsori.com/news/articleView.html?idxno=50539</p> <p>생애주기별 장애인교육권 '문제 투성이'(에이블뉴스, 2022.5.18.)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518172248669250</p> <p>예산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위촉(충청신문, 2022.5.3.) http://www.dailycc.net/news/articleView.html?idxno=709393</p> <p>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정기 현장지원(대전일보, 2022.5.22.)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05754</p> |
| 타시도 사례 | <p>특수교육 확대 무게 둔 제주교육감 후보들...장애인 교육정책은?(제주의 소리, 2022.5.24.) https://www.jejujori.net/news/articleView.html?idxno=403911</p> <p>강원도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운영(원주투데이, 2022.5.2.) http://m.wonju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6063</p> <p>인천 장애학생 교육권리 보장 7개 요구안 발표(에이블뉴스, 2022.5.6.) https://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20&NewsCode=002020220506143321909839</p> |

| | | | |
|-------|---|----|------------|
| 제목 | ‘학생인권조례’ 충남교육감 선거 뜨거운 감자로 | 번호 | 11 |
| 출처 | 충청투데이 | 날짜 | 2022.05.04 |
| 기사 주소 |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1511 | 기자 | 김중곤 |
| 인권 범위 | - 학생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의 자유 등 | | |
| 주제 | - ‘학생인권조례’가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 |
| 기사 내용 | <p>오는 6·1 지방선거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충남 학생인권조례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는 모양새다.</p> <p>임기 때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한 김지철 현 교육감이 3선 도전을 하며 조례 폐지에 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도전자들이 수정 또는 폐지 견해를 보이면서다.</p> <p>김 교육감은 3일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평가를 묻는 물음에 "폐지할 이유가 없다"며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시도교육청 관할 학교에선 학생 생활지도가 편하고, 있는 지역에선 어려운 것도 아니지 않은가"라고 반문했다.</p> <p>‘학생 인권에 힘쓴 반면, 교사의 인권침해 사례도 있다’는 물음엔 "교권보호조례도 만들었다. 학교 현장의 교권침해가 학생인권조례 때문인지는 분석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p> <p>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가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한 조례로, 충남교육청은 2020년 6월 공포해 시행 중이다.</p> <p>김 교육감이 충남교육을 이끌면서 제정, 시행한 것인데 학생의 권리를 지나치게 보장해 교사의 교권 보호와 학생의 인성 교육을 어렵게 한다는 지적을 불러일으킨 조례다.</p> <p>이에 대해 이병학 예비후보는 이날 출마 기자회견에서 학생인권조례를 공</p> | | |

| | |
|---------------|--|
| | <p>개적으로 비판했다.</p> <p>이 예비후보는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나 다른 권리와 의무는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교사 학생, 학부모의 권리와 의무를 담은 교육가족조례를 대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 외에 다른 예비후보들도 학생인권조례에 관해 목소리를 내고 있어 이번 충남교육감 선거의 화두로 부상할지 관심이 있다.</p> <p>김영춘 예비후보는 "취지는 마땅한데 학교 실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조례가 매우 세세한데 간소화해야 학교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조례 수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4일 충남도청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 예정인데, 이때 학생인권조례 수정에 관한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힐 것으로 보인다.</p> <p>김병곤 예비후보도 이날 천안시청에서 중도 실용주의 선언을 하며 "학생인권조례에서 학생에 대한 체벌 금지와 복장 자유화는 찬성한다. 그러나 야간자율학습 및 보충수업 금지, 두발 자유화는 반대한다"고 의견을 냈다.</p> <p>이같이 찬성, 부분 수정, 반대 등 후보 간 입장이 상이하면서 학생인권조례는 향후 충남교육감 선거에서 지속적으로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항 | <p><내용분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6월 1일 치러질 충남 교육감 선거에서 학생인권조례의 수정 및 폐지 여부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 - 교육감 후보자의 이념적 성향이 학생인권의 측면에서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 <p><쟁점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에 관한 상반된 의견의 존재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시사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자율성을 확대했으나 다른 권리와 의무는 |

| | |
|---------------|--|
| | <p>소홀히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어 기존의 학생인권조례를 수정 및 폐지하려는 시도가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 6월 1일에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약에서 충청남도를 비롯한 많은 시·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육권과 같은 다른 권리들과 충돌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p><대안제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도내의 일부 비판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이에 대한 답변서(Q&A)를 정리할 필요가 있음 - 학생인권보장과 교사의 교육 및 지도활동이 위축되지 않는 균형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중요함 - 나아가 전북도 학생인권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만장일치제에서 다수결제로 개정할 필요성도 있음. 위원 1인의 반대만 있어도 의사결정을 못하는 시스템은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학생인권조례의 적용에 방식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충남교육감 후보자 법정토론... '충남 학생 인권 조례' 입장차 뚜렷 (KBS 뉴스, 2022-05-2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6/0011270405</p> <p>진보교육감 전성시대 막 내리나 (경향신문, 2022-05-28) https://www.khan.co.kr/politics/election/article/202205281436021</p> |
| 타 시도 사례 | <p>임태희 경기도교육감 후보 "교권과 학생인권은 대척점 아냐" / (뉴스웍스, 2022-05-28) https://www.newsworks.co.kr/news/articleView.html?idxno=599273</p> <p>박선영 서울시 교육감 후보 "학생인권조례 폐지할 것"...10대 공약 발표 / (뉴스시스, 2022-05-2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525_0001884628&cID=10201&pID=10200</p> |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연대 출범...조전혁 “학생인권조례 폐지” /
(뉴스핌, 2022-05-17)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20517001088>

대전교육감 후보자 4명중 3명 “학생인권 조례제정 반대” /
(TJB, 2022.05.19.)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518010004807>

부산 청소년단체, 교육감 후보에 ‘학생인권 보장 정책’ 요구 /
(부산일보, 2022-05-23)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2052217425693824>

전라북도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7. 1.

- 1) 활동일시 : 2022년 6월 1일 ~ 6월 30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6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6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시도 유사사례 및 타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i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1 |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5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 | | |
| |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급식에 대한 권리 | | | 1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1 | |
|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7 | 1 |

4.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6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7건 (타시도 4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4조 급식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다. 교사가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에 의해 학교 내 안전한 학습 환경이 위협받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다.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생생활지도조례의 제정, 관련 교육법 개정이나 학생생활지도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생생활 지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타시도의 경우, 제주의 A여고의 일부 교사의 성차별적 폭언 및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의 증언이 사실로 나타났다. 몇몇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학교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학교 전반의 문제이다.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및 학생인권기구,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등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 제기된다.

6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상상 초월 학폭’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차 버린 교실 | 번호 | 12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0.06.21 |
| 기사 주소 | https://www.jjan.kr/article/20220621580047 | 기자 | 송 승 욱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흉포화 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함. | | |
| 기사 내용 |  <p>“사실 쉬쉬할 뿐이지 일선 학교 현장에서 이런 일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이번에는 담임이 제가 어떻게든 버텼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 주셨고 언론에 노출되면서 이슈화가 된 것일 뿐 학생의 욕설이나 폭행, 협박 등이 만연한데도 이렇다 할 대응을 할 수 없</p> | | |

| | |
|--|--|
| | <p>익산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 학생 폭행과 담임교사·교장에게 욕설은 기본에 소란 제지하면 아동 학대라며 경찰 신고</p> <p>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 열렸지만 뽀족한 대안 없이 2차 가해 논란만 커져 '학부모 공분'</p> <p>해당 담임교사, A군 사태 일련의 과정 유튜브로 제작해 알리며 근본적 문제 해결 위한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 촉구</p> <p>는 게 현실입니다. 학생 생활지도법과 조례 제정이 시급합니다.”</p> <p>익산의 한 초등학교가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찼다.</p> <p>5학년 A군의 상상을 초월하는 일탈 때문이다.</p> <p>학생 폭행, 담임교사나 교장에게 욕설은 기본이고 수업 방해나 협박, 심지어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p> <p>이에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불안을 호소하자 해당 학교는 긴급조치 일환으로 출석정지를 내렸지만, A군이 익산지역 맘카페에 담임교사를 비방하는 글을 올리고 다시 학교에 가겠다고 엄포를 놓자 학교 측이 학생 보호를 위해 현장학습을 편성해 대피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p> <p>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태 해결은 불투명한 상태다.</p> <p>지난 14일 익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과정에서 2차 가해 논란만 더 커졌을 뿐이다.</p> <p>학부모들은 아이를 학교에 보내기 무섭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대응을 지적하는 글들이 익산교육지원청 계</p> |
|--|--|

| | |
|--|-----------------------|
| <p>시판을 도배하다시피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p> <p>지난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게시된 글만 250여건에 달한다.</p> <p>아울러 다수의 학생들과 교사의 인권을 보호해 달라는 목소리도 빗발치고 있고 근본적인 대안으로 학생생활지도법과 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여론도 비등하다.</p> <p>이에 해당 담임교사는 A군 사태와 관련해 일련의 과정들을 유튜브로 제작해 알리며 학생생활지도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p> <p>담임교사는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 해당 아이의 학급을 맡기로 했는데, 사흘 만에 일이 터졌다. 아동학대나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징계를 받을까 봐 두려워 나를 보호해 주려는 다른 많은 아이들이 협박 받고 있을 때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지 못한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아이들에게 미안하다”면서 “대다수 아이들의 교육을 받을 권리와 교사의 수업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조례가 절실하다”고 호소했다.</p> <p>또 “결국 이번 사태와 관련해 학교 감사가 실시될 텐데 그간의 경험에 비춰 보면 법조인이 아닌 교사의 업무 처리를 꼬투리 잡아 결론의 정당성을 무효화하고 열심히 고생한 학교폭력 담당교사를 징계 처분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 학폭 담당교사를 기피하게 되는 또 다른 문제를 낳게 된다.”고 강조했다.</p> <p>이어 “심의위도 절차대로 하고 있다는 입장이겠지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정해진 절차 외에 정서적인 측면에서 피해 호소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위로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사안을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p> | <p>내용 분석 및</p> |
|--|-----------------------|

| | |
|--------------|---|
|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의 한 초등학교 5학년 A군이 학생을 폭행하고 담임교사와 교장에게 욕설을 하였으며, 소란을 제지하면 ‘아동 학대’라며 경찰에 신고하였음 - 익산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2차 가해의 논란만 커져서 학부모들의 공분을 삼 - 해당 담임교사는 A군 사태 일련의 과정을 유튜브로 제작해서 알리며,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학생생활지도조례를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홍포화 되고 있음 - 교사가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에 의해 학교 내 안전한 학습 환경이 위협받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음 -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생생활지도조례의 제정, 관련 교육법 개정이나 학생생활지도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p>교총, “불안과 공포로 가득 찬 교실, 잘못된 인권 의식 바로잡아야” / 전북일보 (2022.06.22.) https://www.jjan.kr/article/20220622580238</p> <p>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한국교총 “잘못된 인권의식” / 노컷뉴스 (2022.06.22.) https://www.nocutnews.co.kr/news/5775842</p> <p>초등생 한명에 학교 시스템 붕괴 ‘교사는 결국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p> |

| | |
|---------|--|
| | <p>가’ /전북일보 (2022.06.23.) https://www.jjan.kr/article/20220623580266</p> <p>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달라” / 오마이뉴스 (2022.6.2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0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p> <p>때리고 욕하고 위협하고 ‘무서운 초등생’ .. 학생도 교사도 별별 / 에듀프레스(2022.06.18.)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69</p> <p>막무가내 초등학생...학교는 ‘전전궁궁’ / 한국교육신문 (2022.06.22.)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544</p> |
| 타 시도 사례 | <p>난동 피우고 교사 때린 초등생... 동급생 ‘별별’, 학교 대응 미흡 / 인천투데이 (2022.6.24.)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525</p> |


| | | | |
|-------|--|----|------------|
| 제목 | 교사에 욕설·막말한 초등생... “두려움 떠는 아이들 지켜달라” ‘쑥대밭’ 전북 A초 교사들 “지금은 별다른 대책 없어”, 법상 생활지도권 명시 촉구 | 번호 | 13 |
| 출처 | 오마이뉴스 | 날짜 | 2022.06.23 |
| 기사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5099&CMPT_CD=P0010&utm_source=naver&utm_medium=newsearch&utm_campaign=naver_news | 기자 | 윤 근 혁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초등학생들의 학교폭력이 점점 홍포화 되고 있음 | | |
| 기사 내용 | <p>공지 불안과 공포로 변해버린 교실. 빠른 대책 마련을 바랍니다.</p> <p>17 아이들을 위해 신속히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개최해 주세요.</p> <p>16 등. 학교가 무서워 계속 픽업하고 있습니다.</p> <p>15 보복이 두려워 학교밖을 나가야 하나요?</p> <p>14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p> <p>13 불안과 공포로 변해버린 교실. 빠른 대책 마련을 바랍니다.</p> <p>12 신속히 학교생활교육위원회를 열어주세요.</p> <p>11 하루빨리 학교생활규정위원회 개최를 요청합니다!!</p> <p>10 학교생활규정위원회를 소집요청합니다</p> <p>9 떠나고 싶은 학교가 되었습니다.</p> <p><i>OhmyNews</i></p> | | |

| |
|--|
| <p>전북지역 한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학생과 교원 대상으로 폭력과 욕설 및 아동학대 신고 등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인 가운데,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폭력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막을 분이 어디에 있느냐”고 하소연에 나섰다. 교원단체들은 “교원의 생활지도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p> <p>“즐거워야 할 아이들 학교생활이... 하루 빨리 대책 마련해달라.”</p> <p>A초등학교에 강제전학 온 뒤 지난 5월 25일 첫 등교한 B군은 이후 일주일 사이에 같은 반 학생에게 폭언과 폭행을 행사하고, 이를 말리는 교사, 교감, 교장과 경찰에게도 막말과 욕설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교사와 경찰에 대해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학급에서 키우던 햄스터를 동료 학생 물통에 넣어 죽게 만든 사실도 밝혀졌다.</p> <p>사건이 터진 전북 익산에 있는 A초 홈페이지 게시판을 23일 살펴봤더니,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학교와 교육당국에 대해 강하게 성토했고 있었다.</p> <p>한 학부모는 게시 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들’에서 “평화로웠던 학교에 어두움이 찾아들고 있다.”면서 “한 아이의 폭행과 보복성 행동에 저희 아이들을 지켜주실 분은 어디계신지 묻고 싶다.”고 적었다.</p> <p>다른 학부모도 “즐거워야 할 학교생활이 불안과 공포로 변해 버렸다. (우리 아이가) 잊지 못할 것 같다고 이름만 들어도 소름이 끼치고 무섭다고 한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단 하루도 아이를 학교에 맘 편히 보낼 수가 없다. 학교에서는 하루 빨리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p> |
|--|

| | |
|--|---|
| | <p>또 다른 학부모도 “(해당 학생을 피하기 위해) 갑작스럽게 버스를 타고 현장체험학습을 갔다. 한 아이로 인해 많은 선생님과 아이들이 피해를 봐야하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다음에도 (피해 학생들이) 학교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냐. 저희가 전학 가야 하는 것이냐”고 따졌다.</p> <p>앞서 A초에서 B군에 대한 ‘등교 금지’ 긴급 조치를 내렸는데도, 이 학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등교를 시도했다. 6월 들어 재 등교가 시작되자 학교는 B군이 소속된 학급에 대해 갑작스런 현장체험 학습을 진행했다.</p> <p>교원단체들 “법에 학생생활지도권 명시해야“</p> <p>이 같은 사실에 대해 교원단체들은 일제히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p> <p>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는 23일 성명에서 “모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 교원에게 문제행동 학생을 ‘말릴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면서 “국회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사의 의무에 생활지도권을 명시해 교사가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을 보호할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라”고 요구했다.</p> <p>현행 전북 학생인권조례도 “학생이 교사, 학생 등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학칙에 따른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p> <p>김고종호 전교조 정책실장은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다른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한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인권 침해를 하는 학생을 말릴 수 있는 권리를 교사에게 줘야 한다. 특수한 상황에서는 면책특권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p> |
|--|---|

| | |
|----------------------|---|
| | <p>미국 뉴욕주의 경우 교육지침으로 “문제행동을 보이는 학생에 대해 정학교실에 머물게 하거나 학부모를 학교로 소환해 데려가도록 한다.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 사이 다툼이 일어나면 학교 경찰이 제압한다.”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p> <p>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와 전북교총도 지난 22일 공동으로 낸 입장문에서 “교총은 잘못된 문제행동으로 다수 학생의 인권과 학습권, 교원의 교권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해당 학생의 치유와 교육을 위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한다.”면서 “이를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생활지도권 부여, 정상적 지도과정에 대한 법적 보호 등 근본적인 문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p> <p>전북교사노동조합도 지난 21일 낸 성명에서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생생활지도법을 조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의 한 초등학교에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처분을 받아 전입한 5학년 학생이 새로 전입한 학교에서도 폭행, 수업방해로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침해함. - 폭력행위를 말리는 담임교사, 교장, 교감에게 수업방해, 욕설과 협박을 일삼고, 소란을 제지당하면 오히려 아동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는 등 인권을 내세워 교사의 지도에 따르지 않고 학교구성원을 위협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이 학교에서 폭력, 협박을 통해 다른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상황에서 교사가 폭력행위를 즉각 중지시키고 지도에 따르도록 강제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서 학생에 의해 학교 내 안전한 학습환경이 위협받을 때 취할 수 있는 조치에 한계가 있음. - 수업을 방해하고 학생과 학교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학생의 행위를 말릴 권리, 교사의 생활지도권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교육현장에서 요구하는 학생생활조례의 제정, 관련 교육법 개정이 |

| | |
|---------------|--|
| | 나 학생생활지도법 제정 방안 등을 검토하여 학생생활지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익산 초등학생 학폭 논란...한국교총 “잘못된 인권의식” / 노컷뉴스(2022.06.22.) https://www.nocutnews.co.kr/news/5775842</p> <p>막무가내 초등학생...학교는 ‘전전공공’ / 한국교육신문(2022.06.22.) https://www.hangyo.com/news/article.html?no=96544</p> <p>초등생 한명에 학교 시스템 붕괴 ‘교사는 결국 학생을 포기해야 하는가’ / 전북일보(2022.06.23.) https://www.jjan.kr/article/20220623580266</p> <p>때리고 욕하고 위협하고 ‘무서운 초등생’ .. 학생도 교사도 별별 / 에듀프레스(2022.06.18.)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169</p> |
| 타 시도 사례 | <p>울산서 고교생이 담임교사 폭행, 경찰 수사 진행 / 국제신문(2022.06.03)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220603.99099000893</p> |

| | | | |
|-------|---|----|------------|
| 제목 | 학교에 대한 믿음의 대가가 2차 피해였다...초교 1년, 급우에게 학폭피해 | 번호 | 14 |
| 출처 | 뉴스1 | 날짜 | 2022.06.21 |
| 기사 주소 | https://www.news1.kr/articles/?4718272 | 기자 | 임충식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모든 학생의 교육의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 |
| 기사 내용 | <p>학부모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학교 측 적절한 조치 없어” 학교 측 “죄송하다. 피해 학생 회복위해 최선 다할 것” (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2022-06-21 14:33 송고 2022-06-21 15:58 최종수정</p> <p>1</p>  <p>© News1 이미지 디자이너</p> | | |

| | |
|--|--|
| | <p>“학교를 믿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히려 2차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p> <p>전북 전주 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한 학부모 A씨가 2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울분을 쏟아냈다. 그는 “학교폭력에 대한 적절한 조치만 이뤄졌더라면 내 자녀가 또다시 그런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됐었다”며 “왜 내 자녀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너무 화가 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p> <p>A씨와 전북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전주 모 초등학교에 입학한 B군은 지난 3월 4일 같은 반 친구인 C군으로부터 가슴을 맞았다. 3일 후에도 가슴을 맞고 목 조르기를 당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담임교사로부터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선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다. 이때까지만 해도 A씨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p> <p>하지만 이후에도 C군의 폭력행위가 계속됐다. C군은 수시로 B군의 얼굴 등을 때리고 목을 졸랐다. 보온병으로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5월2일까지 C군으로부터 당한 폭행 건수는 13건, 뇌진탕 2주 등 발급받은 진단서만 4건에 달했다.</p> <p>심각함을 깨달은 A씨는 학교 측에 분리조치를 요청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학교폭력위원회의 결과가 없으면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이었다. 이에 A씨는 전북교육청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도움을 요청했다. 맘카페에도 올렸다. C군의 폭력행위가 수면위로 드러나자 피해를 당했다는 학생 수도 많아졌다.</p> <p>학교 측에서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학교 측은 C군의 방과 후 수업을 배제하고 하교지도 등의 조치를 취했다. 상담교사와 함께 학생을 모니터링 했다. 하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p> |
|--|--|

| | |
|--|--|
| | <p>결국 5월24일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폭력위원회가 열렸다. 당시 학폭위는 C군의 폭력행위를 인정하고 학교 측에서 분리조치를 실시할 것을 결정했다. 하지만 정작 분리조치가 된 것은 6월 14일이었다. 20일 넘게 한 교실에서 B군은 가해자인 C군과 한 반에 있었던 셈이다.</p> <p>분리조치가 늦어지면서 B군은 또 다른 피해를 당하고 말았다.</p> <p>A씨는 “학폭위 결정에 대한 후속조치가 늦어지면서 자녀(B군)가 C군에게 밀려 머리를 벽에 부딪치는 피해를 당했다. ‘눈이 잘 안 보이고 머리가 어지럽다’는 말을 들었을 때 엄마로써 너무 힘들었다.”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p> <p>B군은 현재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3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다. 학교도 가지 못하고 있다.</p> <p>A씨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2차 피해를 당해야만 했다”면서 “왜 그랬는지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p> <p>이에 대해 학교 측은 “죄송하고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p> <p>해당 학교 측 관계자는 “학교 안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분리조치가 바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가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특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었다. 또 신체검사가 진행 중이어서 끝난 뒤 분리조치를 바로 실시했다”고 설명했다.</p> <p>이 관계자는 “상담교사와 함께 가해 학생을 모니터링하고 하교 지도를 하는 등 나름대로 조치를 취했지만 부족하고 미흡했던 것 같</p> |
|--|--|

| | |
|------------------------------|---|
| | 다”면서 “피해학생이 치료를 받으면서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1학년 입학 후 학급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이 점점 심해지면서 교사와 학교에 보호와 대처를 요구했으나 학교폭력 처리 절차의 진행에 시간이 걸리면서 피해 학생이 지속적이고 강화된 폭력에 노출된 사건임 - 학교폭력의 특성상 가해자와 피해자 규명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어린 학년일수록 장난인지 폭력이 구분하기 어려워 교육현장에서 언제, 어떠한 조치를 통해 개입해야 하는지 기준을 정하기 어려움 - 모든 학생의 교육의 기회와 학습권을 보장하면서도 폭력의 피해자가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발생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여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지난 2021년 6월에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학교 현장에서 교육적, 절차적 사유로 잘 준수되기 어려운 점이 있음 - 학교 폭력이 인지되면 학교폭력위원회의 처리 절차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피해자가 가해자의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학교와 교사의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요구됨 - 즉시분리를 규정하고 있는 개정 학폭법과 관련된 사례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정 학폭법의 실무상 문제점을 개선하고 구체적인 지침을 수립하도록 함 |
| | |

| | |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학교 폭력 학생 분리 조치 지연으로 2차 피해” / KBS(2022.06.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491376&ref=A</p> <p>전주 한 초등학교 학폭 피해자 학교측 느장대응으로 2차 피해 주장 / 전북일보(2022.06.21.) https://www.jjan.kr/article/20220621580267</p> |
| 타 시도 사례 | <p>피해자가 교문 밖으로...학교폭력 대응 미흡 / 뉴제주일보(2022.02.27.)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78638</p> |

| | | | |
|-------|--|----|------------|
| 제목 | 제주 A여고 학생인권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 권고 | 번호 | 15 |
| 출처 | 서울신문 | 날짜 | 2022.06.10 |
| 기사 주소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0610500051 | 기자 | 강동삼 |
| 인권 범위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인권 침해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육계 전체의 대안 마련 필요하다. | | |
| 기사 내용 | <p>제주 A여고 학생인권침해 의혹 사실로… “학교장은 해당교사 조치하라” 권</p> <p>입력 : 2022-06-10 12:10 수정 : 2022-06-10 12:27</p>  <p>가장 많이 본 뉴스 1-5</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화정♥정준하, 명품백 들고 여행 다니는 일상 공개 2 윤석열 대통령, 마드리드로 출국 3 '럼백 비상' 프로미스나인, 교통사고로 쇼케이스 4 나는술로 6기 현숙, 파격 변신 후 소개팅했다 5 서울시, 아이 베푸는 친인척에게 수당 추진 <p>전 세계 187개국에서 내폰내번호 그대로 전로망 50% 할인 baro와 함께 잘 다녀오세요 자세히 알아보기</p> <p>▲ 지난 8월 21일 일어난 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이 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사립여자고등학교 학생인권침해 실태와 관련해 후속조치를 밝히고 있다.</p> <p>‘폭언 욕설’ 논란이 있었던 제주 소재 한 사립여고의 일부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희롱 등을 일삼아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다.</p> | | |

| |
|---|
| <p>제주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지난 3월 A고등학교의 학생 인권 침해 진정 사안과 관련해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p> <p>졸업생들은 일부 교사가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 “니네 부모가 잘못 가르쳤다”, “그냥 남자를 잘 만나” 등의 폭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p> <p>또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하는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p> <p>이에 대해 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해당 학교 2·3학년 22개 학급 전체 학생과 지난해 3학년에 재학한 졸업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함께 학생자치회와 관련 교사 및 관리자 등을 대상으로 개별 면담도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최종 권고안을 확정했다.</p> <p>학생인권교육센터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학생인권 침해 영역에 대해 직·간접 경험을 전수 조사를 한 결과 학교 내에서 교사에 의한 폭언, 학습권, 차별, 개인정보 보호, 의사 표현 등에 대한 인권침해가 일부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p> <p>이어 “직접 피해 학생이 진술을 하지 않았거나 객관적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는 개별 교사에 대한 권고를 내릴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지만, 파악된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을 했다”며 “개별 교사 몇몇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 내에서 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재발 방지 등을 권고했다”고 말했다.</p> <p>권고 내용은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조치를 취할 것 ▲관련 교사는 학생인권교육을 이수할 것 ▲전체 교직원 대상 직</p> |
|---|

| | |
|------------------------------|---|
| | <p>무연수(아동학대, 성희롱·성폭력, 학생인권)를 추가 실시할 것 ▲학생생활규정 개정과 교내 학생인권기구를 마련할 것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를 시행할 것 등이다.</p> <p>해당 학교는 권고일로부터 20일 이내 권고 내용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일로부터 60일 이내 이행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p> <p>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장은 “권고사항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필요한 경우 재학생 심리 안정을 위한 심리치유 상담 지원, 교직원 대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p> <p>앞서 지난 3월 A여고 전 학생회장과 제주학생인권조례TF팀, 제주평화인권연구소는 A여고 학생 인권침해에 대해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교육청에 진정서를 제출, 사안을 조사해 조치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일부 교사의 성차별적 폭언 및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 성희롱 또는 성추행을 경험한 학생들의 증언이 사실로 나타남</p> <p>- 몇몇 교사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문화 및 학교 구조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한 학교 전반의 문제임</p> <p>- 가해 교사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및 학생인권기구,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인권연수 등 권고사항을 이행할 필요성 제기임</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교사들의 학생들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육계 전체의 대안 마련 필요</p> |


| | |
|------------------------------|---|
| | <p>- 임용 전 인권연수 프로그램 증가 및 시기별 교사, 학생, 보호자들 대상의 인권 프로그램, 학생인권보호 기구 설립 등의 방안이 필요</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제주여고 교사 폭언, 학습권, 차별 등 ‘구조적 인권침해’ 확인” / 한겨레 (2022.06.13. https://www.hani.co.kr/arti/area/jeju/1046758.html)</p> <p>제주교육청, 학생 인권침해 논란 A여고에 재발 방지 권고/연합뉴스 (2022.06.1. https://www.yna.co.kr/view/AKR20220610069000056?input=1195m)</p> |
| 타 시도 사례 | <p>“세월호 친구 곁으로 보내줘?” ... ‘막말·성희롱’ 과천여고 교사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0713500184</p> |

| | | | |
|-------|---|----|------------|
| 제목 | 대전시교육청, 운동부 학생 대상 폭력과 부당 행위 피해 실태조사 | 번호 | 16 |
| 출처 | 대전CBS | 날짜 | 2022.06.22 |
| 기사 주소 | https://www.nocutnews.co.kr/news/5775691 | 기자 | 김 화 영 |
| 인권 범위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학생 선수들이 놓이는 체육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력 및 부당행위의 내용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 | |
| 기사내용 |  <p>대전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16일부터 7월 8일까지 ‘2022년 학생선수 폭력 및 부당행위 피해(부패 청렴 위반) 실태조사’를 온라인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p> <p>학생 선수 폭력 및 부당행위 피해 실태조사는 2020년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해 초등학교 4학년부터</p> | | |

| | |
|-------------|---|
| | <p>고등학교 3학년 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소속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p> <p>조사내용은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학생 선수로 활동하며 학교폭력 목격이나 피해 경험, 부당행위 피해(부패 청렴 위반, 대회출전 제한, 대회 엔트리 불이익,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등) 등이 있었는지 여부다.</p> <p>조사는 온라인 설문 조사 방식으로 학생 선수들과 학부모는 부여받은 조사 접속 경로(URL, QR코드)를 통해 개인공간에서 자유롭게 온라인 설문 참여하게 된다.</p> <p>조사가 끝난 뒤 시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은 폭력 및 부당행위 피해 응답자가 있는 학교에 대해 관련 절차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p> <p>대전시교육청 김석중 체육예술건강과장은 “학생선수 폭력 및 부당행위 피해 실태조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해결 지원을 위해서는 학생 선수와 학부모님의 솔직한 응답이 가장 중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라고 말했다.</p> |
| 내용분석 및 쟁점사안 | <p>- 대전시교육청에서 학생 선수로 활동함에 따라 대회출전 기회 제한, 대회 엔트리 불이익 또는 상급학교 진학 불이익 등의 부당행위 피해의 심각성 인지</p> <p>- 학생 선수 폭력 및 부당행위 피해 실태조사는 2020년 학생 선수 인권보호 강화방안에 따라 2021년부터 정례화해 학생 선수 및 학교 운동부 소속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문 응답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 실시 예정 - 실효성 있는 대책과 해결 지원을 위해 학생 선수와 학부모의 솔직한 응답 및 적극적 참여가 핵심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학생이 아닌 학생 선수들이 놓이는 체육 교육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폭력 및 부당행위의 내용을 설정함이 의미가 있음 - 자유로이 개인적 공간에서 URL, QR 코드 등을 이용해 참여를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적극적 참여를 유도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방식을 개선 - 단, 후속 조치중 ‘설문 응답에 따라 피해자 보호조치 및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후속 조치 실시 예정’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아, 이에 대한 체계적인 방안 설정 및 사전 안내가 필요해 보임 |
| 관련유사 기사 및 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부, 전체 초·중·고 학생선수 대상 ‘2022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 조사’ 실시 / 한국강사신문 (22.06.10) http://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8871 - 교육부, 학생선수 교육·인권 지원방안 공개토론회 개최 / 뉴시스 (22.06.16)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615_0001908950&cID=10201&pID=10200 |
| 타시도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경교육지원청,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스포츠분야 인권 연수’ 개최!! / 국제뉴스 (22.06.08) |

| | |
|--|--|
| |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83634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울산시교육청, 학생선수인권보호협의회 개최 / 경상일보 (22.04.06) http://www.ks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31526 |

| | | | |
|-------|---|----|------------|
| 제목 | ‘개구리 급식’ 업체, 72개교에 김치 납품중...서울시교육청, 과대학교 급식 분리 검토 | 번호 | 17 |
| 출처 | 경향신문 | 날짜 | 2022.06.22 |
| 기사 주소 | https://m.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206221510011/amp | 기자 | 남지원 |
| 인권 범위 | 급식에 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4조) | | |
| 주제 | 급식 사고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별 급식실의 분리를 추진할 계획의 수립을 검토함 | | |
| 기사 내용 | <p style="text-align: center;">경향신문</p> <p>‘개구리 급식’ 업체, 72개교에 김치 납품중...서울시교육청, 과대학교 급식 분리 검토</p> <p>2022.06.22 15:10 입력 남지원 기자</p>  <p>서울시내 학교 2곳의 급식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열무김치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사고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별 급식실의 분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문제의 열무김치 납품업체 2곳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이 중 1곳은 여전히 서울시내 72개 학교에 김치를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다.</p> | | |

| |
|--|
| <p>임영식 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장은 22일 브리핑에서 “1교 1급식 실체제가 돼야 급식 관련 사고가 발생해도 파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달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서울 강서구 A고교 등 3000명분 이상의 급식을 한꺼번에 조리하는 관내 과대학교 2곳을 방문해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고 말했다. A고교는 같은 재단 소속으로 인접해 있는 여고와 여중, 외국어고 등에 나가는 급식을 공동조리하고 있다.</p> <p>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7일 A고교를 방문해 4개 학교 관계자들과 협의한 결과 하루 3끼 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외고 급식을 나머지 3개 학교 급식과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사고와는 관계없는 노원구의 다른 고등학교도 같은 재단 소속 초·중·고의 급식 3000명분 이상을 함께 조리하고 있어 개선 대상에 올랐다. 교육청은 이 학교도 방문해 조리실 신축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p> <p>진흥원 관계자는 “한 울타리 안에 여러 학교를 운영하는 사립학교들은 조리실과 식당을 하나만 갖춰놓고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며 “많은 학생들이 한 개 급식실에서 만들어진 급식을 제공받다 보니 위생관리에 취약하고 식중독이나 이물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모든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급식실을 분리하면 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p> <p>문제의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 2곳은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썹(HCCP) 인증평가에서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가 생산한 열무김치도 전량 폐기됐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와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단계의 위해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처분 후 재평가를 진행하고,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p> <p>A고교 납품업체의 경우 개구리 문제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15일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B고교에 열무김치를 납품한 업체의 경우 아직 이물질이 어디서 나왔는지 확실치</p> |
|--|

| | |
|----------------------|---|
| | <p>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식약처 관계자는 “B고교 납품업체도 해썹 기준 미준수로 부적합을 받았는데 사유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이다.” 라고 말했다.</p> <p>원인 조사가 늦어지면서 B고교 납품업체는 아직 서울시내 72개 학교에 배추김치 등을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업체는 74개 학교와 납품계약을 맺었지만 사건 발생 뒤 이날까지 B고교 등 2곳만이 계약을 해지했다. 보건진흥원 관계자는 “업체 측은 개구리 사체가 열무김치에서 나온 게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어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학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급식 계약은 개별 학교장과 식재료 납품업체 사이에 맺은 것이라 교육청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교육청은 여름방학 전까지 관내 전체의 학교 급식에서 열무김치를 빼도록 조치한 상태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내 학교 2곳의 급식에서 잇따라 개구리 사체가 나오면서 교육당국이 ‘열무김치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급식 사고 피해확산을 막기 위해 학교별 급식실 분리를 추진 계획을 세움 - 피해가 심각해진 이유는 한 재단에서 여러 사립학교들을 운영하는 경우, 조리실과 식당을 하나만 갖춰놓고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임. 이런 관행으로 인해 위생관리에 취약하고 식중독이나 이물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함. 이에 학교별 급식실 분리에 대한 논의가 교육청에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음 - 급식 계약은 개별 학교장과 식재료 납품업체 사이에 맺은 것이라 교육청이 관여할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별 조리실과 식당을 하나씩 두어 급식피해를 최소한으로 하 |

| | |
|----------------------|--|
| | <p>는 것이 필요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본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해썹 인증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들이 계속해서 식재료를 공급할 수 있었다는 점이 핵심적인 문제임. 인증평가의 절차의 엄격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관련 절차에 있어서 비리나 운영의 비효율성이 있다면 적극개선하고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급식 계약의 체결 및 해지를 학교장과 납품업체의 권한 내에만 둘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급식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관여 및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명 이상 사립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급식관리 강화 / 정책브리핑 (22.06.21)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02736&call_from=rsslink |
| 타 시도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학교급식 특별 위생·안전 점검 실시 / 경기신문 (22.06.23)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706912 - 대구시교육청 간부공무원 학교급식 현장 특별점검 실시 / 데일리대구경북뉴스 (22.06.21) http://www.dailydgnews.com/news/article.html?no=128613 |

| | | | |
|-------|---|----|------------|
| 제목 | 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 | 번호 | 18 |
| 출처 | 연합뉴스 | 날짜 | 2022.06.24 |
| 기사 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4052000004?input=1195m | 기자 | 김 윤 철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인권 침해이다. | | |
| 기사 내용 | <p>인권위 "학폭가해자 강제전학, 왕복 3시간 거리는 인권 침해"</p> <p>송고시간 2022-06-24 12:00</p> <p>김윤철 기자 기자 이미지</p> <p> "성장기 학생의 건강권·학습권도 고려해야"... 학교 재배정 권고</p>  <p>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p> <p>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부산시의 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전출된 학생의 학교를 재배정하고,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교육이라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p> | | |

| | |
|--|--|
| <p>24일 밝혔다.</p> <p>지난해 9월 진정을 낸 학부모는 중학생인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이유로 거주지에서 약 25km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에 배정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p> <p>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 학생은 생활권 반경이 매우 넓고, 강제 전학 조치가 이뤄지기 전부터 이미 경찰서에서 관리 중이었다”며 “피해 학생과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가해 학생을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한 것은 피해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와 재적응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p> <p>또 교육지원청 지침에 따르면 전출시킬 학생을 현재 학교에서 직선거리가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해야 하는데, 직선거리 8.4km에 있는 중학교는 같은 해 이미 강제전학 전입 학생을 받은 바 있어 분산 배정 원칙에 따라 제외했다고 덧붙였다.</p> <p>진정인의 자녀는 지난해 피해 학생을 폭행하고 돈을 빼앗는 등 가해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돼 강제 전학 조치가 내려졌으며, 피해 학생은 다른 곳으로 이사한 뒤에도 학교생활에 대한 공포로 현재까지 학교에 다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p> <p>인권위는 “피해 학생이 폭력으로 인해 다른 지역으로 이사했고,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현재까지 학교를 나가지 못하는 상태이므로, 가해 학생을 강제 전학시켜 피해 학생과 분리할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p> <p>그러면서도 “해당 교육지원청의 지침은 전학 대상 학생을 직선거리 2.5km 이상인 학교에 분산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최대 한도 거리가 없다”며 “등하교에만 매일 왕복 3시간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성장기에 있는 학생의 건강권과 학습권이 침해받을 우려를 고려하면 적절한 학교 배정이 이루어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p> <p>이어 “행정적 문제와 선도 목적 등을 고려했다 해도, 전학 결정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며 “과도한 등하교 시간으로 인해 학생의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는 원거리</p> | |
|--|--|

| | |
|------------------------------|---|
| | 학교로의 배정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일지라도 거주지에서 지나치게 먼 학교로 강제 전학시킨 조치는 인권 침해라는 판단을 함 - 가해자 측과 국가인권위원회는 중학생이 거주지로부터 약 25km 떨어져 있어 등하교에 왕복 3시간이 걸리는 학교로 배정된 것은 가해학생도 성장기 학생이고, 원거리 학교로의 배정으로 인한 과도한 등하교시간으로 인해 가해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 건강권과 학습권을 제약할 수 있음. - 그러나, 부산시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가해학생 생활반경이 넓고 피해자의 심신상태 및 가해자의 죄질과 행정청의 강제전학생 분산배정원칙을 고려해보았을 때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입장임. - 학교폭력의 경우 피해 학생의 실질적인 보호를 위해 가해학생과 피해 학생이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원거리에 있는 학교로 배정할 필요가 있음 - 행정적 문제와 선도목적 등을 고려했다 해도 전학결정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고 봄.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해학생의 선도 목적, 피해학생의 실질적 보호를 위한 전학조치의 필요성을 고려하면서도 가해학생 또한 성장기 학생이라는 점에서 가해학생의 인권과 피해학생의 인권 사이에서의 세심한 고려가 필요함 - 가해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이 피해학생의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안전에 대한 권리보다 우선할 수 있는지 근본적인 숙고와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 및 판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 -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생활권이 겹치지 않도록 강제전학조치가 |

| | |
|------------------------------|---|
| | 필요하나,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엄벌이나 강제전학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므로 교육현장에서의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개정과 대책 마련이 필요.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학폭 가해자 등하교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경향신문 (2022.06.24.)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206242112035</p> <p>-인권위 ‘학폭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 동아일보(2022.06.24.)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624/114099013/1</p> <p>-인권위 ‘학폭 가해자라도 너무 먼 학교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 조선일보(2022.06.24.)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4/VG5AS2JUBZDJLDQXYP2XPU76J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p> |
| 타 시도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상초월 학폭..가해자인 10세 초등생이 이례적으로 ‘제8호 조치’ 까지 당했다. / 위키트리(2022.06.09.) https://www.wikitree.co.kr/articles/762301 - 인천 동구 A중학교 ‘성폭력’ 가해자, 피해자 여전히 같은학교 / 인천투데이(2022.6.15.) http://www.incheontoday.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266 - 학교폭력 공백키우는 학교폭력심의위 / 경기일보(2022.6.26.)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626580073 |

전라북도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8.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1) 활동일시 : 2022년 7월 1일 ~ 7월 31일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7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7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 시도 유사사례 및 타 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2 | 1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1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1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1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에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3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8 | 1 |

4.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7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타 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 안전에 대한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 주요 내용으로는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고,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새 학교에 적응 못해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집단활동시 코로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방역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타 시도 사례로서,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의 외출 제한 조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며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하므로,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7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악마화 하지 말라"...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 등생이 받은 편지 | 번호 | 19 |
| 출처 | 중앙일보 | 날짜 | 2022.07.15 |
| 기사 주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134 | 기자 | 장윤서, 이후연 |
| 인권 범위 |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 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 |
| 기사 내용 | <p>"악마화 하지 말라"...교사에 폭력 휘두른 초 등생이 받은 편지</p> <p>중앙일보 입력 2022.07.15 09:07 업데이트 2022.07.15 09:36</p> <p>장윤서 기자 이후연 기자</p> <p>“○○아, 우리는 너를 믿어. 응원할게”</p> <p>교사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생 A군이 입소한 병원에 지난 1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A군의 담임이었던 김학희 교사와 지역의 동료 교사들이 함께 쓴 편지였다. 김 교사는 "A군이 가진 학교와 어른에 대한 불신을 녹여주고 싶다"고 말했다.</p>  <p>“○○아, 우리는 너를 믿어. 응원할게”</p> <p>교사와 동급생에게 폭력을 휘두른 전북 익산의 초등학교생 A군이 입소 한 병원에 지난 1일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A군의 담임이었던 김 학희 교사와 지역의 동료 교사들이 함께 쓴 편지였다. 김 교사는 "A 군이 가진 학교와 어른에 대한 불신을 녹여주고 싶다"고 말했다.</p> | | |

| | |
|--|--|
| | <p>A군은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당했지만 새 학교에서도 같은 반 학생을 폭행하고 교사에게 욕설을 했다. 강제 전학과 등교 중지와 같은 처벌만으로는 A군의 반복되는 폭력을 막을 수 없었다. 결국 이 번에는 병원에서 운영하는 위(Wee)센터에 입소해 치료를 받게 됐다.</p> |
| | <p>김 교사를 비롯해 A군에게 편지를 쓴 교사들은 가해 학생에 대한 처 벌만이 답이 아니라고 입을 모았다. A군에게 '매리지도 못할 거면서 X랄이야'란 욕설을 들었던 당사자인 김 교사는 기자에게 "A군을 악 마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p> |
| | <p>매년 늘어나는 '강제 전학'</p> <p>최근 강제 전학 조치는 점점 느는 추세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 력 가해 학생 중 전학 조치를 받은 경우는 2017년 1951건에서 2019 년 2127건으로 늘었다. 2020년 이후 코로나19로 등교일이 줄면서 학 교폭력도 줄었지만 올해부터는 등교일이 늘어나면서 학교폭력과 전 학 조치도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p> <p>학교폭력 가해자는 학생과 부모 동의 없이 전학 조치를 받을 수 있 다. 전학은 학교폭력 처분 중 퇴학 다음으로 센 징계다. 의무교육 대 상인 초·중학생에게는 퇴학 조치를 할 수 없어 사실상 강제 전학이 마지막 선택지다. 강제 전학이라고 해서 전학만 시키는 건 아니다. 가해 학생은 시도마다 있는 특별교육기관에서 특별 교육을 이수 받 는다. 주로 위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외부 기관 전문기관과 연계 한 심리 치료 등이 이뤄진다.</p> <p>가해 학생 중 상당수는 가정환경이 좋지 않거나 아동학대 피해 경험 이 있다. 유상범 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장은 "위센터에서 가정폭력 사실이 알려지면 신고를 한다. 지자체, 여성가족부와 공유하는 원스 톱 지원 시스템이 마련돼있다."며 "아동학대, 소외계층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한</p> |

| | |
|--|--|
| | <p>다” 고 말했다.</p> <p>가해 학생 프로그램 부족…피해자와 같이 교육하기도</p> <p>하지만 가해 학생을 위한 심리지원 센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피해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은 많지만, 가해 학생 위한 프로그램은 상대적으로 적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공간에서 치료하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p> <p>전북교사노조는 익산 초등학교 사건이 알려지자 성명을 내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가해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에 대한 신상필벌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다.</p> <p>A군도 지역의 병원형 위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원광대 위센터 센터장인 양찬모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A군이 적응을 잘하고 있다. 치료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 같다” 고 말했다. 양 교수는 “위센터에 오는 친구들은 우울감이나 불안감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며 “학교폭력 가해 이전에 피해가 있던 경험이 많다” 고 말했다.</p> <p>“강제 전학은 돌려막기…장기적인 치료 필요해”</p> <p>전문가들은 학생이 가해 학생이 되기 전 문제를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양 교수는 “조기에 문제점을 확인하고 도움을 받았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움이 있다” 며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 발견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런 정보를 조기에 발견할 시스템이 없다” 고 지적했다.</p> <p>단기적인 치료를 넘어서 가해 학생이 학교로 돌아가서도 적응할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학교</p> |
|--|--|

| | |
|-----------------------------|---|
| | <p>폭력 전문교사인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강제전학은 결국 ‘돌려막기’에 불과하다. 단순 분리로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교가 아닌 전문 기관에서 원인을 찾고 치료를 해야 한다” 고 말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폭력 가해학생을 강제 전학시키는 것만으로는 학교폭력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가해학생의 행위는 가정환경이나 아동학대 경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합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 피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많으나 가해학생에 대한 프로그램은 적으므로, 조기 판단 시스템과 단기치료 및 장기적 관점에서 관리도 필요함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는 비행을 범한 학생을 무조건 처벌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도 하는 곳임 - 가해학생도 학생이므로 죄와 별개로 치료와 관리 필요 - 전문 기관을 더욱 늘려 가해학생이 재차 동일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p>“못때리면서 기강잡고 X랄“…공포의 제자, 교사 888명 때렸다 / 중앙일보 (2022.07.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110</p> <p>학폭 행동교정 없이… 대책 없는 ‘강제전학’ [심층기획 - 강제전학 제도 허와 실] / 세계일보(2022.07.12.) https://m.segye.com/view/20220711519781</p> |

| | |
|--------|---|
| 타시도 사례 | <p>초등생의 ‘담임교사 흉기 위협’ …교원단체들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 프레스리안 (2022.7.05.)</p> <p>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70515163771903?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p> |
|--------|---|

| | | | |
|-------|---|----|------------|
| 제목 | 학폭 행동교정 없이... 대책없는 ‘강제전학’ [심층기획 - 강제전학제도 허와 실] | 번호 | 20 |
| 출처 | 세계일보 | 날짜 | 2022.07.12 |
| 기사 주소 | 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11519781?OutUrl=naver | 기자 | 김유나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 학교 폭력 가해자의 강제 전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님 | | |
| 기사 내용 | <p>학폭 행동교정 없이... 대책없는 ‘강제전학’ [심층기획 - 강제전학제도 허와 실]</p> <p>기사입력 2022-07-12 06:00:00 기사수정 2022-07-11 21:39:29</p> <p style="text-align: right;">가 가</p> | | |
| | <p>전학 간 학교서도 ‘문제학생’ 낙인... “교정·심리 치료 강화”</p> <p>초·중학생에게는 가장 센 징계 새학교 적응 못해 ‘악순환’ 반복</p> <p>학폭 가해자 전학조치 매년 수천건 2차 피해 막기 위해 분리시키지만 전학 조치된 학교 학부모 반발 거세 근본 해결책은 가해 학생 변화 도모</p>  | | |

| | |
|---|---|
| <p>“강제전학(전학조치) 가도 나중에 다시 찾아와 보복하겠다.”</p> <p>최근 전북 익산시의 한 초등학교를 발각 뒤집었던 5학년 A군은 같은반 아이들에게 이런말을 남겼다. A군은 학교에서 ‘무법자’였다. 학교폭력 전력으로 지난 5월 이 학교에 강제전학 온 A군은 반 친구들에게 폭언, 폭행을 하고 반에서 기르던 햄스터를 다른 학생의 물통에 넣어 죽게 만드는 등 등교 일주일 만에 각종 소란을 일으켰다. 교사에게 “흥기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교사는 물론 현장에 출동한 경찰까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하기도 했다. 학교는 등교정지 조치를 내렸으나 A군이 아랑곳하지 않고 등교를 시도하자 같은 반 학생들은 A군을 피해 현장체협학을 떠났다. 교육청 홈페이지에는 “학교가 쑥대밭이 됐다”며 A군을 전학 보내란 학부모의 글이 줄을 이었고,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우리 학교로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쏟아졌다.</p> <p>강제전학을 간 학교에서 재차 문제를 일으켜 또다시 전학 이야기가 나온 A군의 사례는 강제전학 제도의 한계를 보여준다.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징계 중 높은 수위에 속하지만, 문제 근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학생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폭탄 돌리기’란 지적도 많다.</p> <p>◆순번 정해 강제전학 받는 학교들</p> <p>11일 교육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학생·부모 동의 없이 전학조치가 가능하다. 전학은 학교폭력 처분 중 퇴학 다음으로 높은 수위로, 의무교육 대상인 초·중학생에게는 가장 센 징계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는 2017학년도 1959건에서 2018학년도 2073건, 2019학년도 2127건으로 늘었다. 2020학년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체 학교폭력 건수가 줄어 전학조치도 667건으로 감소했지만, 지난해 다시 1001건으로 늘었다.</p> <p>2021학년도 전학조치는 중학생이 540건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생 360건, 초등학생 92건, 기타(특수학교 등) 9건 순이었다. 올해는 작년보다 등교일이 늘어나 전체 학교폭력 건수와 전학조치도 더 늘어날 것으로</p> | <p>보인다.</p> <p>강제전학의 취지는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의 환경을 바꿔 학교폭력의 고리를 끊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학교현장에서는 난감한 제도다. 가해 학생을 받는 학교 입장에서는 기존에 없던 문제 학생이 생기는 것이어서 학생·학부모·교사들은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 전학조치 제도 도입 직후인 2013년에는 경남 양산시의 한 중학생이 전학조치된 학교 학부모들이 시위를 열고 반발해 전학이 철회되기도 했다.</p> <p>제도 도입 10년이 지났지만 거부감은 여전하다. 2020년에는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 학생(당시 중2) 2명이 전학조치 되자 인근 학교 학부모들이 “전학 보내지 말고 처벌과 교정이 가능한 제도를 만들어달라”며 전학 반대 서명운동을 벌였다. 가해 학생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반발은 일단락됐지만,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해결되지 않았다. 당시 가해 학생들이 전학 갈 예정이었던 학교는 이들이 성폭력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도 몰랐던 것으로 전해졌다.</p> <p>강제전학의 구체적인 사유는 비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인천 지역의 한 학부모는 “해당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알려진 건데, 크게 알려지지 않은 사건의 가해 학생은 학부모들 모르게 조용히 전학을 오가는 것 아니냐”며 “전학 간 학교에서 또 문제가 터지면 누가 책임지나. 폭력 정도가 심각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분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p> <p>학교들의 거부감이 크다 보니 각 교육청은 지역 내에서 순번을 정하거나 강제전학으로 학생이 나간 학교에 한 명을 다시 채워 넣는 식으로 배정하고 있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전학 조치된 아이를 받고 싶어하는 학교는 없어서 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고 전했다.</p> <p>◆‘폭탄 돌리기’론 문제 행동 교정 못해</p> <p>전학조치의 가장 큰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란 점이다. 전학조치된 학생 중 일부는 옮겨간 학교에서도 또 문제를 저질러 수차례 학교를 옮기기도 한다. 실제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 학생 중 한 명도 다른 사건으로 강제전학 처분을 받은 상태에서 성폭행을 저질렀던</p> |
|---|---|

| |
|---|
| <p>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서울 강남에서 초등학교 3학년 B군이 동급생의 등에 뜨거운 물을 부어 중증 화상을 입혀 전학 조치된 사건이 알려졌는데, B군 역시 이전에 다른 학교에서 강제전학 온 상태에서 이런 행동을 벌였던 것으로 알려졌다.</p> <p>전학조치가 학교폭력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학교폭력을 다른 학교로 확산시킨 것이다.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강제전학 온 학생이 몇 달도 안 돼 다른 학교로 가는 일이 종종 있다. 전학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다”며 “전학은 문제 학생 행동 교정에 수반되는 부수적인 조치여야 하는데, 현재 제도는 전학만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는 식”이라고 말했다.</p> <p>교육 당국도 한계를 인식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 가해 학생 중 전학조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7~2019학년도 3~3.1%였으나 2020학년도 2.8%, 2021학년도 2.4%로 소폭 줄었다. 코로나19로 수위 높은 학교폭력이 줄어든 영향도 있지만, 가해 학생에 대한 심의 업무가 2020년 학교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된 것도 무관치 않다.</p> <p>한 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에서 심의할 땐 가해 학생을 다른 학교로 보내려는 의지가 컸지만, 교육청에선 전학조치만으론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있어서 전학조치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땅한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p> <p>전문가들은 징계의 목적이 ‘문제 행동 교정’인 만큼 교정 프로그램·심리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은 서면사과(1호)와 퇴학(9호)을 제외한 조치를 받은 경우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돼 있지만, 현장에서는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산 초등생은 언론에 보도된 뒤 논란이 커지자 치료와 교육을 병행하는 위(Wee)센터 입소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일각에선 이슈가 되지 않았다면 전학조치에 그쳤을 것이란 의견이 나온다. 전북교사노조는 익산 초등생 사건 후 성명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가해 학생의 변화를 끌어내는 것”이라며 “학교의 존재 이유는 학생에 대한 신상필벌이 아니라 교화를 통한 민주시민 양성에 있다”고 꼬집었다.</p> |
|---|

| |
|--|
| <p>학교폭력 전문교사인 박정현 한국교육정책연구소 부소장은 “강제전학은 학교폭력 징계로서는 가장 무거운 조치이지만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학교를 옮겨도 또 가해 행동이 나타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원청별로 위센터 등 행동 교정 기관이 있지만 이런 과정 없이 전학만 보내다 보니 익산 초등생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징계가 효과를 거두려면 문제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0년간 전학조치를 받은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그러나 큰 변화는 없는 상황이다. 박 부소장은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을 모은 공립위탁교육기관에서 집중 관리를 한다면 일반 학교의 부담을 덜어주고 행동을 교정할 수 있는 효과가 있지만 이런 곳은 거의 없다”며 “강제전학을 보냈다고 손을 놓지 말고, 전학조치를 가해 학생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요소 중 하나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전북 익산 초등학생이 이전 학교에서 학교폭력으로 강제 전학을 온 지 열흘도 채 되지 않아 같은 반 학생들에게 폭언, 폭행하고 담임교사에게도 폭언을 함. - 강제전학조치는 의무교육인 초·중학생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이나 학교나 학부모들의 거부감이 커 지역 내에서 순번을 정하는 등 학교에서는 문제의 근본 원인을 개선하지 않고 학생을 다른 곳으로 떠넘기는 일명 ‘폭탄 돌리기’라는 지적이 있음. - 전학 간 학교에서도 문제 학생으로 낙인찍혀 새 학교에 적응 못해 악순환이 반복됨. -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시켜 2차 피해를 막고자 했던 강제전학으로 인해 오히려 새로운 피해가 발생하게 됨. - 근본적인 해결책은 가해학생의 변화를 도모해야 함 |

| | |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은 해마다 반복되는 문제이나 근본적인 해결이 이뤄지지 않으므로 교육계 전체의 대안 마련 필요 - 학교폭력에 대한 징계 중 가장 무거운 조치인 강제전학의 징계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문제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함. - 전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육과 전문적인 치료를 통해 가해학생의 변화를 이끌어 내려면 공립위탁 교육기관 등 위기행동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전문시설 필요함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p>익산 학교폭력 논란 초등생, 심리치료 받는다./JTV뉴스(2022.6.27.) https://jtv.co.kr/2021/?c=3/45&uid=2161915</p> <p>“탈모 온 XX” 막말..익산 공포의 초등생, 그날 영상보니/조선일보 (2022.7.22.)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7/22/PWBBTCX53ZBFXMKC4J4KHGUZ3A/?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p> <p>학교폭력 가해학생, 강제전학 보내면 그걸로 끝인가요? / SBS뉴스 (2022.7.15.)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0799&plink=ORI&cooper=NAVER</p> |
| <p>타 시도 사례</p> | <p>학교폭력 가해자, 피해자 각각 다른학교 배정(경기도)/ 헤럴드경제 (2022.7.21.)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20799&plink=ORI&cooper=NAVER</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폭 가해자라도 왕복 3시간 거리 강제전학은 인권침해 / 조선일보 (2022.6.25.)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6/25/U34GZVWHC-RALNOZNQEEGOVLDZE/?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

| | | | |
|-------|---|----|-------------|
| 제목 | 수학여행 간 여고생·교사 159명 코로나 집단 감염… 학교 측 안일한 대응 논란 | 번호 | 21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07.20. |
| 기사 주소 | http://www.jjan.kr/article/20220720580277 | 기자 | 이 강 모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에 대한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10조) - 건강에 관한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수학여행 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인근 중학교에까지 코로나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 | | |
| 기사 내용 | <p>자제기사</p> <h3>수학여행 간 여고생·교사 159명 코로나 집단 감염…학교측 안일한 대응 논란</h3> <p>윤이강모 ① 입력 2022-07-20 16:36 ② 수정 2022-07-20 17:38 ③ 댓글 0</p> <p>전주 A여고 450여명 지난 12~15일 3박4일 일정 제주도 수학여행 출발 전 10명 감염 불구 450명 출발. 여행 중 13명 추가 확진 귀가조치 20일 현재 학생, 교사 포함 모두 159명 확진 판정. 20일 조기 방학 시행</p> <p>전북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학생과 교사 159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 직전 발열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학생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왔지만 별다른 대책강구없이 수학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코로나 집단 발생 사안을 전북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p> <p>전주 A여고 학생 450명과 인솔교사 27명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올랐</p> <p>전북 전주의 한 여자고등학교가 수학여행을 갔다가 학생과 교사 159명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여행 직전 발열 등의 이상증세를 보인 학생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 10명이 확진된 것으로 나왔지만 별다른 대책강구없이 수학여행을 출발한 것으로 알려져 학교측의 안일한 대응 논란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특히 학교측은 코로나 집단 발생 사안을 전북교육청에 보고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는 등 비판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p> | | |

| | |
|--|---|
| | <p>전주 A여고 학생 450명과 인솔교사 27명은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3박4일 일정으로 제주도 수학여행길에 올랐다. 수학여행 전날인 11일 이미 학생 10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은 수학여행에 가지 못했다. 문제는 학생 10명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을 때 반별 분포도를 조사해 확진이 여러 반에 분포돼 있었다면 수학여행을 취소했어야 하지만 일정을 강행한 것이다.</p> <p>제주도 수학여행 기간인 12~15일 사이에는 또 다시 학생 11명과 교사 2명이 추가로 확진돼 해당 학부모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귀가 조치를 시켰다.</p> <p>이후 주말인 16~17일 사이 60여 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고, 18일에서 20일 현재까지 무더기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 현재 학생 144명과 교사 15명 등 모두 15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수학여행 전날부터 시작한 코로나 감염이 수학여행중에 일파만파 확산됐고, 계속해서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확진 학생과 교사들의 가족·지인 감염까지 감안할 때 확진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p> <p>A여고는 당초 21일 방학이 예정됐었지만 코로나 여파로 19일 학부모들에게 학사일정을 통보한 뒤 20일 조기 방학에 들어갔다. 하지만 안일한 방역행정을 놓고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감염 사태임에도 상급 지도관서인 전주교육지원청이나 전북교육청에 이 같은 상황이 보고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북교육청의 미숙한 보고체계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p> <p>교육계 한 관계자는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실시되지 않다보니 이번 A여고의 코로나 집단 감염사태가 어디까지 확산될지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 라면서 “물론 수개월 전부터 준비된 수학여행이어서 취소 결정을 내리는 것은 힘들 줄 알지만 그래도 이 같은 사실을 교육청에 알리고 협의해 수학여행 일정을 조율했어야 한다” 고 말했다.</p> |
|--|---|

| | |
|------------------------------|---|
| | 한편 A여고 인근 B중학교에서도 확진자 47명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전주 모 여고에서 수학여행을 갔다가 학생과 교사 159명이 코로나에 집단감염 되었음</p> <p>- 수학여행 직전 학생 10명이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았음에도 전수조사를 하지 않고 무리하게 수학여행을 강행하였으며, 집단감염 상황을 전주교육지원청이나 전북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아 문제가 됨.</p> <p>- 수학여행 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인해 인근 중학교에까지 코로나 감염이 집단적으로 발생하여 문제가 되고 있음.</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코로나 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과 같은 집단활동 시 코로나 집단감염을 막기 위한 철저한 사전 계획 및 방역 매뉴얼이 필요.</p> <p>-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 집단활동 중 코로나 확진자 발생시 위기 대응 매뉴얼 및 상급기관 보고 핫라인 구축이 필요.</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수학여행 다녀온 전주 고교 학생·교사 159명 확진(종합) / 연합뉴스(2022.07.20.)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0082751055?input=1195m</p> <p>수학여행 뒤 학생·교사 집단 감염…일정 강행 논란 / KBS(2022.07.21.)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14348&ref=A</p> <p>“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전북 497개교 수학여행 전면 중단도 검토” / 세계일보(2022.07.22.)</p> |

| | |
|--------------------|---|
| | <p>https://www.segye.com/newsView/20220722518828?OutUrl=naver</p> <p>학교 코로나 방역 총력 태세, 학생 안전 최우선 / 전북일보(2022.07.24.) https://www.jjan.kr/article/20220722580028</p> |
| 타 시도 사례 | <p>코로나 첫 제주도 수학여행 부산 해동고, 확진자 '0' 비결은? / 연합뉴스(2022.04.12.) https://www.yna.co.kr/view/AKR20220411126700051?input=1195m</p> |

| | | | |
|-------|--|----|------------|
| 제목 | 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만전...자료집 개발·보급 | 번호 | 22 |
| 출처 | 뉴스 1 | 날짜 | 2022.07.12 |
| 기사 주소 | https://www.news1.kr/articles/?4739518 | 기자 | 임 충 식 |
| 인권 범위 |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 |
| 주제 | - 전북교육청의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개발로,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음. | | |
| 기사 내용 | <p>전북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만전...자료집 개발·보급</p> <p>‘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 보급</p> <p>(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2022-07-12 11:31 송고</p> <p>댓글</p> <p>가</p>  <p>전라북도교육청·뉴스1</p> <p>전북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이 2025년 전면 시행을 앞둔 고교학점제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p> <p>도교육청은 고등학교 교과목별 교수·학습 지원 자료인 ‘최소학업성취</p> | | |

| | |
|------------------|---|
| | <p>수준 보장 교수·학습 지원 자료집’을 개발, 일선 학교에 보급한다고 12일 밝혔다.</p> <p>도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앞서 지난해 5월부터 광주교육청, 인천교육청과 함께 자료집 개발에 나서왔다.</p> <p>자료가 발간된 교과목은 ‘독서’와 ‘수학 I’, ‘영어 독해와 작문’으로 현재 2015 개정 교육과정 하에서 많은 학생들이 이수하고 있는 과목이다.</p> <p>특히 자료집은 과목별로 학점 취득을 위한 이수, 미이수의 기준인 학업성취율 40% 달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문항을 담고 있다.</p> <p>또 학업 성취율 40%를 달성하지 못해 미이수할 것으로 예상되는 학생을 예방 지도하거나 실제 미이수 학생이 발생할 때 해당 학생을 지도하기 위한 교수·학습 자료도 담고 있다.</p> <p>이번에 개발된 자료집은 고교학점제 도입을 앞두고 현장 교원들의 수업 및 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p> <p>‘독서’와 ‘수학 I’은 웹 게시가 가능해 전북교육청 누리집에 파일을 탑재했으며 ‘영어 독해와 작문’은 학교교육과로 문의 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이나 교사에게 모두 낯선 고교학점제가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전라북도교육청은 최소성취수준 보장 지도를 위해 다양한 자료를 개발·보급함으로써 학교 현장을 지원하고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에 대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전북도교육청은 2025년 시행될 고교학점제에 대비하기 위해 고등학교 교과목별 교수·학습 지원 자료인 ‘최소학업성취수준 보장 교수·</p> |

| | |
|---------------|--|
| | <p>학습 지원 자료집' 을 개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료집에는 과목별로 학점취득을 위한 성취율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 문항을 담고 있으며, 학업 성취율 40% 이상을 달성하지 못할 것 같은 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예방 가이드라인 및 실제 학업 성취를 하지 못하였을 때 그들을 지도할 수 있는 학습 자료도 포함되어 있음 - 이를 통해 전북지역 내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것을 기대하고 학생들이 학업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교원의 평가 역량을 강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보고 있음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행될 때마다 학교 현장이 겪는 혼란은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고 있음. 이에 고교학점제도가 실제 도입되었을 때 학교 및 교원이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는 여러 상황이 생길 수 있음. -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교육청 차원에서 고교학점제에서의 학점 이수 기준을 제시하고, 이수를 위한 성취율을 확인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 또한, 성취율이 떨어지는 학생들을 예방지도하거나, 그들이 실제 성취를 하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지도해서 학습 역량을 강화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들어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자료집 보급이었다고 생각함.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남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여름 학기' 운영 / LG헬로비전 (2022.07.26.) http://news.lghellovision.net/news/newsView.do?soCode=SCN0000000&idx=341053 - 인천시교육청, 고교학점제 대비 메타버스 교육과정박람회 플랫폼 제공 / 전자신문(2022.07.19.) |

| | |
|---------|---|
| | <p>https://www.etnews.com/2022071900027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교육청, 고교학점제 직업 체험프로그램 시동 / 전국매일신문 (2022.07.26.) https://www.jeonmae.co.kr/news/articleView.html?idxno=904965 |
| 타 시도 사례 | <p>충북교육청, 고교학점제 핵심교원 양성 / 뉴스1(2022.07.28.) https://www.news1.kr/articles/?4755923</p> |

| | | | |
|-------|---|----|------------|
| 제목 | 인권위, 월 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 | 번호 | 23 |
| 출처 | 중앙일보 | 날짜 | 2022.07.22 |
| 기사 주소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8921 | 기자 | 김 경 희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학생인권조례 제6조) - 휴식을 취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1조) | | |
| 주제 | -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 | | |
| 기사 내용 | <p>인권위, 월2회 귀가 고교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p> <p>중앙일보 일력 2022.07.22 13:11</p> <p>김경희 기자 구독</p>  <p>기숙사에서 지내며 한 달에 두 번만 귀가할 수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주말 외출까지 제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p> | | |

| |
|--|
| <p>인권위는 A고등학교 교장에게 기숙사생 주말 외출 제한을 중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p> <p>A고등학교 기숙사에 생활 중인 한 학생은 학교가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두고도 지난 3월부터 병원 진료나 가정사 등의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외출을 허용하고 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p> <p>인권위에 따르면 이 학교의 1~2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2회, 3학년 기숙사생은 한 달에 1회만 귀가할 수 있으며,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오후 10시 40분쯤 끝나 외출이 어렵다. 주말에 기숙사에 잔류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 프로그램과 자기주도학습에 참여한다.</p> <p>A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주말에 학교에 남아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하게 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으며, 학원 수강이나 종교 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어 외출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p> <p>학교는 “농촌에 소재한 학교 여건상, 학교에서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사교육비 절감과 학력 신장 및 대학 입시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라고도 해명했다. “이러한 운영 방침은 학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학부모회의 동의를 받았으며, 다수 학부모의 지지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 며 “일부의 불만” 이라고도 주장했다.</p> <p>하지만 인권위는 귀가가 월 2회만 허용되고 평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p> <p>인권위는 “기숙사 관리 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p> |
|--|

| | |
|------------------------------|--|
| | 동의 없이 이를 제한한 행위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했다.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전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에 대해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 가능하다고 규정됨, 그러나 학교는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않고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함.</p> <p>- 학교는 기숙사관리규정에 전체귀가는 월 2회로 명시했으며 1,3,5주차 주말에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주장함.</p> <p>- 이에 국가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권고함.</p> <p>- 인권위원회는 기숙사생의 평일에는 학교일정이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행동자유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봄.</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이미 월 2회 귀가 제한 방침을 두고 있으면서 주말 외출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이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하거나 휴식을 취함으로써 평일에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음.</p> <p>- 기숙사생들의 외출 및 외박을 제한하는 경우 학부모 및 학생들의 의견 수렴절차 필요.</p> |

| | |
|------------------------------|---|
| | <p>- 외출의 제한은 학교의 전체일정 고려해 외출할 수 있도록 하고, 면학분위기 등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함.</p> <p>- 인권위 또는 교육청의 차원에서 어떤 부분이 기숙사 운영에 있어서, 학생 인권 침해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그에 맞지 않은 운영을 한 사례에 대해 개선을 촉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주말 외출제한’ 고교 기숙사…인권위 ‘행동자유 침해’ / 연합뉴스(2022.07.22.)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20453000004?input=1195m</p> <p>주말 외출 제한하는 고교 기숙사, 인권위 “자유 침해” 판단 / SBS(2022.07.22.)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832749&plink=CR&cooper=NAVER</p> <p>“고등학교 기숙사 주말 외출 제한은 과도한 인권침해” / 전남일보(2022.07.25.) https://www.jnilbo.com/view/media/view?code=2022072510442658658</p> |
| 타 시도 사례 | <p>- 고교 기숙사 주말외출 제한...인권위 “행동자유침해” / 전남매일(2022.7.24.) https://www.yna.co.kr/view/AKR202205060550000004?input=1195m</p> <p>인권위 “코로나19 예방 이유로 경찰 교육생 외출 금지는 인권침해” / 서울경제(2022.03.03.) https://www.sedaily.com/NewsView/2639VR6H10</p> |

인권위 “서강대, 코로나 이유로 기숙사생 외출 제한 인권 침해”/뉴스1(2021.11.09.)
<https://www.news1.kr/articles/?4487350>

전라북도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9.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 1) 활동일시 : 2022년 8월 1일 ~ 8월 31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8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8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시도 유사사례 및 타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 1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2 | 2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 | | 1 |
|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당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2 | 4 |

4.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8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6건 (타시도 2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 8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1>과 같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는데,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절실하다. 그리고 돌봄교사의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의 문제로 아동, 학생의 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해 균형점 찾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재유행이 우려되는데, 교육청은 행정력을 활용하여 현재 필요한 방역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감염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방역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전북교육청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학교생활에 적응력 높이기 위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하고 있는데, 도교육청 주관의 위기학생 지원 긴급 통합 시스템 구축은 위기제발 방지와 예방에 극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하다.

8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 . .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 | 번호 | 24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8.28. |
| 기사 주소 | https://www.jjan.kr/article/20220828580264 | 기자 | 이 강 모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절실함 | | |
| 기사 내용 | <p>‘학생에게 사죄하는 교사’ ... ‘학교에 군림하는 학부모’</p> <p>윤이강모 ①입력 2022-08-28 15:58 ②수정 2022-08-28 17:46 ③댓글 6</p> <p>전주 A초 6년 여학생, 남학생들에게 성희롱 욕설 당했다 담임에게 신고 담임,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아주 무서운 범죄라고 설명 남학생 학부모, 자신아들 성범죄자 취급 이유 담임교사 교체, 공개 사과문 요구도 이에 교감은 사과 중용. 이후 학부모 다시 휴직 요구하며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 경찰 최종 조사결과 무혐의 처분. 담임 자괴감에 눈물만, 교단 떠나는 등 갖가지 생각</p>  | | |

| | |
|--|--|
| | <p>학부모들의 지나친 자녀 보호가 오히려 학교 교육의 폐해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가 사실상 학교위에 군림하다 보니 죄 없는 교사가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교단을 떠날 것을 강요받는 사회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p> <p>전북교사노조에 따르면 전주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지난 6월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희롱성 욕설을 듣고, 이를 담임교사 B씨에게 신고했다.</p> <p>담임교사 B씨는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했다. 이후 남학생 중 한 아이의 엄마 C씨는 담임교사가 자신의 아들을 성범죄자 취급했다며 강력 항의했고, 그 시간대 해당 남학생은 피해 여학생을 아파트 옥상으로 불러 담배를 피웠다고 한다.</p> <p>엄마 C씨는 학교에 담임의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학교 교장은 자초지종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담임교사를 전담교사로 변경했다. 상황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C씨는 다시 자신의 아들에 대한 공개사과문을 쓴 뒤 반 학생들 앞에서 읽으라고 요구했고, 이에 교감은 ‘소나기를 피해가자는 식’으로 사과문을 쓰게 했다.</p> <p>심적 충격을 받은 교사 B씨는 눈물을 흘리며 반 학생들 앞에서 공개 사과문을 읽기에 이렀다. 그러나 사과에서 문제는 끝나지 않았다.</p> <p>또 다시 엄마 C씨는 교사 B씨의 휴직을 요구했고, 교사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사 B씨를 신고했다.</p> <p>다행히도 신고를 접한 전주덕진경찰서는 당시 상황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신고 된 교사 B씨에 대해 최근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p> <p>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매해 전북의 교사 약 200명은 학생</p> |
|--|--|

| | |
|-----------------------------|--|
| | <p>인권조례 위반으로 신고 당해서 약 10명은 징계를 받고 약 190명은 각하되는데 신고당한 200명은 극단적 선택을 꿈꾼다.”면서 “현재 교직사회에서 학생은 선한 존재이고, 학부모 악성 민원은 정당한 저항으로 인정 받는다.”고 토로했다.</p> <p>이어 “요즘 교사는 학부모와 학생에게 욕먹고 때론 맞기도 하고, 요새는 무고성 아동학대로 고소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며 “지금의 교사들은 너무 가슴 아픈 시대에 살고 있다”고 강조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은 지난 6월 같은 반 남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성희롱성 욕설을 듣고, 이를 담임교사 B씨에게 신고함 - 담임교사 B씨는 남학생들에게 “성폭력은 처벌 수위가 높은 범죄”라고 사안의 중대성을 설명함 - 엄마 C씨는 학교에 담임 교체를 요구했고, 해당학교 교장은 자초지종을 파악하지 못한 채 담임교사를 전담교사로 변경함 - 엄마 C씨는 교사 B씨의 휴직을 요구했고, 교사 B씨가 이를 거부하자 학생인권조례 위반으로 교사 B씨를 신고함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인권 보호에 치우쳐 교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음 - 학생들의 인권과 교권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 정책과 방안의 마련이 절실함 - 각 급 학교에서 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을 내실화 할 수 있는 방안 등이 필요함 |

| | |
|---------------------|---|
| |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수업중 교사 촬영한 중학생...“교권 추락, 이 정도였나” / 뉴시스 (2022.8.29.)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829_0001994670&cID=10201&pID=10200 수업 중 책상 치고 욕설하며 청각장애 교사 비하한 중학생들 / 연합뉴스 (2022.8.17.) https://www.yna.co.kr/view/AKR20220817148000062?input=1195m |
| 타 시도 사례 | 장애인 교사에 학생이 욕설...교육활동침해 심각 / 강원일보 2022.8.18.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081715473789690 |

| | | | |
|-------|--|----|-----------|
| 제목 | 진안지역 돌봄 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참여한 주장 대립, 그 결말은 | 번호 | 25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8.16 |
| 기사 주소 | https://www.jjan.kr/article/20220816580121 | 기자 | 국 승 호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의 문제로 아동, 학생의 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해 균형점 찾을 필요가 있음 | | |
| 기사 내용 | <p>특종/단독</p> <p>진안지역 돌봄교실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참여한 주장 대립, 그 결말은</p> <p>국승호 ①입력 2022-08-16 16:42 ②수정 2022-08-17 08:20 댓글 2</p> <p>“물마시기 게임 위험해 ‘제지’” vs. “아동학대이자 인권침해”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 ‘기각 결정’...진안군청 ‘경찰 고발’ 현재 검찰 송치...기소여부 초미 관심 돌봄전담사 진안군청 앞마당에서 6월 20일부터 항의 집회 계속</p> <p>진안시골학교의 한 초등 돌봄 교실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논란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그 논란이 마무리되기보다는 오히려 확산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 모양새다. 아동학대를 주장하는 학부모 측은 법적 절차를 꾸준히 진행하는 반면,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돌봄 교사 A씨는 “다른 기관에서 한 번 기각 결정 받은 건이 군청 아동학대전담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검찰까지 가게 됐으니 다시 조사하라”며 집회와 시위를 벌이고 있다.</p> <p>논란의 사건이 발생한 날은 지난해 8월 25일. 이날 진안지역 한 초등학교의 오후 돌봄 교실에서는 5학년 2명, 3학년 1명, 1학년 2명 등 학생 5명이 모여 ‘물마시기 미션 게임’을 벌였다. 현장에 있던 돌</p> | | |

| | |
|--|---|
| | <p>봄 전담사 A씨는 물마시기 미션을 수행하던 학생이 사례에 걸려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학생끼리 하던 이 게임을 즉시 중단시켰다.</p> <p>이후 A씨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새로운 놀이인 ‘감정카드 게임’을 제안했다. 하지만 물마시기 게임을 주도하던 B학생은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며 이 게임에 참여하지 않았다.</p> <p>이 사건은 한동안 잠잠한 듯했다. 하지만 한 달가량 후 B학생의 학부모가 A씨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면서 본격적으로 표면화되기 시작했다. 이후, 이 사건은 학교폭력과 성격이 다른 아동 학대(어른 대 아이) 건으로 분류되었고, B학생 측은 정신건강의학과와 아동상담센터 소견서를 첨부,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이하 도 학생인권센터)에 ‘구제신청’ 건을 접수했다.</p> <p>구제 신청 요지는 ‘A씨가 한 일련의 행위가 아동의 정서적 학대이자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A씨가 물마시기 게임을 중단시키고 새로운 감정카드 뽑기 놀이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B학생이 수치심, 공포심, 모멸감 등을 느꼈으며, 이후 A씨에게 공포감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다.</p> <p>도 학생인권센터는 네 차례 조사를 실시,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9조와 조례 시행령 제19조 제3항을 근거로 들어 ‘정서적 학대나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 구제 신청을 기각(무혐의)했다. 그 판단 근거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를 원용했으며, B학생이 제출한 정신의학과 및 아동상담센터 소견서는 객관적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또 A씨의 게임 제지가 정당한 훈육 범위나 방식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다.</p> <p>B학생 측은 이에 크게 반발, 군청 아동학대전담부서에 다시 신고했다. 하지만 군청은 도 학생인권센터와 정반대로 아동학대라고 판단</p> |
|--|---|

| | |
|-------------------------------------|---|
| | <p>했다. 전북경찰청에 정식 수사 의뢰된 이 사건은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p> <p>이에 대해 A씨 측은 군청의 판단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다시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A씨가 속한 교육공동체 회원 등은 지난 6월 20일부터 군청 앞에서 ‘재조사 요구’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p> <p>집회 요구사항은 도 학생인권센터가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판례 등을 원용해 기각 결정한 아동학대 혐의 사안에 대해, 군청이 조사하면서 피신청인인 A씨의 진술을 받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의위원회(사례결정위원회)도 열지 않고 정반대의 결론(학대)을 내렸으니 다시 조사해달라는 것이다.</p> <p>이에 대해 군청 담당자는 “도 학생인권센터는 복지부가 아닌 교육부 소관이어서 (학생인권센터 조사 자료는) 참고자료일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탐내 자체 사례 회의를 통해 아동학대가 분명하다고 판단했고 그럴 경우 심의위원회는 필수 사항이 아니다.”며 절차상 하자를 일축하고 있다.</p> <p>검찰의 기소 여부와 진안군청의 향후 대응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안의 한 초등학교의 초등 돌봄 교실에서 돌봄 전담사 A씨는 학생들이 물 마시기 게임을 하는 중 한 학생이 사례에 걸려 고통스러워하자 물 마시기 게임을 중단하고 감정카드 놀이를 제안함 - 그 과정에서 물 마시기 게임을 주도하던 학생 B가 다른 놀이를 시작하는 것에 대해 좋지 않은 기색을 보이며 참가하지 않았고, 한 달 후 학생 B의 학부모는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에 아동학대를 이유로 구제신청을 함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대해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는 네 차례의 조사를 진행했으며,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 제49조와 조례 시행령 제19조 제3항, 대법원의 판례를 근거로 구제 신청을 기각함 - 학생 B의 학부모는 이에 군청 아동학대전담부에 다시 이 사건을 신고하였고, 군청에서는 이를 아동학대로 판단하여 바로 이 사건이 경찰에 송치됨, 이에 대해 돌봄전담사 A씨는 검찰 송치 이전에 피신청인인 A씨의 진술을 듣지 않았으며, 또한,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는 점에서 절차의 하자를 주장하며 집회를 하고 있음.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전담사나 교육자의 정당한 훈육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 문제됨 - 아동학대 여부를 조사하는 기관 사이에 자료 및 판단 근거의 상호 공유가 필요함 - 아동학대 사건에 있어서 물론 아동의 보호가 최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신고를 받은 피신청인의 권리 보호도 철저하게 지켜져야 함. 이러한 절차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 최근 교권 침해 문제가 계속되고 있고, 교권침해나 교육자에 대한 과도한 훈육 제한은 오히려 학생들의 교육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 - 정당한 훈육과 아동학대 사이의 경계의 문제로 아동, 학생의 인권과 교권보호를 위해 균형점 찾을 필요가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사건의재구성]진안지역 초등돌봄교실 아동학대 논란 / 전북일보 (2022.8.24.) https://www.jjan.kr/article/20220824580117</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학대로 몰릴까 전전긍긍... 위기의 초등교실/ 채널A (2022.8.5.)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8438 - “수업방해하면 학생부에 기록” 교권보호 나선다 / EBS뉴스 (2022.8.23) https://news.ebs.co.kr/ebsnews/allView/60248177/N - 어린이집서 잇단 아동학대... 대응 매뉴얼 ‘유명무실’ (2022.08.0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8050122 - 복지관 아이 거꾸로 들어 발로 툭툭...담당 아동 학대한 언어치료사 (2022.08.18.)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08/18/GOVK4E6G3JFGD5KKLJFT33ZKI3/ |
| 타 시도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주 광산경찰서, 지역아동센터 방문..학교, 성폭력, 아동학대 예방 교육 /매일일보 (2022.8.9.) http://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941120 - 교권침해 해법은...교육현장 “생활지도권 강화 입법 필요” / 연합뉴스 (2022.7.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728157800061?input=1195m - 충남도의회 교육위, 교육청과 대립..교권과 학생인권 무엇이 먼저? /뉴스프리존(2022.7.13.) http://www.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393418 -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낮잠·급식시간 아동학대 예방 매뉴얼 배포 |

| | |
|--|--|
| | (2022.08.20.) https://www.ibaby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7538 |
|--|--|

| | | | |
|-------|--|----|------------|
| 제목 | 코로나 재유행속 재감염 속출... 개학 어쩌나 | 번호 | 26 |
| 출처 | 전북중앙 | 날짜 | 2022.8.23. |
| 기사 주소 |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918364 | 기자 | 정병창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휴식을 취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1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 학교의 개학으로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재감염의 확산이 우려됨. | | |
| 기사 내용 | <p>코로나 재유행속 재감염 속출... 개학 어쩌나</p> <p>사회일반 입력 2022.08.23 18:32 수정 2022.08.23 19:12</p> <p>정병창 jbc@jjn.co.kr</p> <p>도내 1일 확진자 5,393명 이달 재확진 7,017명 집계 교육청 3주간 학교집중방역 당국 "개인방역의식 중요"</p> <p>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탓으로 전북지역 사회가 우려감속에 크게 위축 되고 있다.</p> <p>개인 방역이 중요시되는 '각자도생' 분위기 속에서 우려했던 재감염 상황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이다.</p> <p>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북지역 확진자 수는 5,393명으로 집계됐다.</p> <p>전북지역 확진자는 지난 6월 7,654명까지 줄었다가 지난 7월 4만 5,264명으로 증가했다.</p> <p>이달 들어 10만 1,9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p> <p>본격적인 개학철을 맞아 코로나19 재유행 탓으로 전북지역 사회가 우려감속에 크게 위축 되고 있다.</p> <p>개인 방역이 중요시되는 '각자도생' 분위기 속에서 우려했던 재감염 상황이 돌출되고 있기 때문이다.</p> <p>18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북지역 확진자 수는 5,393명</p> | | |

| | |
|--|--|
| | <p>으로 집계됐다.</p> <p>전북지역 확진자는 지난 6월 7,654명까지 줄었다가 지난 7월 4만 5,264명으로 증가했다.</p> <p>이달 들어 10만 1,924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된 것으로 조사됐다.</p> <p>최근 코로나가 다시 확산세를 보이면서 재확진 사례도 크게 늘었다.</p> <p>실제 전날 기준, 도내에선 이달 들어 총 7,017명이 ‘재확진’된 것으로 집계됐다.</p> <p>코로나19 초기부터 현재까지 전북지역 내 총 9921명이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감안하면, 10명 중 7명(70.7%)꼴이 8월 중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p> <p>이처럼 코로나19 재유행이 뚜렷한 가운데 재확진까지 속출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흘러나오고 있다.</p> <p>전주 금암동에 사는 학부모 강모(여·41)씨는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인데 고열에 기침, 인후통이 심해 키트를 했고 한 줄이라 안심하고 병원을 갔는데 재확진일 리 없다며 약만 지어줬다”면서 “며칠 뒤 열도 떨어지고 학교에 갈 수 있을 듯해 키트를 또 해보니 그제야 두 줄이 나왔다.</p> <p>첫 확진 이후 45일 만이다”고 토로했다.</p> <p>효자동에 사는 학부모 김모(여·45) “아이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코로나19에 재확진되는 걸 보니 앞서 백신 접종으로</p> |
|--|--|

| | |
|------------------|--|
| | <p>생긴 면역력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다”면서 우리 가족도 불안한 건데 한가지다”고 우려했다.</p> <p>중화산동에 사는 직장인 양모(남·50)씨는 “방역 제한 같은 게 다 풀려선지 마스크를 안 쓰는 등 소홀한 모습이 여기저기서 보이는 한편 증상이 있는데 검사를 안 받는 사람들도 있어 걱정된다”면서 “그간 연휴가 있을 때마다 코로나가 퍼졌는데, 곧 다가올 추석 때도 또 한 번 퍼지는 게 아닐지 모르겠다”고 말했다.</p> <p>이와 관련, 전북교육청은 정상 등교가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개학 전후 3주간 학교 집중방역 점검기간을 운영하며, 방역물품 점검·방역 전담인력 확보 등 학교 방역 대응 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p> <p>전북도방역당국 관계자는 “최근 들어 지난 감염 확산 초기 확진됐던 사람들이 다시 확진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전과 달리 일률적인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지 않다 보니 더욱 개인의 방역 의식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다”고 설명했다.</p> <p>이어 “현재 추진되는 방역 조치들은 일상적인 활동들이 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확진자 규모를 조절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아이들의 등교 등 일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개학이 시작된 시점에서 전염병인 코로나19의 재감염이 확산되고 있음 - 전북지역 재감염의 70%가 8월중에 발발하여 코로나19의 재유행, 재감염의 불안을 가질 수밖에 없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러나 교육당국의 현방침은 개개인에게 방역을 당부할 뿐, 방역 물품 점검, 방역관련 인력 확보 등의 소극적인 대응만을 하고 있어 우려를 안김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대적으로 면역력에 취약한 학생들의 경우 밀폐된 공간에서 오래 있어야 하고, 감염의 우려가 높으므로 적극적인 방역조치가 필요 - 또한 재감염, 재확산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학생들 개개인에게 방역의식 및 노력을 요구한다고 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님 - 교육청은 행정력을 활용하여 현재 필요한 방역대책을 다시 점검하고, 감염된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 및 방역을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함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불안한 개학, 예방에 만전 기해야 / 전라일보(2022.08.24.)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549</p> <p>[부실방역 속 불안한 개학] 재확산 뚜렷한데 학교 보내도 되나 / 전라일보(2022.08.23.)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65457</p> |
| 타시도 사례 | <p>충북교육청, 2학기 학교별 집중방역 지원 컨설팅 https://www.breaknews.com/919470</p> |

| | | | |
|-------|--|----|------------|
| 제목 | 골든타임을 지켜라'...학교 '위기학생' 사각지대 없앤다. | 번호 | 27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8.09. |
| 기사 주소 | http://www.jjan.kr/article/20220809580206 | 기자 | 이 강 모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전북교육청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함. | | |
| 기사 내용 | <p>골든타임을 지켜라'...학교 '위기학생' 사각지대 없앤다</p> <p>홍이길모 ⑤입력 2022-08-09 16:47 ⑤수정 2022-08-09 16:47 ⑤댓글 0</p> <p>전북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 구성, 위기발생학교 집중 지원 그간 전문인력없어 고위험군 긴급상담, 상담·치료비 운영 등에 그쳐</p>  <p>전북교육청이 위기에 놓인 학생 지원의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학교생활에 적응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p> <p>서거석 교육감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4일 첫 확대간부회의를 시작</p> | | |

| | |
|-------|---|
| 내용 분석 | <p>으로 매주 위기학생 지원 강화 방안 마련을 주문했고, 학교폭력통합 관리시스템 운영과 위(Wee)클래스 확대 및 전문상담교사 확대 배치를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다.</p> <p>이번에 구성된 도교육청 차원의 위기 긴급 지원단은 기존 도교육청 위기지원팀과 지역교육지원청 위 센터 전문 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됐다.</p> <p>그간은 고위험군 긴급 상담, 상담·치료비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등 위기에방 지원을 위해 위기지원팀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위기사안 발생학교에 대한 집중 투입은 한계가 있었다.</p> <p>특히 군 단위 지역은 위기 대응 전문 인력이 충분하지 않아 위기사안 발생학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다.</p> <p>이에 도교육청은 위기사안 발생학교의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문기관과 위 센터 전문 인력 등이 함께하는 긴급위기지원단 구성이 시급하다고 판단,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하게 된 것이다.</p> <p>위기 긴급 지원단은 위기사안발생학교 애도교육·특별 상담·고위험군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운영 지원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p> <p>도교육청 관계자는 “도교육청 차원의 긴급 위기 지원단은 상담 인력이 부족한 군 단위 교육지원청과 위기사안발생학교의 위기재발 방지와 예방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로의 복귀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학생들의 위기 극복 능력을 키우고, 예방·진단·치료까지 더욱 세심하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
| | |

| | |
|--|--|
| <p>및 쟁점 사안</p>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교육청이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학교생활에 적응력 높이기 위해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인 ‘전라북도교육청 위기 긴급 지원단’을 구성, 운영함 - 위기 긴급 지원단은 도교육청 위기지원팀, 지역교육지원청 위기센터 전문 인력,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전문상담사 등 26명으로 구성됨 - 군 단위 지역 인력부족으로 인한 위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의 방지를 위해 위기사안발생학교 애도교육, 특별상담, 고위험군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 상담, 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 운영 지원 등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군 단위 지역 학교의 경우 학교폭력, 학습부진, 가정환경 등의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심리 상담이 필요한 학생들이 전문 인력의 부족으로 적시에 바로 도움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음. <p>도교육청 주관의 위기학생 지원 긴급 통합 시스템 구축은 위기재발 방지와 예방에 극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학교와 교사,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교육청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이 중요함.</p> <p>“위기 학생 사각지대 없도록...전북교육청 ‘긴급 지원단’ 운영” / 연합뉴스(2022.08.09.) https://www.yna.co.kr/view/AKR20220809114400055?input=1195m</p> <p>도교육청, 위기학생 지원 강화/새전북신문(2022.08.09.)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3769</p> |
| | |
| | |

| | |
|-----------|--|
| 타시도 사례 | 진단·신고·상담 원스톱으로...금천구 '학교폭력 안전온' 운영/뉴스 원(2022.05.04.) https://www.news1.kr/articles/?4670076 |
| | |

| | | | |
|-------|---|----|-----------|
| 제목 | 촉법소년, 형사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 고려해야 | 번호 | 28 |
| 출처 | 경향신문 | 날짜 | 2022.8.08 |
| 기사 주소 | https://m.khan.co.kr/opinion/contribution/article/202208080300055#c2b | 기자 | 최 원 훈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체의 자유 <형사 책임능력> - 교육받을 권리 <교화 가능성> | | |
| 주제 | - 촉법소년 연령 기준과 관련하여, 형사 책임능력과 교화 가능성을 고려해야한다. | | |
| 기사 내용 | <p>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를 둘러싼 쟁점 중 하나는 ‘형사 책임능력’이다. 형사 책임능력은 자기 행동의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을 통제할 능력이 있다고 법이 인정하는 개인의 지적 상태이다. 촉법소년은 형사 책임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의 대상이 된다. 소년법 폐지나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요즘 청소년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보다 정신적·신체적으로 성숙해서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책임질 수 있다고 한다.</p> <p>전체 소년범죄 중 무면허 운전의 예를 들어보자. 촉법소년 A군(13)은 가출해 차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했다. 일반적인 청소년은 무면허 운전을 하지 않는다. 가정과 학교에서 체득한 최소한의 준법성과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A군은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로 신경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책임능력이 없는 상태였다. 소년부 판사는 A군의 재범을 막고 소년원에서 보호와 치료를 하기 위해 9호 처분(소년원 6개월)을 결정했다.</p> <p>과거 성인 보호관찰 업무를 맡았을 때 대상자 중 음주운전과 무면허 운전으로 재판을 7회 받은 중년 남성이 있었다. 형사법정에 일곱 번 서는 동안 실형을 선고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벌금형과 집행유</p> | | |

| | |
|---------|--|
| | <p>예, 보호관찰 처분만 받았다. 형사책임 능력이 있는 대부분의 성인들은 음주운전을 하고 싶은 욕구와 충동을 느끼지 않는다. 그런데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반복한 성인범이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p> <p>반면 소년부 법정에서는 오토바이나 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해 보호처분 중 9호나 10호 처분(소년원 2년)을 받는 소년들이 많다. 물론 그 중에는 촉법소년들도 있다. 형사 책임능력이 있는 어른들은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해도 형의 집행을 유예받고 사회 내 처우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아 자유를 누리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과 비교했을 때, 자유를 박탈당하고 최대 2년 동안 소년원에 수용된 촉법소년은 가벼운 처분을 받은 것일까?</p> <p>촉법소년 연령 하향의 다른 쟁점은 보호처분의 ‘교화 가능성’이다. B양(16)은 사기로 장기 보호관찰 처분(2년)을 받았다.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의 일명 ‘현금 수거책’ 역할을 맡아 피해자에게서 현금을 건네받아 편취했다. 물론 몸통인 조직은 돈을 받고 중국으로 도주했다. 어른도 기망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이 청소년을 범죄에 이용하는 것은 손쉬운 일이었다. B양은 지병으로 집에서 요양 중인 어머니와 단둘이 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으로 생활하고 있었다. 범행 이유는 학원비가 필요해서였다. 자신이 목표로 하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학원’에 다니고 싶었다. 생애 첫 범죄였다. B양은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과 원호를 받으며 재범 없이 성실하게 생활했다. 보호관찰이 종료될 무렵, 사회복지학과에 진학했고 열심히 대학생활을 하고 있다.</p> <p>촉법소년 연령만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형사 책임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위기청소년을 보호처분으로 교화하고 재사회화하는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에 관심을 가지고 정책 역량 제고에 집중해야 한다.</p> |
| 내용 분석 및 | <p>- 촉법 소년은 형사책임능력이 없어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처분</p> |

| | |
|---------------|--|
| 쟁점 사안 | <p>의 대상이 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종 범죄의 경우 성인에 비해 실형에 가까운 9호, 10호 처분을 받는 비율이 높음 - 촉법소년 연령만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됨. 위기청소년을 교화하고 재사회하는 대책에 관심이 필요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년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재범률이 높아짐. 촉법소년임을 악용해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수가 높아지는 상황임 - 공교육 등 제도권에서 이탈해 학교 밖으로 나가기까지 가정 말고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사회보호망이 없음 - 촉법소년의 교육 및 보호처분 집행에 교육당국이 참여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촉법소년 연령 하향, 이거 알면 쉽게 추진 못합니다. [진단] 촉법소년에 대한 오해와 진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사례들 / 오마이뉴스 (2022.07.11.)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44119)</p> <p>14세 미만 소년 범죄율 증가...재범률 높아 / 동아경제 (2022.08.22. http://www.daenews.co.kr/news/view.php?no=17019)</p> <p>위기 청소년을 구할 컨트롤타워가 없다 / 한겨레(2020.07.11.) https://www.hani.co.kr/arti/opinion/because/1050519.html)</p> |
| 타 시도 사례 | <p>‘갱생이 불가능’하다고? 청소년이기에 무한한 가능성 있다. https://www.nocutnews.co.kr/news/5723801</p> |

| | | | |
|-------|---|----|------------|
| 제목 |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 아냐... 어른 관점 문제 해결일 뿐” | 번호 | 29 |
| 출처 | 국민일보 | 날짜 | 2022.8.18. |
| 기사 주소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547158?sid=103 | 기자 | 권혜숙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을 추구할 권리(헌법 제10조) - 어린이들의 놀 권리: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들의 창의성,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린이들로부터의 결정이 필요하다. | | |
| 기사 내용 |  <p>신드롬에 가까운 화제를 낳은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장애인 탈북민 노인 영세업자 같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주로 다뤘다. 그중에서도 학원에 내몰린 아이들을 해방하겠다는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방구뽕이 등장한 회차는 자체 최고시청률 15.8%를 기록했다.</p> <p>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이름으로 개명까지 한 방구뽕이 자신의 어머니가 운영하는 학원 버스를 훔쳐 학원 아이들과 산에서 신나게 놀</p> | | |

| |
|--|
| 고 난 뒤 납치 혐의로 법정에 서는 이야기가 그려졌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건강해야 한다. 어린이는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는 방구뽕의 어린이 해방 선언에 많은 시청자가 공감했다. 그런데 국내에서 놀이와 놀이터 담론을 주도해온 놀이운동가 편해문(53)씨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어린이의 현실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돌아볼 수 있게 한 좋은 텍스트이지만 적어도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스튜디오에서 그를 만났다. |
| -강연 동영상에 ‘어린이 해방군 대장님! 방구뽕~ 실존인물이네요’라는 댓글이 붙었다. |
| “방구뽕을 보면서 저를 떠올린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저도 가족과 재미있게 보는 드라마여서 그런 말을 들으면 기쁘고 즐거워야 할 텐데, 되레 불편하고 마음이 무거웠다.” |
| -어떤 점이 불편했나. |
| “물론 드라마는 드라마로 봐야 하고, 드라마 한 편에 놀이에 대한 모든 것을 담기 어렵겠지만 드라마에 표현된 방구뽕은 어린이 해방군이 아니라고 본다.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것은 어린이 해방군이 나타나 학원에서 탈출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환경이다. 어린이들이 소영웅으로부터 구원받는 식으로 그려진 것도 씁쓸하다. 어린이를 가두는 것도 어른이고, 어린이를 해방하는 것도 어른이라는 묘사는 한계가 분명하다.” |
| -성인들의 관점에서 성인 주도로 어린이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는 지적인가. |
| “어른들이 뒤로 물러나야 아이들이 앞으로 나갈 수 있다. 그런데 자꾸 어른들이 앞에 나오려 한다. 방구뽕이 아이들에게 따라 하라고 |

하지 않나.”

-어린이 해방 선언을 복창하는 것 말인가.

“그것도 주입식이다. 방구뽕이 ‘애들아, 놀자’ 고 하는데, 어른이 권유하고 이끌어가는 건 놀이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아이들끼리 ‘애들아, 놀자’ 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우리의 일이지 ‘애들아, 놀자’ 면서 나서는 어른은 엄격하게 말하면 놀이 훼방꾼이자 놀이 방해꾼이다. 아이들끼리 놔두면 어떻게 놀고 뭐가 되겠냐는 불신이 있다. 아이들은 놀이를 배우지 않아도 잘 논다. 그렇게 노는 게 싱거워 보여도 진지한 놀이라고 봐줄 수 있어야 한다.”

그는 아이들의 놀이에 개입하지 않는다. 놀이가 아이들 안에 있기 때문에 놀아주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가 디자인한 놀이터들도 마찬가지다. 놀이기구 중심의 놀이터가 아니라 놀이 중심의 놀이터를 표방한다. 전남 순천 ‘기적의 놀이터’ 1호는 잔뜩 펼쳐진 모래밭에 언덕만 우뚝 있는데도 하루 300~400명씩 찾아와 평균 3시간을 놀다 가고, 1년에 아이들 10만여명이 이용하는 명소가 됐다.

-방구뽕이라는 캐릭터가 극단적이기는 하지만 아동인권과 놀이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다고 생각한다. 어린이 해방 선언문에 모든 게 담긴 것 아닌가.

“ ‘어린이는 당장 놀아야 한다’ 는 건 제가 지난 10년간 강의 때마다 하던 말이다. 세 가지 선언 모두 고대부터 지혜로운 사람들이 해왔던 굉장히 중요한 말이다. 이건 지금보다 더 널리 알려지고 더 많이 써야 할 문구라고 생각한다. 다만 방구뽕이라는 캐릭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소영웅주의에 빠진 행동으로 어린이의 놀이 환경이 개선될 거라고 믿는다면 위험천만한 생각이다.”

-부모의 동의 없이 아이들을 산으로 데려가고 학원 버스 운전사에게 수면제를 먹여 재우는 행동은 그렇다.

“아이들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방구뽕의 행동은 어린이 가까이 있는 활동가들에게는 상상도 할 수 없고 어떤 경우에도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덧붙여서, 방구뽕이 학원 버스에서 아이들에게 ‘여기서 선택을 해라. 내릴 사람은 내리고 탈 사람은 타라’ 고 묻는다. O 아니면 X로 선택이 강요되는 상황인데 어른들은 선택할 수 있는 보기 두 가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그 두 가지 중에 아이들이 원하는 게 없으면 어떡하나. 한국 사회와 성인들이 어린이를 어떻게 대하는지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방구뽕이 극복하고 넘어서려고 하는 어른들의 생각이 방구뽕에게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 ‘정인이 사건’ 을 통해 한국 사회가 아동인권에 민감해졌다고 하지만 아이들의 놀 권리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드라마가 논쟁할 만한 주제를 만들어줘서 고맙다. 한국의 어린이들이 처한 상황 중에 가장 어려운 점은 도무지 선택을 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자란다는 것이다. 놀이의 관점에서 봐도 성인 주도의 놀이 활동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 어른이 주제를 정하고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하는 곳들이 넘쳐난다. 놀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 아이들이 ‘우리 언제 놀아요’ 라고 물어보는 일이 벌어진다.”

-놀이 학습, 체험 교육, 키즈카페처럼 돈 들이지 않고 놀 수 있어야 놀이라고 했다.

“하자고 하는 걸 하는 게 놀이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놀이다. 물론 어떻게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겠냐. 그런데 냉철하게 봐야 할 것은 아이들이 하고 싶은 것을 어른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압도적이란 점이다. 그러면서 창의적이고 참신한 생각을 하는

| | |
|--|--|
| | <p>어린이로 커야 된다고 한다. 거칠게 말하자면 사기와 다름없다.”</p> <p>-어릴 때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하지 마’ 였는데 청년이 되면 갑자기 ‘도전해라, 도전 정신을 가져라’ 고 한다는 말씀이 와닿았다.</p> <p>“방구뽕을 보고 난 후 대부분의 반응이 눈물이 났다거나 가슴이 답답했다는 것이다. 공부를 무진장 시킨다는 ‘무진학원’ 이나 문을 잠근다는 ‘자물쇠반’, 고카페인 음료 상용,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학원에 있는 ‘텐투텐’, 체벌을 해도 좋다는 부모들의 서약서, 전혀 모르는 사실이 아니지 않았나. 변화가 일어나려면 눈물짓는 개인적 카타르시스를 넘어서 아이들의 놀이와 건강과 행복에 대한 사상, 철학, 행동이 필요하지 않을까. 동감은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무력감을 느끼기 때문에 답답함이 생기고, 그럼 상황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다.”</p> <p>-그럼 지금 어떤 행동이 필요한가.</p> <p>“허용이다. 아이들에게 허용할 수 있는 선택지를 조금씩 늘려가고 아이들이 결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허용을 하지 않으니 양육자와 아이들이 서로를 계속 비끄러매고 어긋나게 된다. 해방은 아이들한테도 어른들에게도 필요하다. 해방은 해방군이 와야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허용해줄 때 온다고 생각한다.”</p> <p>-이상주의자라거나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p> <p>“아이들 가까이에서 일을 하려면 오히려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돼야 한다. 아이들과 어울리는 데 제약이 많기 때문이다. 저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실험과 도전, 탐험을 하면서 아이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지 잘 안다. 자유 놀이를 하는 아이들은 유능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적이다.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한나절</p> |
|--|--|

| | |
|-----------------------------|--|
| | <p>지내면 회복이 된다.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런 구체적인 즐거움과 변화를 보고 있다. 우리는 망상가가 아니고 해방군도 아니고, 현실 속에서 아이들과 땀 흘리면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다.”</p> <p>-다음 프로젝트로 대형 뱅에 놀잇감을 싣고 어린이들을 직접 찾아가는 구상을 한다고 들었다.</p> <p>“ ‘플레이 앰블런스’ 라고 이름을 붙였다. 이제는 놀이터를 만들어서 아이들이 오기를 기다릴 시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시골에는 어린이들이 접할 만한 문화가 너무 부족하다. 공공 놀이터만 놀이터인 게 아니라 아이들이 노는 곳이 놀이터다. 플레이 앰블런스 문을 여는 그곳이 놀이터라는 생각으로 올가을부터 가동하려 준비하고 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p>- 최근 방영된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9화에서는 어린이의 놀 권리에 대한 주제가 방영되어 화두로 떠오름. 극 중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이라 지칭하는 ‘방구뽕’ 은 어린이들을 학원으로부터 탈출시켜 ‘어린이의 놀 권리’ 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함.</p> <p>- 그러나, 아이들의 창의성, 자기 주도적 문제해결능력 개선을 위해서는 어른들 시선에서의 해방이 아닌 오롯이 어린이들로부터의 결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어른들은 ‘허용’ 이라는 태도가 필요함.</p>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p>- 우리나라의 어린이들은 선택을 강요받는 사회에서 지내오기 때문에 자기주도적 해결법에 대해 배울 기회가 매우 적음. 하지만 막상 어른이 되면 ‘도전하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창의성이 필요하다.’ 등의 말에 간히게 됨</p> |

전라북도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10.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 1) 활동일시 : 2022년 9월 1일 ~ 9월 30일
-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구제를 위한 권리
-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9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9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 | |
|---------------|---|
| | <p>-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에는 비교적 어린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어른의 관점에서 지어진 놀이시설이기 때문에 창의력이 생겨나기에 제한적임</p> <p>- 따라서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의견을 내어 운영되는 놀이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나는 이상한 학원의, 이상한 강사였다 / 오마이뉴스(2022.08.09.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62488?sid=102)</p> <p>[사회복지 실습 이야기]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 새전북신문 (2022.08.16.)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4193)</p> <p>“어린이는 놀아야 한다!” ‘우영우’ 방구뽕 철학, 헌법에 담길까? / 헤럴드경제 (2022.08.04.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220804000653)</p> <p>납치범이 된 서울대 나온 ‘방구뽕’ ... 어린이의 ‘인권’을 묻다 / 오마이뉴스 (2022.07.30.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047/0002361502)</p> |
| 타시도 사례 | <p>“어디서 놀지?” 청주시, 어린이 놀 곳 알려주는 놀이터지도 제작 https://www.news1.kr/articles/4776818</p> <p>아동친화도시 영주, 놀권리 보장·확충 나선다 http://www.idaegu.com/newsView/idg202206260095</p> <p>인천 서구, “아동인권은 우리 손으로” 연꽃기법 홍보 ‘눈길’ http://www.ewe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93011</p>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시도 유사사례 및 타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 2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1 | 1 |
|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1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1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건강에 관한 권리 | | 1 | |
|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3 | 4 |

4.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9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타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11조 휴식을 취할 권리, 제22조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 주요 내용으로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노키즈존과 같은 노존(No Zone)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 유사한 내용으로서, 어린이 비하 표현은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타 시도 사례로서, 수업시간 중 화장실,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9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교권 침해 예방·위기 행동 학생 제재 위해 ‘학생생활지도권’ 보장돼야 | 번호 | 30 |
| 출처 | 프레스리안 | 날짜 | 2022.9.05 |
| 기사 주소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90516113434573 | 기자 | 최인 |
| 인권 범위 |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 |
| 주제 | -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관련법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필요하다. | | |
| 기사 내용 |  <p>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p> <p>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공청회’를 5일 오후 2시 전주비전대학교 비전컨벤션홀에서 개최했다.</p> | | |

| | |
|--|---|
| | <p>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교총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현황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과제’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침해 사례를 설명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p> <p>김 본부장은 “△생활지도법 조속 마련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의 교육지원청 이관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교육청 차원의 고발 등 적극 대응 권고 △무고한 ‘아동복지법’, ‘아동학대특례법’ 고소·고발로부터 억울한 교원 보호 방안 마련 △시·도교원치유센터 내실화” 등을 제안했다.</p> <p>김 본부장은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과 교육활동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교육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가 교권보호의 파수꾼과 든든한 지원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p> <p>토론자로 나선 전북교총 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전교조 전북지부 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 전북교사노조 장세린 대변인 등도 생활지도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나 조례 제·개정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p> <p>오준영 정책연구위원장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것”이라면서 “법령에 생활지도권 보장을 명시해야 한다.”고 말했다.</p> <p>김재욱 전주초등지회장은 “교육기본법 12조는 학생의 의무를 서술하고 있는데 여기에 ‘교원의 정당한 지도를 따른다’는 내용을, 13조 보호자에 관한 내용에는 ‘보호자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
|--|---|

| | |
|---|--|
| | <p>장세린 대변인은 “교권침해 사안 해결의 최종 도달점은 수업의 정상화여야 한다.”면서 “교사에게 주체적 권한 부여, 관리자의 역할 및 권한 부여, 교사의 업무 및 교육활동에 대한 교육청의 보호책임과 권한 강화 등 세 가지 측면에서의 추진방향”을 제안했다.</p> <p>이날 공청회는 최근 교육 현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어려운 숙제인 교육활동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교권침해 예방 및 교육활동 보호에 관심 있는 교원 100여 명이 참석했다.</p> <p>또한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적극 보호하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균형 있게 높이겠다고 약속한 서거석 교육감이 참석해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경청했다.</p> <p>서 교육감은 “교육을 담당하는 제1주체는 교사다. 학교에서 교권이 흔들리면 수업이 흔들리고 충실한 생활지도가 어려워진다.”면서 “학생 중심은 어디까지나 탄탄한 교권 하에서만 가능하다. 앞으로 전북 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한 법률지원단을 확대·운영하고, 관련 조례를 개정해 교사들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권 침해를 예방하고 교권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법의 개정이나 조례의 제·개정이 시급함. - 행·재정·법률적 권한이 거의 없는 학교장이 교사의 교권과 교육 활동을 보호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가장 어려운 것은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한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제어할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음.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을 교육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의 제한이 |

| | |
|------------------------|--|
| | <p>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권의 침해를 방지하는 법과 학생의 인권은 공존할 수 있음. -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하면, 나머지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단독] 익산 초등생 교권침해 고발 교사 징계 ... 전북교육청, 성실의무 등 위반 / 에듀프레스(2022.9.24.) http://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9547</p> <p>“못때리면서 기강잡고 X랄” ...공포의 제자, 교사 888명 때렸다 / 중앙일보(2022.07.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87110</p> <p>학생에 의한 교권침해, 1년새 2배로 증가...모욕·명예훼손 많아 / 연합뉴스 (2 0 2 2 . 0 9 . 2 5 .)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5019500001</p> |
| 타 시도 사례 | <p>학생 교권침해 급증...“피해 교사·가해 학생 분리시켜야” / 데일리안(2022.09.25.) https://dailian.co.kr/news/view/1155927/</p> |

| | | | |
|-------|--|----|-----------|
| 제목 | “저기, 노키즈존인가요?” “아니요, 여기는 예스 키즈존입니다!” | 번호 | 31 |
| 출처 | 조선일보 | 날짜 | 2022.9.24 |
| 기사 주소 |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2/09/24/J2MZK24JNGT3EABSQ5T6A2N3U/?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 기자 | 배준용 |
| 인권 범위 |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8조) | | |
| 주제 | - 노키즈존과 같은 노존(No Zone) 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나이를 이유로 하는 차별은 개선되어야 한다. | | |
| 기사 내용 |  <p>“Yes Kids, No many People(아이들은 들어올 수 있지만 많은 손님은 받을 수 없습니다).”</p> <p>전북 전주시 완산구에 있는 일식집 ‘백수의 찬’에는 영·유아, 어린이 손님이 입장할 수 있다는 ‘예스키즈존(Yeskids Zone)’ 안내문이 붙어있다. 최근 가게 홍보용 트위터에는 “한가할 때는 아이를 대신 안아 드립니다. 조카 손님이 많아 경험이 많으니 안심하세요.”라는 안내문도 올렸다. 홍정애(37) 사장은 “가게가 작아서 일행이 5</p> | | |

명 이상이면 받지 못하지만, 그것 말고는 별다른 제약이 없다” 고 말했다.

7년 전 개업할 때부터 예스키즈존이었던 건 아니다. 홍 사장은 “노키즈존이 등장하기 전엔 그저 손님이 자녀를 데리고 오면 다 같은 손님으로 받았을 뿐” 이라고 했다. 하지만 노키즈존이 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자 생각이 조금 달라졌단다. 그는 “친한 친구가 아기를 낳았는데 문득 ‘친구가 아이와 함께 외식을 갔는데 노키즈존을 마주하면 굉장히 섭섭하겠다.’ 는 생각이 들더라. 저희 가게라도 예스키즈존으로 표시를 해야겠다고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 예스키즈존 “노키즈존과 맞서려는 것 아냐”

최근 전국 곳곳에선 ‘예스키즈존’ 을 선언하는 가게가 하나둘 늘고 있다. <아무튼, 주말>이 만난 예스키즈존 가게들은 대부분 “최근이 아니라 이전부터 어린이·유아의 출입을 허용하고 있었다.” 고 말했다. 이들이 근래 ‘예스키즈존’ 을 공개적으로 안내하고 나선 건 “노키즈존에 텐 부모가 늘었기 때문” 이란다. 서울 한 카페 사장은 “예스키즈존이라고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게로 ‘아이를 데려가도 괜찮냐’ 는 문의 전화가 점점 늘었다.” 며 “한번은 아이를 데리고 온 손님이 쭈뼛쭈뼛 서 있기에 물으니 ‘노키즈존인지 살피고 있었다’ 고 하더라. 그때 ‘예스키즈존이라는 걸 알려야겠다’ 는 생각이 들었다.” 고 말했다.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는 일식집 ‘백수의 찬’에는 예스키즈존임을 알리는 안내문구가 붙어있다. 백수의 찬 홍영애 사장은 “가게가 작아 일행별 인원수 제한은 있지만 어린이나 아이들은 얼마든지 입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예스키즈존 가게들은 “노키즈존과 대립하거나 맞서려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 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있었다. 홍영애 사장은 “어른 손님이 소란스럽게 굴거나 술에 취해서 주정을 부린다고 입장을 거부하진 않지 않느냐. 유독 아이들만 금지하는 건 ‘약자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고 했다.

어린이·유아 출입은 물론 이들을 적극 배려하는 예스키즈존도 적지 않다. 경기 시흥의 스페인 음식점 ‘바오스엔밥스’ 는 매장 내에 수유실과 놀이방이 있고, 키즈 전용 메뉴도 별도로 제공한다. 주은지(32) 점장은 “사실 유아·어린이들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거나 하는 건 당연한 거고 결국 중요한 건 어른들이라고 생각한다.” 며 “예스키즈존은 어린이 동반 손님만 오는 배타적인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손님이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용하는 식당이 되기 위한 것.” 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자체는 관내 식당 중 예스키즈존을 지정해 지원하는 사업에 나서고 있다. 부산 금정구는 지난 7월 어린이 동반 손님에게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뜻을 밝힌 음식점들을 현장 심사해 10곳을 ‘금정 예스키즈존’ 으로 지정했다. 금정구는 “지정된 업체에 예스키즈존 표찰과 유아용 수저·식기 세트를 제공했다.” 며 “저 출산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돼보자는 취지” 라고 밝혔다.

◇ ‘No키즈’ 넘어 ‘No중년’ ‘No교수’ 까지…


예스키즈존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노키즈존이 점점 늘자 이에 대한 문제의식도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 이라고 말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에 유해하거나 시설 이용에 특별한 능력이나 주의가 요구되지 않는 한 노키즈존은 명백한 아동 차별” 이라며 철회 권고를 내렸다. 일부 아이와 부모가 무례한 행동으로 문제가 있었다고 해서 모든 아이와 부모의 출입을 제한하는 건 일반화의 오류라고도 했다.

| | |
|--|---|
| | <p>하지만 노키즈존은 아랑곳없이 느는 추세다. 노키즈존을 제재하거나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고 국민 여론이 노키즈존에 우호적인 영향도 크다. 지난해 한국리서치가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1%가 “노키즈존을 허용할 수 있다”고 답한 반면 “허용할 수 없다”는 응답은 17%에 그쳤다.</p> <p>현재 전국에 노키즈존 가게는 최소 400여곳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키즈존을 운영하는 가게들은 “가게에서 아이가 다치면 사업주가 보상 책임을 지고 심지어 형사처분까지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위험을 왜 감수해야 하느냐”며 이유 없는 차별이 아니라고 항변한다.</p> <p>최근에는 노키즈존을 넘어 갖가지 ‘노 존(No Zone)’이 등장하고 있다. 부산의 한 카페는 중·고등학생들이 카페 주변에서 흡연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며 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유스존(No Youth Zone)’을 적용해 논란이 됐다. 부산대 앞 한 술집은 ‘교수들이 갑질을 한다’며 ‘노교수존’ 안내문을 걸었다가 부산대 교수협의회 의 항의를 받고 안내문을 내리는 소동이 벌어졌다. 최근 서울의 한 야영장은 ‘40대 이상은 과음과 고성방가 등으로 이용객들에게 폐를 끼친다’는 이유로 ‘노중년존’을 적용해 논란이 일었다.</p> <p>◇ “연령·세대 아닌 행위를 문제 삼아야”</p> <p>일각에선 “차별 금지법을 제정해 노키즈존을 비롯한 부당한 차별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차별 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민호 변호사는 “사업주에게도 ‘영업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노키즈존이 정말로 차별에 해당하는지는 개별 사업장을 두고 법원이 일일이 따져보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가령 식당들이 뜨거운 뚝배기나 숯불 등 아이에게 위험한 요인을 들어 노키즈존을 적용한다면 법원으로서선 그해 합당한 사유인지 일일이 따져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p> |
|--|---|

| | |
|------------------------------|--|
| | <p>“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마련되더라도 줄줄이 위헌 논란과 법적 다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p> <p>전문가들은 “에스키즈존도 궁극적인 해법이 될 순 없다”며 “특정 연령층이 아니라 문제 행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 사항, 영업에 방해가 되는 구체적 행위를 제시하고 이용 제한이나 퇴장 요구를 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는 방법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노정태 경제사회연구원 전문위원은 “법과 제도가 개입하면 도리어 갈등이 증폭되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진다”며 “먼저 사회 문화적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키즈존이란 영유아와 어린이를 동반한 고객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으로, 성인 손님에 대한 배려와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종업원과 어린이가 부딪혀 어린이 손님이 화상을 입게 되자 법원이 부모의 책임 30%, 식당주인과 종업원 책임 70% 4,100만원의 배상을 판결한 후 상점들이 노키즈존을 실행하기 시작하여 현재 전국 곳곳에 노키즈존이 존재함. - 노키즈존에 이어 에스키즈존이 생겨나고 있고, 그 일례로, 전북 전주 완산구에 있는 일식집 ‘백수의 찬’에는 영·유아, 어린이 손님이 입장할 수 있다는 ‘에스키즈존(Yeskids Zone)’ 안내문을 붙임. - 에스키즈존을 알리는 상점들은 “노키즈존이 아이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은 공유하고, 아이들 동반 손님만 오는 배타적 공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손님이 조화롭게 서로 배려하면서 이용하는 장소를 만들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등의 이유에서 시작함. |

| | |
|---------------------|--|
| | <p>- 최근에는 노키즈존을 넘어 갖가지 노존(No Zone)이 나타나고 있는데, 나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임. 이러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령, 세대가 아닌 행위를 문제 삼아야 하고, 특정 집단을 배제시키는 것이 아닌 그러한 행위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함.</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현재에는 노키즈존 뿐만 아니라 노시니어존, 노틴에이저존, 노고수존 등 특정집단의 출입을 금지하여 일부의 문제를 집단 전체의 문제로 일반화하여 차별을 당연시 하는 문제까지 이어짐.</p> <p>- 최근에는 노키즈존 대신 문제 발생시 부모에게 책임을 묻는 케어키즈존도 등장하여 또 다른 차별이 아닌가 문제가 제기되기도 함.</p> <p>- 아이들에게 차별을 경험시키는 노키즈존이 해결 방법이 될 수는 없으므로 노키즈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음. 차별을 경험한 아이들이 차별을 당연시하지 않도록 개인의 재산권, 영업의 자유와 아동인권 사이의 조화로운 타협점이 필요함.</p> <p>- 노키즈존 전에 중요한 것은 아이를 대하는 사회의 태도, 오히려 가정에서 공공장소에서의 확실한 예절을 교육하고, 공공장소에서 생활하며 예절을 배우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동을 배제하기보다 사회공동체 일원으로 인식하고 존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다.</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 어린이 입장 거부하는 곳 많아...우리의 미래, 아이 존중하고 에스키즈존 많아지는 사회 되길 / 시빅뉴스(2021.12.15.)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918</p> <p>- 노키즈존서 쫓겨난 어린이는 어떤 어른이 될까 / 쿠키뉴스(2022.05.05.) https://www.kukinews.com/newsView/kuk202205030158</p> |


| | |
|------------|---|
| | <p>- “노키즈존 NO!” ... 어린이 환영하는 ‘에스키즈존’ 눈길 / 전북도민일보(2022.03.29.)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6470</p> <p>- 주린이, 헬리니, 요린이... “아동 무시하는 표현 안돼요” / 새전북신문(2022.09.21.)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57329</p> <p>-[현장에서] ‘노키즈존’ 논란은 현재진행형 / 아주경제(2022.08.22.) https://www.ajunews.com/view/20220812155810304</p> |
| 타 시도 사례 | <p>- 공공 키즈카페, 키즈오케이존.. ‘육아 편한 서울’ 시동 / YTN(2022.09.11.) https://www.ytn.co.kr/_ln/0115_202209110601427324</p> <p>- 서울시 “아이들 환영” 키즈오케이존 700여곳 만든다 / 시사뉴스(2022.08.20.) http://www.sisa-news.com/news/article.html?no=209453</p> <p>-[현장,그곳&] “노키즈존 대안” vs “새로운 유형의 차별” /경기일보(2022.07.06.) (출입을 허용하되 문제 발생시 보호자에게 책임을 묻는 ‘케어(care)키즈존’)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20706580173</p> <p>-경주엑스포대공원, 가족과 함께 YES키즈존을 즐겨요 / 오늘경제(2022.06.26.) http://www.startup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247</p> |

| | | | |
|-------|---|----|-----------|
| 제목 | 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아동권리 침해는 어떤 것? | 번호 | 32 |
| 출처 | 세계일보 | 날짜 | 2022.9.22 |
| 기사 주소 | https://m.segye.com/view/20220921510333 | 기자 | 김동욱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학생인권조례 제8조) - 행복을 추구할 권리 (헌법 제10조) | | |
| 주제 | - 어린이 비하 표현은 아동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 | |
| 기사 내용 |  <p>“주린이(주식투자 초보자)는 아동 비하 표현입니다. ‘노키즈존(어린이 제한구역)’도 강하게 반대합니다.”</p> <p>지난 20일 오후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인 전북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은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30여 명이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 활동을 발표하고, 진지하게 토론하는 열기가 달아올랐다. 행사에 참여한 초·중학생들은 5~7명씩 조를 짜 전</p> | | |

| | |
|--|---|
| | <p>지에 아동 권리 침해에 관한 사진을 붙이고, 꾸미기 재료를 활용해 사례를 소개하며 대안을 제시하느라 90분 내내 여념이 없었다.</p> <p>‘권리스타그램’을 발표한 조는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헬리니(운동 초보자)’, ‘요린이(요리 초보자)’, ‘골린이(골프 초보자)’ 등 표현은 아동을 무시하는 비하 사례”라고 지적하며 “왜 어른들은 어린이들을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나 미숙한 이들에 비유하는지 모르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p> <p>삼우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복준서 군은 아동 학대 사례를 분석한 도표를 설명하며 “정부가 모니터링을 아주 세게 해서 아이들을 학대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동 권리 날씨’를 발표한 1조는 속도제한 표지판이 없는 도로와 길가에 방치된 쓰레기 등을 사진으로 찍어 제시하고 “아이들을 위험에 처하고 쾌적한 삶을 방해하고 있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p> <p>이날 발표에 참여한 어린이·청소년의회 의원 다섯 개 조가 공통으로 제시한 아동 권리 침해 사례는 어린이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이었다. 한 초등교 5학년생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어린이 입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그렇다면 예의 바른 어린이에게는 물건값을 깎아주는 ‘예스키즈존’도 있어야 하는 게 아니냐”고 호소해 박수갈채를 받았다. 중학교 2학년생은 “우리들이 직접 ‘노키즈존 반대 캠페인’을 벌이는 것도 문제를 해결하는 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p> <p>이 밖에 어린이 놀이 공간 부재와 자전거 도로 조성 지연, 고장 난 신호등 방치, 공원 주변 불법 주·정차, 무조건적인 공부 강요 등을 아동 권리 침해 사례로 꼽았다.</p> <p>행사를 주관한 굿네이버스 김경환 전북본부장은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자신의 권리침해 사례를 살펴보고 경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p> |
|--|---|

| | |
|----------------------------------|---|
| | <p>학습 기회”라며 “이를 통해 권리 침해에 대해 스스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완주군의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사회 내 아동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한 포토보이스 활동을 발표함. - 어른들이 무심결에 쓰는 단어들은(ex. ~린이) 아이들을 미숙하거나 무시하는 발언일 수 있다는 점을 아이들 스스로가 제시함. - 특히, 실제 어린이들의 입장에서 출입 자체를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노키즈존’에 대해서는 모든 학생이 입을 모아 이야기할 정도로 권리의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가 평소에 주의 깊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아이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을 수 있는 표현(~린이), 사회적 현상(노키즈존)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아동 인권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아동권리침해에 대한 아이들의 의견을 직접 발표시키는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비로소 아동 권리 침해에 대해 아이들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고, 이해와 더불어 확실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임.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아이들의 눈에 비친 어른들의 아동권리 침해? 너무 많습니다.” / 전북도민일보 (2022.9.21.)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97007</p> <p>주린이 · 부린이 · O린이는 아동비하?... “자제해야” vs “정감있는 표현” / 세계일보(2022.05.05.)</p> |

| | |
|-------------------|---|
| | <p>https://www.segye.com/newsView/20220504511115?OutUrl=naver</p> <p>“어른들은 몰라요”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이 겪는 일상 속 차별 퇴치 캠페인 / 뷰어스(2019.10.14.) http://theviewers.co.kr/View.aspx?No=274483</p> |
| 타시도 사례 | <p>충남도 인권센터 인권침해·차별 상담사례 공유회 개최 / 충남일보(2022.05.24.) http://www.chungnam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363</p> <p>전남 나주시, 아동과 정책간담회, 아동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 / 빛가람뉴스(2022.8.27.) http://www.focu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250193</p> <p>광진구, 아동·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개최 / 시민일보(2022.09.20.) https://www.siminilbo.co.kr/news/newsview.php?ncode=1160286652207328</p> |

| | | | |
|-------|---|----|------------|
| 제목 | 전북도교육청, 팽수와 함께 영어를... AI 팽톡 활용 수업 확산 | 번호 | 33 |
| 출처 | 뉴시스 | 날짜 | 2022.9.21. |
| 기사 주소 |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21_0002020782&cID=10808&pID=10800 | 기자 | 김민수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2조) | | |
| 주제 | -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하는 것은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다. | | |
| 기사 내용 |  <p>서거석 전북교육감이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팽톡 활용 수업을 직접 참관하는 시간을 가졌다.</p> <p>21일 전주만성초등학교에서는 서거석 교육감과 EBS 창의융합교육부장, 초등영어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I 팽톡 활용 수업’이 진행됐다.</p> | | |

| | |
|---|--|
| <p>인공지능 기반 영어말하기 연습 시스템 ‘AI 팽톡’은 교육부와 EBS가 공동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풍부한 영어 말하기 환경을 제공하고 기초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했다.</p> <p>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실혁명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서 교육감이 AI 팽톡 활용 선도학교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도내 초등학교 전체로 확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p> <p>AI 팽톡 활용 수업 공개는 전주만성초 임석빈 교사가 맡았다. 전주만성초는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세계시민교육, 학생과 교사가 함께 성장하는 교사교육과정을 운영하며 학생중심의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있다.</p> <p>임 교사는 SW·AI기반 EBSe AI 팽톡 프로그램을 교실 영어수업에서 어떻게 교과서와 연계하여 활용하는지 시범수업을 선보였다. 학생들은 1인당 1대의 태블릿 PC를 가지고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문장과 표현을 AI 팽톡을 통해 맞춤형 활동을 진행했다.</p> <p>또한 팽수와 대화하기, 실시간 발음 피드백, 언어 음성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스마트 교육을 실제 교실수업과 병행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과 진행한 수업 결과물을 공유했다.</p> <p>임 교사는 “EBSe에서 개발한 AI 팽톡은 인공지능 기반 개인 맞춤형 영어말하기 학습 서비스로 누구나 장소와 시간에 구애 없이 팽수와 함께 재미있고 스마트하게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면서 “영어말하기 중심의 AI 팽톡은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 현장에서 더 부족해진 의사소통중심 학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p> | |
|---|--|

| | |
|------------------------------|--|
| | <p>이날 수업을 지켜본 서 교육감은 “AI 팽톡을 활용해 학생들이 재미있게 수업하는 모습을 보았다. 앞으로 도내 모든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면서 “전북교육청은 학생들의 미래역량을 기르고, 교사들의 수업 전문성을 키우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주 만성 초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AI 팽톡 활용 수업을 전북교육감이 참관하는 시간을 가짐. - SW·AI기반 EBSe AI 팽톡 프로그램은 팽수와 대화하기, 실시간 발음 피드백, 언어 음성인식 등 다양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교과서에서 배운 주요 문장과 표현을 맞춤형으로 복습할 수 있도록 함. - 주로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던 스마트 교육을 교실 현장에 도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크며, 또한, 코로나 시대에 마스크를 쓰면서 학교 현장에서 더 부족해진 의사소통 중심 학습의 효율적인 대안이 되고 있음. -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도내 모든 학교에서 AI 기반 맞춤형 수업, 창의·융합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힘.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I 프로그램이 학교 공교육과 접목되면서 아이들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교육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음. - 또한, 공교육의 특성상 교사 개인과 다수의 학생이 수업에 임하게 되는데, AI 프로그램을 통해서 개별 의사소통중심 학습을 진행할 수 있어 아이들의 소통 능력 함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현장에서 아이들이 이런 AI 프로그램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부 차원에서 교사의 AI 프로그램 숙련도를 높이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도 이런 프로그램을 장벽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함.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 문해력 키우자...교육부 '책열매' 낱말게임 6종 보급 https://www.newsl.kr/articles/4813199 (2022.09.26.) - AI·VR 활용한 교육서비스 한자리에...에듀테크 코리아' 개최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1033700003?input=1195m (2022.09.21.) |
| 타시도 사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리중학교 AI 수학 중점학교 선정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5163 (2022.09.25.) |

| | | | |
|-------|---|----|-----------|
| 제목 | 수업중 화장실 금지한 교장... 교사들도 ‘학생인권 침해’ 반발 | 번호 | 34 |
| 출처 | 오마이뉴스 | 날짜 | 2022.9.21 |
| 기사 주소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866639 | 기자 | 이민섭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휴식을 취할 권리(제11조) - 건강에 관한 권리(제25조)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 중 화장실,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 | |
| 기사 내용 | <p>교육 인천경기</p> <h2>수업중 화장실 금지한 교장... 교사들도 "학생인권 침해" 반발</h2> <p>경기 수원시 모 고등학교 교장 논란... 교사노동조합 "평소 교직원 상태로도 갑질"</p> <p>22.09.21 17:50 · 최종 업데이트 22.09.21 17:50 · 이민섭(doule10) ·</p> <p>좋아요 582개 · 댓글 1개 · 공유 1개 · URL을여기 · 스크랩</p> <p>본문보기 · 원고료로 응원하기</p> <p>15 5</p> <p>제목: 경기 본문: 2022년 09월 21일 오전 09:00 현재 선생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p> <p>모든 이후 수업 시간 중 학생 교실밖 출입을 금지합니다. 화장실, 물, 준비물 등 어떠한 이유도 허락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p> <p>담당선생님은 사전에 위는 시간 모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세요. 현재 병송으로도 안내하였습니다.</p> <p>▲ 경기도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매신저 내용 캡처</p> <p>© 이민섭</p> <p>관람사진보기</p> <p>경기도 수원에 있는 한 고등학교 교장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화장실 출입과 정수기 사용을 금지 시키자 교사들이 학생 인권침해라 지적하며 교장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p> <p>경기교사노동조합(아래 경기교사노조)은 지난 20일 '갑질 및 법령위</p> | | |

| | |
|--|---|
| | <p>반' 등을 이유로 경기도교육청에 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이어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p> <p><오마이뉴스>가 21일 입수한 학생부 매신저 캡처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1일 교사들에게 '수업 중 학생들 화장실 사용 등을 금지하라'고 지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오늘 이후 수업 시간 중 학생 교실밖 출입을 금지합니다. 화장실, 물, 준비물 등 어떠한 이유도 허락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라고 했다.</p> <p>관련해 학교 관계자는 21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학생들이) 화장실 간다고 하고 다른 반을 출입하거나 자판기를 이용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생활지도를 한 것이다"라며 "학생들을 수업에 집중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화장실이 정 급한 학생은 선생님이 상황에 따라 판단해 보내주고 있다"라고 덧붙였다.</p> <p>교직원들 "교장 A씨가 갑질" 호소도</p> <p>한편, 경기교사노조는 교장 A씨가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교직원들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욕설, 반말, 모욕적 발언을 했으며 갑질 의혹도 제기했다. 근무시간 외 업무 지시, 조기출근 강요 등 부당업무 지시도 있었다는 주장이다.</p> <p>지난해 11월에는 이 학교 교직원 63명 중 51명이 교육지원청에 피해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교육지원청은 '갑질 해당 없음'이란 결론을 내렸다. 교장 A씨는 당시 조사에서 "교육적인 목적을 위해 한 언행 외에 갑질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p> <p>이후 학교 교직원 21명이 전보를 신청해 올해 초 다른 학교로 옮겼다. 남은 교직원 중 일부와 새로 전입한 교사들 역시 추가 피해를 호소해 최근 경기교사노조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기교사노조는 전체 교사 63명 중 7명으로부터 피해신고서를 받아, 지난 20일 경기도교</p> |
|--|---|

| | |
|---------------------|--|
| | <p>육청에 교장 A씨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p> <p>경기교사노조는 “고통받는 학교 구성원들의 현실을 묵과할 수 없어 감사관과 국가인권위에 해당 학교장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라며 “빠른 조사와 함께 적절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줄것을 당부했다”라고 밝혔다.</p> <p>갑질 논란 의혹을 두고는 학교측에서는 별도 해명하지 않았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시간 중 화장실, 정수기 사용을 금지하여 학생들의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인권침해 문제가 발생 - 학생들의 일탈방지 및 수업 참여도 향상이라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개인의 생리현상 문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발상은 인권침해에 해당 - 또한 해당 교장이 교사들에 대해서도 인권침해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학교 구성원 전반의 인권침해 문제 해소방안이 필요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업 참여도 향상 및 학생 개인 일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생리현상을 금지할 필요가 있었는지 문제가 됨 - 위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학생들의 목적 외 일탈을 먼저 방지하고, 개인의 생리현상 등을 예외로 두는 대안도 있을 것으로 보임 - 교장의 지위로 강제한다는 구시대적인 발상보다 학교 구성원과의 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교직원에 폭언’ 갑질 논란 교장...학생 인권 침해 사실도 드러나 / 한경닷컴 (2022.09.23.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2092326697)</p> <p>“부당업무 지시·상습 갑질” ...경기교사노조, 교육청에 학교장 감사 요청 / 뉴시스 (2 0 2 2 . 0 9 . 2 0 .</p> |

| | |
|-----------|--|
| | <p>https://www.newsis.com/view/?id=NISX20220920_0002020231)</p> |
| 타시도 사례 | <p>“여학생이 바지 입으려면 교장 허락 필요” 학생 인권 침해하는 시 대착오적 규정들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1208500143 ‘교장·교감의 왕국’ ...폭언·갑질·교직원 사적동원 https://www.jjan.kr/article/20211215746272</p> |

전라북도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11.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1) 활동일시 : 2022년 10월 1일 ~ 10월 31일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 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10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10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 시도 유사사례 및 타 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 1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1 |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1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1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1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1 | 4 |

4.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10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4건 (타시도 1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 제8조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제9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4조 급식에 관한 권리에서 나타났다. 1
- 주요 내용으로는 전북지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데,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물론 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식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전북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타 시도 사례로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다.

10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제목 | 전북장애학생 인권침해... ‘경각심 가져야!’ | 번호 | 35 | | | | | | | | | | | | | | | | | | | | |
|-------|---|-----|------------|----|----|------|------|------|------|--|----|-----|-----|----|----|----|------|---|---|---|---|---|----|
| 출처 | 전라일보 | 날짜 | 2022.10.20 | | | | | | | | | | | | | | | | | | | | |
| 기사 주소 |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70576 | 기자 | 고민형 | | | | | | | | | | | | | | | | | | | |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별을 받지 아니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8조)-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1조)- 소수(장애) 학생의 권리 보장(학생인권조례 제38조) | | | | | | | | | | | | | | | | | | | |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북지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한데,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물론 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 | | | | | | | | | | | | | | | | | | | |
| 기사내용 | <div><h2>전북 장애학생 인권침해..경각심 가져야!</h2><p>강득구 의원,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 절실.."</p><div>2021학년도 전북 장애 학생 인권침해 현황</div><table><tr><th rowspan="2"></th><th rowspan="2">연도</th><th colspan="2">성폭력</th><th rowspan="2">신체폭력</th><th colspan="2">가정폭력</th><th rowspan="2">합계</th></tr><tr><th>성폭행</th><th>성추행</th><th>학대</th><th>방임</th></tr><tr><td>전북</td><td>2021</td><td>0</td><td>4</td><td>8</td><td>5</td><td>0</td><td>17</td></tr></table><p>(자료출처:강득구 의원실)</p><p>전북 장애학생 인권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요구된다.</p><p>지난 2021년 한 해 동안, 각 시·도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해도 561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div> | | | | 연도 | 성폭력 | | 신체폭력 | 가정폭력 | | 합계 | 성폭행 | 성추행 | 학대 | 방임 | 전북 | 2021 | 0 | 4 | 8 | 5 | 0 | 17 |
| | 연도 | 성폭력 | | | | 신체폭력 | 가정폭력 | | 합계 | | | | | | | | | | | | | | |
| | | 성폭행 | 성추행 | 학대 | 방임 | | | | | | | | | | | | | | | | | | |
| 전북 | 2021 | 0 | 4 | 8 | 5 | 0 | 17 | | | | | | | | | | | | | | | | |

| | |
|---------------|--|
| | <p>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학생 인권침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9건에서 △2021년 561건으로 급증했다.</p> <p>2021년 기준 전북의 경우 17건으로 경기 86건과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 50건, 충남 50건, 경북 47건, 경남 46건, 충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에 이은 순이다.</p> <p>유형별로는 신체폭력 8건, 가정폭력(학대) 5건, 성추행 4건이다.</p> <p>강득구 의원은 “장애 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서는 장애 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안이 발생 할 경우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지역의 장애학생 인권침해 심각함 - 지난 2020년 349건이었던 것에 비해 2021년 급증하여 한 해 동안만 해도 각 시·도 교육청에서 파악된 건수만 561건에 달하고, 2021년 기준 전북의 경우 17건으로 신체폭력 8건, 가정폭력(학대) 5건, 성추행 4건임 - 장애학생의 경우 파악된 건 외에도 교육청이 파악하지 못한 인권침해도 많은 것으로 생각됨 -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은 물론 인권 강화를 위한 적극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
| | |

| | |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 침해의 측면에서, 학대의 피해를 받은 장애 아동에 대한 대안의 마련과 발달장애아동에 대한 돌봄 체계의 강화를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함 - 장애아동의 경우 교육청이 파악하거나 신고 되는 학대보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을 가능성이 크므로 신고 및 파악시 초기대처방안이 매우 중요하며,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대안 필요함 - 교육의 측면에서, 외부전문가 상담시 비용문제가 크고, 장애아동을 교육하는 경우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피드백 할 수 있는 지자체 주도하의 연속적인 운영이 필요함 - 장애아동에 따라 장애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교육, 의료, 일상생활지원 등 분야별로 세분화 하여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또한, 가정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지원 등의 도움도 필요함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종신고된 지적장애인 데려간 부부 검찰행/ 전민일보(2022.10.18.)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65736 - [전문]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 2,3차 보고에 대한 유엔 최종 견해/ 비마이너(2022.10.18.) 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4057 - 시설 장애아동, 정신과 약물 과다처방...인권위 “아동학대”/KBS NEWS(2022.10.0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71986&ref=A - “단순 ‘탈시설’로는 장애인, 아동, 노인 시설문제 못바꾼다”/프레시안(2022.10.11.)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101110372337780?utm_source |

| | |
|--------------------|--|
| | <p>=naver&utm_medium=search</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네 이방인 ‘다문화 장애아동’ 도와달라/ 에이블뉴스(2022.9.22.)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220922132039988883 - “장애아는 방과후 돌봄 안한다”는 유치원, 자폐아들과 함께 길을 잃다. / 한국일보(2022.10.16.)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01215400003885?rPrev=A2022101912320001835 |
| <p>타 시도 사례</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시간 확대/ JIBS뉴스(2022.10.02.) http://www.jibs.co.kr/news/replay/viewNewsReplayDetail/2022100222164370404?feed=na - LH, 서울시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조성..신축 주택활용 2개소 설치 /동아일보(2022.10.06.)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1006/115823632/2 - 하윤수 부산교육감, 장애아동 교육 사각지대 해소 나선다 /뉴스시스(2021.09.3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30_0002033704&clD=10811&pID=10800 - 서울시 ‘성착취 피해’ 아동, 청소년 원스톱 지원 나선다 / 뉴스시스(2022.09.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4_0002013067&clD=10201&pID=10200 |

| | | | |
|-------|--|----|-------------|
| 제목 | 전북 결식아동 급식비 한 끼 당 7천원, 물가 고공 행진에 영양 부실 우려 | 번호 | 36 |
| 출처 | 전북도민일보 | 날짜 | 2022.10.20. |
| 기사 주소 | https://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0239&sc_section_code=S1N6 | 기자 | 남형진 |
| 인권 범위 | -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1조) - 급식에 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4조) | | |
| 주제 | - 결식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
| 기사 내용 |  <p>전북 지역 결식아동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한끼 급식비가 7천원에 불과해 균형 잡힌 영양 식사 제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p> <p>최근 물가 상승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의 결식아동 급식비로는 자장면이나 라면에 공기밥, 김밥 정도만 사먹을 수 있는 정도여서 물가인상분이 현실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p> | | |

| | |
|---|--|
| <p>또한 전북의 경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타 시도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들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개선책 마련도 요구되고 있다.</p> <p>20일 전북도와 도내 시군 등에 따르면 전북에는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대상이 총 2만4천792명에 달하고 있다.</p> <p>이들에게 올해 지원되는 예산은 254억4900만원인데 시군별 지원 방식도 제각각이다.</p> <p>급식카드로 지원하는 곳은 전주시와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부식 병행) 등 4개 지역이며 군산과 익산, 완주, 진안(도시락 병행),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 등 10개 시군은 부식으로 지원하고 있다.</p> <p>올해 결식아동에게 지원되는 한 끼 급식비 7천원은 지난해 6천원에서 1천원 인상된 것이다.</p> <p>그러나 최근 치솟고 있는 밥상 물가를 고려하면 성장기 아동들에게 균형 잡힌 영양식을 공급하는데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높다.</p> <p>실제 한국소비자원 외식비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전북지역에서 비빔밥 한 그릇을 사먹으려면 1만350원이 필요했으며 가장 일반적인 김치찌개 백반은 8천200원, 칼국수 7천950원, 삼겹살(200g)은 1만5천774원, 자장면 6천100원, 김밥(1줄)은 2천780원을 내야 했다.</p> <p>이 같은 도내 외식 물가는 올 1월과 비교해 비빔밥은 1천원, 김치찌개 백반은 600원, 삼겹살은 1천384원, 칼국수 500원, 자장면 600원, 김밥은 300원이 각각 인상된 것이다.</p> | |
|---|--|

| | |
|---------------|---|
| | <p>올해 결식아동 한 끼 급식비로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은 자장면과 김밥뿐인 셈이다.</p> <p>문제는 또 있다. 도내 아동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매우 적어 아동들의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다는 점이다.</p> <p>도내 지역의 경우 아동급식카드 가맹점은 편의점 710개, 일반음식점 441개, 마트 183개, 제과점 71개, 반찬가게 2개소 등 총 1천40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p> <p>특히 농어촌 지역의 가맹점수는 매우 적다보니 대다수 시군들이 카드로 지원하는 대신 부식이나 즉석 식품을 구입해 전달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p> <p>하지만, 이 경우 지원 받는 아동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초래될 수 있고 즉석 식품 역시 최근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충분한 양이나 영양공급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p> <p>전북도 관계자는 “결식아동들을 위한 급식비 지원이 최근 상승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내년에는 한 끼 당 8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도내의 경우 급식카드 가맹점 수가 적은데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 지역 결식아동의 급식 인권과 관련하여, 현행 한 끼 급식비 7000원으로는 최근 급상승하는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태임. - 이 뿐만 아니라 도내 급식카드 가맹점 수 자체도 매우 적어 (편의점 710개, 일반음식점 441개, 마트 183개, 제과점 71개, 반찬가게 2 |

| | |
|---------------|--|
| | <p>개소 등 총 1천407개소) 아동들의 선택폭이 제한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결식아동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식아동 급식비 부족 현상과 관련하여, 정읍시나 익산시 등에서는 이에 대비하여 민간 기업 등의 협력을 통하여 결식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을 펼치고 있음(아래 기사 참조). -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위하여 전라북도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급식비 인상, 급식카드 가맹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임 (경기도, 충청남도 등은 기존 7000원에서 8000원으로 급식비를 인상한 바 있음 - 아래 기사 참조) -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편의점 도시락도 8천원 넘는데...한끼 7천원 지원받는 결식아동 / 매일경제 (2022.10.19.) https://www.mk.co.kr/news/society/view/2022/10/922714/</p> <p>치솟는 외식물가...편의점으로 내몰린 급식비 '7천원' 결식아동 / MBN뉴스 (2022.05.13. https://www.mbn.co.kr/news/society/4760690)</p> <p>정읍시, 결식아동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프로젝트 협약 / 아이뉴스24 (2022.08.04.) https://www.inews24.com/view/1507284</p> <p>익산시, 저소득층 결식아동 복지 개선 주력 / 뉴시스 (2022. 07. 07.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707_0001935064&cID=10808&pID=10800)</p> |
| 타시도 사례 | <p>맘껏 먹을 수 있도록... 충남 결식아동 급식비 올린다 / 충청투데이 (2022.10.20.)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69396</p> |


| |
|--|
| 경기도민 86%, 경기도 결식아동 급식단가 7000원에서 8000원 인상 “잘했다” 응답 / 아주경제 (2022.08.25.) https://www.ajunews.com/view/20220825155601101 |
| “광주, 결식아동 급식비 한끼 7000원...현실화 필요“ / 뉴시스 (2022.10.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020_0002055079&clD=10809&pID=10800 |

| | | | |
|--------------|---|-----------|-------------|
| 제목 | 기초학력은 ‘인권’...건강검진처럼 학생 기초학력 진단 실시 | 번호 | 37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10.19. |
| 기사 주소 | https://www.jjan.kr/article/20221019580235 | 기자 | 이 강 모 |
| 인권 범위 |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 |
| 주제 | - 기초학력은 학생들의 인권이라는 인식하에, 전북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고 학생의 기초·기본 학력의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함 | | |
| 기사 내용 | <p>기초학력은 '인권'...건강검진처럼 학생 기초학력 진단 실시</p> <p>윤아강모 ①입력 2022-10-19 17:23 ①수정 2022-10-19 19:12 댓글 0</p> <p>전북교육청, 학력향상 위한 학습지원 계획 발표 초2~고1 기초학력 진단. 전담 및 보조교사 400명 배치 평가 후 부진학생 부모 동의 후 방과후학교 등 운영</p> <p>기초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중·고 학생 기초·기본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p> <p>건강검진을 통해 아픈 곳을 찾아 치료하는 것처럼 현재 학생 개인의 기초학력 진단을 통해 부족한 교과를 메우고 개개인이 가진 재능을 찾아주겠다는 것이다.</p> <p>전북교육청은 19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학력향상을 위한 학습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초등 2학년부터 고 1학년까지 초·중</p> | | |

| | |
|------------------------------|---|
| | <p>고 학생을 대상으로 기초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한다.</p> <p>진단평가 도구(유형)는 4개로 각각 A, B, C, D 유형으로 나뉜다. 학교는 자신이 원하는 날짜와 도구를 선택해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평가하고 내년 3월 개개인의 평가결과를 진단한 후 분기별로 향상도 평가를 세 번 더 진행한다. 평가 결과는 학생과 학부모에게만 제공한다.</p> <p>진단 결과를 통해 학력이 기준치보다 더딘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습더딤 맞춤형 두드림학교, 중학생 교과정서지원 방학캠프도 운영한다.</p> <p>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정규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이뤄진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과 보조교사 300명을 배치하기로 했다.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을 위해 수학 클리닉을 운영하고, 학생 주도 국어·영어·수학·과학동아리 500개를 지원하는 세부프로그램도 가동된다.</p> <p>또한 본청과 14개 시군교육지원청에 학력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전담교사 40명도 배치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일제교사 부활, 성적 줄세우기’라는 오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학생의 동의를 얻은 경우만 학습지원을 실시한다.</p> <p>김숙 도교육청 교육국장은 “기초 기본학력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것을 쌓는다는 것은 사상누각이 될 수밖에 없다.”며 “미진한 부문은 보완하면서 학력향상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전북교육청이 기초학력 전국 최하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전북교육청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최초로 초중고 학생 기초·기본학력 진단평가를 실시하기로 함</p>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체적으로는 4개의 A, B, C, D 진단평가 도구 중에서 학교가 자율적으로 날짜 및 진단평가 도구를 선택해서 학생들에게 분기별로 진단평가를 제공한 후, 학부모 및 학생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는 것임 - 진단 결과를 통해 학력이 기준치보다 더딘 학생에 대한 학습지원 대상 학생 지원협의회를 운영하고 학습더딤 맞춤형 두드림학교, 중학생 교과정서지원 방학캠프도 운영 - 도 교육청은 이런 협의회, 학습클리닉, 방학캠프 등의 운영을 위해 서정규 교사와 기간제교사로 이뤄진 기초학력 전담교사 100명과 보조교사 300명을 배치할 계획 - 성적 줄 세우기 등의 부작용을 방지 않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런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임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들의 기초학력 정도가 낮아지고 있는 현 교육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세분화된 다양한 진단평가 도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임 - 진단평가 결과를 제공하는 것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학력이 기준치보다 낮은 학생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습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위한 교사 인력을 확대 배치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 예측됨 - 또한 이런 프로그램이 강요가 아닌,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하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에서 학생에게 지나친 학습 압박, 또는 학습권의 침해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
| 관련 유사 기사 및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학력 디딤돌 다지기 연수 |

| | |
|---------|--|
| 방송 |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0237 (2022.10.27.) - 기초학력 미달 학생 줄인다... 학업성취도 평가 대상 늘리고 AI 활용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2/10/11/FKMO5WSHMFDLJJ2AUMZOOAYZS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2022.10.11.) - 충청권 교육감 “학력평가 필요성 공감... 획일적 시행은 반대”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28150 (2022.10.13.) |
| | - 영동 영신중, 기초학력향상 캠프 운영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74796 (2022.10.28.) |
| 타 시도 사례 | |

| | | | |
|-------|---|----|-------------|
| 제목 | 청소용 밀대로 초등학생 엉덩이 11대 때린 20대 교사 징역형 | 번호 | 38 |
| 출처 | 연합뉴스 | 날짜 | 2022.10.10. |
| 기사 주소 | https://www.yna.co.kr/view/AKR20221008034600062 | 기자 | 이재현 |
| 인권 범위 |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학생인권조례 제9조) | | |
| 주제 |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 |
| 기사 내용 | <p>“훈육한 것” 정당행위 주장했지만...1심, 징역 1년 집유 2년</p> <p>(원주=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청소용 밀대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p>  <p>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A(29) 교사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p> | | |

| | |
|---|---|
| | <p>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p> <p>A 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 40분께 원주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B(12)군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p> <p>재판 과정에서 A 교사는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 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천 300만 원에 합의했다.</p> <p>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어 A 교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p> <p>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행위와 방법, 결과 등에 비춰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다”며 “아무런 전과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생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청소용 밀대로 그 초등학생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를 받은 교사에 대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학생에 대한 처벌이 교육적 효과를 가지는지 밝혀지지 않음. - 교육적 목적을 이유로 체벌을 가한 교사를 형사처벌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용 밀대를 체벌 도구로 사용한 점에서 주된 목적이 교육이었던지 의문을 가질 수 있음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들에 의해 체벌이 계속 시행되고 있음. - 교사들의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이 필요함. - 교육목적 달성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은 어떠한 경우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인식 확산이 필요함.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p>[땅, 땅... 오늘의 판결] 교사가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려... 법원 “훈육 아닌 학대” / 조선일보 (2022.10.11.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2022/10/11/I5MWKUKVNRBMXOWB2IL2AK5DPQ/)</p> <p>“훈육 아닌 학대” ... 청소용 밀대로 초등생 엉덩이 11대 때린 교사 / 서울신문 (2022. 10. 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1500015)</p> <p>숙제, 거짓 제출하다니...청소 밀대로 초등생 11대 때린 교사 '징역형 집유' / MBN (2022. 10. 11.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21011500015)</p> |
| <p>타시도 사례</p> | <p>“인사 제대로 안 해?”... 중학생 폭행 혐의 교사 입건 / 한라일보 (2022. 10. 3. http://www.ihalla.com/article.php?aid=1664767895732847044)</p> |

전라북도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2022. 12. 1.

1. 기사 스크랩 및 방송을 통한 학생인권 모니터링 개요

1) 활동일시 : 2022년 11월 1일 ~ 11월 30일

2) 활동범위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외

3) 활동내용 :

○ 기사, 방송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 인권 모니터링

○ 학생인권 범위는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교육에 관한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폭력과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자치와 참여의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4) 연구원 : 총 명

- 책임연구원 : 조 기 영 교수(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공동연구원 : 신 봉 근 박사(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 연구보조원 :

5) 모니터링 수행 체계

| 구분 | 수행 내역 | 비고 |
|------|---|----|
| 대상 |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 |
| 방법 | - 학생 인권 관련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스크랩 | |
| 내용 |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해당하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을 통한 학생 인권 내용 및 쟁점 파악 - 전국 기사 및 보도 자료를 통한 학생인권 유사사례 및 타시도 사례 파악 | |
| 결과보고 | -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보고 - 11월 학생인권 관련 전라북도 기사, 방송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11월 학생인권 관련 주요내용 전국 기사 및 보도자료 모니터링 일지 | |

2. 모니터링 사이트 및 목록 현황

○ 전라북도 기사 및 방송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타시도 유사사례 및 타시도 학생인권 관련 주요 이슈를 모니터링 하기 위해 전국 기사 검색(전국 신문사는 주요 언론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료를 참고하기 위하여 각 지역신문 및 기타 언론사를 활용하였음)

○ 월별 학생 인권 모니터링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 신문 및 방송사의 범주를 설정하였으며, 이와 관련한 사이트 현황은 아래 표와 같음.

| 연번 | 전라북도 신문사 | 주소 | 비고 |
|----|------------|-------------------------|----|
| 1 | 전북일보 | www.jjan.kr/ | |
| 2 | 전북도민일보 | www.domin.co.kr/ | |
| 3 | 전북중앙신문 | www.jjn.co.kr/ | |
| 4 | 전북연합신문 | www.jbyonhap.com/ | |
| 5 | 새전북신문 | www.sjbnews.com/ | |
| 6 | 전라일보 | www.jeollailbo.com/ | |
| 7 | 전민일보 | www.jeonmin.co.kr/ | |
| 8 | 전주일보 | www.jjilbo.com/ | |
| 9 | 전북신문 | www.jbsm.co.kr/ | |
| 10 | 새만금일보 | www.smgnews.co.kr/ | |
| 11 | 전북인신문 | www.newsjb.kr/ | |
| 12 | 일간전북 | www.kns.so/ | |
| 13 | 전주매일신문 | www.jjmaeil.com/ | |
| 14 | 전라매일 | www.jlmaeil.com/ | |
| 연번 | 전라북도 방송사 | 사이트 | 비고 |
| 1 | KBS 전주 | www.jeonju.kbs.co.kr/ | |
| 2 | 전주 MBC | www.jmbc.co.kr/ | |
| 3 | JTV 전주방송 | www.jtv.co.kr/ | |
| 연번 | 전국 신문사 | 사이트 | 비고 |
| 1 | 한겨레 | www.hani.co.kr/ | |
| 2 | 경향신문 | www.khan.co.kr/ | |
| 3 | 중앙일보 | www.joongang.joins.com/ | |
| 4 | 동아일보 | www.donga.com/ | |
| 5 | 국민일보 | www.kmib.co.kr/ | |
| 6 | 연합뉴스 | www.yna.co.kr/ | |
| 7 | 오마이뉴스 | www.ohmynews.com/ | |
| 8 | 그 외 전국 신문사 | | |

3.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현황

| 2022년 학생인권 모니터링 범위 | | 인권보호 사례분석 | 인권침해 사례분석 | 홍보 및 정책 |
|----------------------|-------------------------|--------------|--------------|------------|
| 교육에 관한 권리 | 학습에 관한 권리 | | 1 | 1 |
| |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 | |
| | 인권교육을 받을 권리 | | | |
|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 | |
| 폭력과 위험으로부터의 자유 |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 | | |
| | 안전에 대한 권리 | | | |
| | 휴식을 취할 권리 | | | |
|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개성을 실현할 권리 | | | |
| | 사생활의 자유 | | | |
| |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 받을 권리 | | | |
| | 정보에 관한 권리 | | | |
| 양심·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 양심 종교의 자유 | | | |
| | 표현의 자유 | | | |
| 자치와 참여의 권리 | 자치활동의 권리 | | | 1 |
| |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 참여할 권리 | | | |
| |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 | 1 |
| 복지에 관한 권리 | 복지에 관한 권리 | | | 2 |
| |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 | | |
| | 문화 활동에 참여할 권리 | | | |
| | 급식에 대한 권리 | | | |
| | 건강에 관한 권리 | | 1 | 2 |
| 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권리 |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 | |
| |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 | |
| 합 계 | | | 2 | 7 |

4.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결과

○ 11월 언론보도 기사 및 방송 모니터링 결과 학생인권 관련 기사는 총 5건으로 나타났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나타난 관련 조항은 제5조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8조 자치활동의 권리, 제20조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1조 복지에 관한 권리, 제25조 건강에 관한 권리 등에서 나타났다. 11월 언론보도에 나타난 인권 관련 키워드는 위의 <표-14>와 같다.

○ 주요 내용으로는 도교육청이 제출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따르면, 저소득 학생들의 지원으로 복지와 건강권 등의 증진과 학생의회 등의 설치로 자치권·참여권 등의 증진이 기대된다. 그리고 익산시가 장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그리고 완주군 동상면에서 근거리 학교의 배정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행정 이 요구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하여,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다.

11월 학생인권 모니터링 활동

| | | | |
|-------|---|----|-------------|
| 제목 | 저소득층 학생들 생일상 - 명절상 지원 | 번호 | 39 |
| 출처 | 새전북신문 | 날짜 | 2022.11.10. |
| 기사 주소 |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61889 | 기자 | 정성학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치활동의 권리(학생인권조례 제18조) 및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0조) -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1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학생들의 지원으로 복지와 건강권 등의 증진과 학생의회의 등의 설치로 자치권·참여권 등의 증진이 기대됨 | | |
| 기사 내용 | <p>저소득층 학생들 생일상-명절상 지원</p> <p>생일, 설, 추석에 각각 4만원 지급 초등생 구강건강 진료비도 4만원 교육청에 학생의회, 학부모회 설치</p> <p>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11월 10일 15시39분</p> <p>  </p>  <p>#문패# 전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p> | | |

| | |
|--|---|
| | <p>앞으로 도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생일상과 명절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학생들이 직접 교육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의회 또한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p> |
| | <p>10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지방조례 제정안 4건을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됐다.</p> |
| | <p>우선, 도교육청이 제출한 저소득 가정 학생들의 복지를 증진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눈길 끈다.</p> |
| | <p>조례안은 저소득 가정 초·중·고교생들에게 매년 생일, 또는 설과 추석 때 그 축하금을 모두 3차례에 걸쳐 1인당 각각 4만 원씩 지원하도록 했다. 그 수혜자는 약 2만명 정도로 추정됐다.</p> |
| | <p>‘전라북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또한 관심사다.</p> |
| | <p>마찬가지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이 조례안은 도내 초등학생들에게 매년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했다. 지원액은 1인당 연 4만원이 제시됐다.</p> |
| | <p>서거석 교육감의 지방선거 공약인 학생의회를 설치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도 제출됐다.</p> |
| | <p>학생의회는 학생들을 대표할 대의기구로, 교육정책, 예산편성, 학생인권 등에 관한 제안권이 주어진다.</p> |
| | <p>조례안은 도교육청에 50명 이내의 학생들로 이 같은 학생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도 각각 지역학생의회를 두도록 했다.</p> |

| | |
|------------------------------|--|
| | <p>서 교육감은 제안 사유서를 통해 “현재 운영중인 학생인권 조례상 학생참여위원회는 학생 인권과 관련된 정책에 한정적이라 교육정책 추진 과정에서 학생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가 필요하다”며 “학생의회가 운영되면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고 학생자치 역량도 신장될 것”이라고 기대했다.</p> <p>학부모들의 교육정책 참여를 보장하도록 한 ‘전라북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의원 발의됐다.</p> <p>조례안은 도교육청과 일선 시군교육지원청에 각각 학부모 대표자들이 참여하는 전북학부모회협의회와 시군학부모회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도록 했다. 이들의 역할은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 등이 다.</p> <p>대표 발의자인 한정수 의원(익산4)은 “학부모회협의회가 운영되면 교육에 대한 학부모 관심이 향상되고 교육정책 또한 교육 수요자의 의견이 반영되는 등 교육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p> <p>한편, 이번 조례안들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각각 빠르면 이달 21일 열릴 2차 본회의, 또는 다음달 13일 예정된 3차 본회의에 상정돼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저소득 가정 학생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도내 저소득 가정 학생들은 생일상과 명절상이 지원될 전망</p> <p>-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1인당 연 4만 원의 구강진료비가 지원될 전망</p> |


| | |
|------------------------------|--|
| | <p>- ‘학생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이 발의되어, 학생의회는 학생들을 대표할 대의기구로, 교육정책, 예산편성, 학생인권 등에 관한 제안권이 주어질 전망</p>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학생들의 복지와 건강권 및 자치권·참여권 등의 증진이 기대됨</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부안 출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포중학생 단체복 지원 / 부안독립신문 (2022.11.25. https://www.ibuan.com/news/articleView.html?idxno=38815)</p> <p>월드비전 전북사업본부, 전북교육청에 난방비 지원금 전달 / 뉴시스 (2022.11.15.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15_0002086322&cID=10808&pID=10800)</p> <p>전북교육청, 농촌유학생 150만원·저소득학생 12만원 지원(종합) / 연합뉴스 (2022.09.26. https://www.yna.co.kr/view/AKR20220926061051055?input=1195m)</p> <p>전북교육청, 저소득층 학생 ‘생일 밥상’ 지원 / JTV뉴스 (2022.08.10. https://jtv.co.kr/2021/?c=3/45&uid=2163578)</p> |
| 타시도 사례 | <p>경기교육청, 저소득층 학생에 노트북·인터넷 지원 / 연합뉴스 (2022.06.28. https://www.yna.co.kr/view/AKR20220628054300060)</p> <p>[울산공동모금회 배분사례]저소득층 자녀 생일 축하 지원 / 울산제일일보 (2022.01.06. http://www.ujel.com/news/articleView.html?idxno=294913)</p> |

| | |
|--|---|
| | 의왕 청계복지관-동원대 호텔조리과, 저소득층 20가구에 가정의 달 특별식 나눔 / 기호일보 (2022.05.05. http://www.kiho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977988) |
|--|---|

| | | | |
|-------|---|----|-------------|
| 제목 | “타지 통학 학생도 열차 운임비 지원합니다.” | 번호 | 40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11.22. |
| 기사 주소 | http://www.jjan.kr/article/20221122580173 | 기자 | 송승욱 |
| 인권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복지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1조) | | |
| 주제 | - 장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 | |
| 기사 내용 | <p>자체기사</p> <p>“타지 통학 학생도 열차운임비 지원합니다”</p> <p>송승욱 ① 입력 2022-11-22 16:48 ② 수정 2022-11-22 16:48 댓글 1</p> <hr/> <p>익산시,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 학생까지 확대 연간 200만원 한도 내 열차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 지원</p> <p>익산시가 타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열차운임비를 지원한다.</p> <p>익산시가 타지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열차운임비를 지원한다.</p> <p>이는 철도교통 요충지라는 익산의 장점을 살린 인구정책 중 하나로, 이미 시행 중인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을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p> <p>22일 시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익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이 익산시의회에서 가결됐고 현재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p> | | |

| | |
|-------------------------------------|--|
| | <p>예고 등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p> <p>지원 확대 내용을 보면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이며,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가 지원된다.</p> <p>익산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익산 외 전북권 타 지역으로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p> <p>다만 정기승차권이 있는 열차와 달리 고속·시외버스나 자가 차량(유류비)의 경우에는 증빙 문제 때문에 지원이 불가하다.</p> <p>조례 개정에 따른 지원 확대는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개정이 완료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p> <p>시 관계자는 “편리한 철도교통 인프라를 활용한 인구정책 일환으로 그동안 관외 출퇴근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열차운임비 일부를 지원해 왔고, 이번에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학생들까지 확대했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인구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p> <p>한편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은 지난 2020년 최초 시행돼 첫째 1355건 1억3147만원, 이듬해 1925건 2억427만원 등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p>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미 시행 중인 관외 출퇴근 근로자 열차운임비 지원을 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직장이나 학업 등으로 인해 인구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 - 익산시에 주소를 두고 서울이나 수도권은 물론 익산 외 전북권 타 지역으로 기차를 이용해 통학하는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열차 정기승차권을 이용해 관외 지역으로 이동하는 근로자 및 학생(재학생)이며, 개인별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정기승차권 운임비용의 50%가 지원됨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거리 통학생들의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산 중고생 시내버스 무상 이용...내년부터 단계적 시행 / KBS 뉴스 (2022.11.25.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610318&ref=A) - 고창군,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행기록장치 설치 비용 지원 / 뉴스1 (2022.11.01. https://www.news1.kr/articles/4850438) |
| <p>타시도 사례</p> | <p>양구 통학 교통비 지원사업 호응 / 강원일보 (2022.10.20. http://www.kwnews.co.kr/page/view/2022111921470324465)</p> <p>옥천군, 내년부터 고등학생 통학비 지원 / 충청매일 (2022.11.14. http://www.ccd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89801)</p> <p>제주, 내년 중.고교생 통학비 지원...돌봄교실 운영시간 연장 / 헤드라인제주 (2022.11.09. http://www.headlinejeju.co.kr/news/articleView.html?idxno=500271)</p> |

| | | | |
|-------|---|----|-------------|
| 제목 | "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 | 번호 | 41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11.15. |
| 기사 주소 | http://www.jjan.kr/article/20221115580035 | 기자 | 김재호 |
| 인권 범위 | - 학습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5조)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 근거리 학교의 배정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요구됨 | | |
| 기사 내용 | <div> <div>자체기사</div> <h2>"코앞 학교 대신 위봉산 너머 학교 다니라구요?"</h2> <p>김재호 11월 15일 15:38 수정 2022-11-15 18:40 댓글 64</p> <hr/> <p>동상면 수만리 주민 "오지 마을 공동통학구 지정해 주세요"</p> <div>  </div> <p>"5km 8분 거리에 있는 초등학교를 놔두고 10km 16분 거리에 꼬불꼬불 위봉산을 넘어 오가야 하는 원거리 초등학교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교육청에서 조치해 주지 않으면 저희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을 겁니다."</p> </div> | | |

| | |
|---|--|
| <p>완주군 동상면 수만리에 사는 이진영씨 부부는 "유치원에 다니는 둘째 아이가 내년에 초등학교에 가야 하는데 교육청에서는 산너머 송광초등학교에 다니라고 한다. 통학버스가 다닌다고 하지만 학교보다 학생에게 더 도움이 되는 교육행정을 펼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p> <p>이씨 부부의 자녀는 둘이다. 큰아이는 동상초 3년이고, 동상유치원에 다니는 작은아이는 내년 초등학교 취학 대상이다. 이씨 가족은 둘째가 큰아리와 함께 가까운 동상초에 다니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즘 고민이 태산같다. 교육당국이 "수만리 지역은 통학구역상 송광초에 속하기 때문에 송광초에 입학해야 한다."며 동상초 입학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하기 때문이다.</p> <p>이씨 큰아이의 경우 3년 전 취학 때 동상초 입학 허가를 겨우 받았는데, 작은아이는 송광초에 가야 한다는 것이 송광초등학교 측의 입장인 것.</p> <p>완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며 "그러나 송광초 측에서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고 밝혔다.</p> <p>해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씨 부부의 요구대로 현재 송광초 통학구역으로 돼 있는 수만리 지역을 공동통학구로 지정, 학생이 원하는 초등학교를 선택하도록 하면 된다.</p> <p>하지만 현실적으로 난제가 있다는 것이 교육당국의 얘기다.</p> <p>2022년 11월 현재 동상초등학교 학생수는 21명, 송광초는 33명으로 송광초가 12명 많지만 동상초는 지역중심학교여서 1~6학년까지 학급</p> | |
|---|--|

| | |
|------------------------------|---|
| | <p>편제가 가능하다.</p> <p>반면 송광초는 일반초등학교에 속해 학생수가 부족한 현재 복식학급(학년을 합함. 현재 3학년과 5학년이 대상이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송광초로서는 단 1명의 학생도 아쉽고, 공동통학구 지정에 반대한다는 것이다.</p> <p>이씨 부부는 “학교는 아이 중심이어야 한다. 코앞에 있는 멀쩡한 학교를 놔두고 멀리 산 넘어 학교에 보낼 수는 없다”며 “제발 아이가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있게 해달라”고 하소연했다.</p> <p>이씨 가족이 사는 곳 동상면 수만리는 과거 전국 8대 오지 중 하나로 손꼽힌 곳이다. 북쪽 동상면 소재지 방면은 동상 대아저수지가 가로막고 있어 2004년 지금의 읍수교가 가설되기 전까지는 배를 타고 면사무소 등을 다녀야 했다.</p> <p>그 남쪽으로는 위봉사~송광사~소양면 소재지를 거쳐 전주로 나아가는 단 하나의 출입로가 있지만, 위봉산이 가로막고 있어 꼬불꼬불 산길을 올라갔다가 내려가야 했다. 도로가 포장되고, 교통이 좋아진 지금도 소양면 소재지에서 수만리를 오가는 길은 ‘난코스’에 속한다.</p> <p>이씨 부부는 “2004년 읍수교 개통 전에는 수만리 학생들이 배를 타고 통학해야 하는 위험 때문에 송광초등학교에 다녔던 것이다. 이제 읍수교가 개통돼 과거와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며 “교육당국이 오지 학생들의 입장에서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p> |
| 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 | <p>- 근거리의 학교가 아닌 멀고 위험한 통행로의 학교에 배정되어 다니고 있는 학부모의 민원 제기</p> <p>- 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르며, 학급편제와 통학편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읍면동</p> |

| | |
|------------------------------|--|
| |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고 함 |
| 시사점 및 대안 제시 | <p>- 근거리 학교의 배정과 관련하여, 보다 현실적이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는 교육당국의 행정이 요구됨</p> |
| 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 | <p>- 집 앞 600m 학교 놔두고 2.4km 먼거리 통학할 판 / 매일신문 (2022.11.15. https://news.imaeil.com/page/view/2022111515480273138)</p> <p>- 강영수 김해시의원, '통학구 갈등 조정위원회' 설치 촉구 / 뉴시스 (2022.11.21. https://newsis.com/view/?id=NISX20221121_0002093984&cID=10812&pID=10800)</p> |
| 타시도 사례 | <p>- 천안교육청 통학구역 조정 기구 구성 검토 / 대전일보 (2022.11.13.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3027)</p> <p>- 통학 거리 먼 아라초 학생들 내년부터 남광초, 이도초 다닌다 / 제주일보 / (2022.11.8. http://www.jeju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197903)</p> |

| | | | |
|-------|---|----|-------------|
| 제목 | 김이재 도의원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 강화해야” | 번호 | 42 |
| 출처 | 전북일보 | 날짜 | 2022.11.21. |
| 기사 주소 | http://www.jjan.kr/article/20221121580047 | 기자 | 육경근 |
| 인권 범위 | 건강에 관한 권리(학생인권조례 제25조) | | |
| 주제 | -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 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 |
| 기사 내용 | <p>청소년 5명 중 1명꼴 인터넷·스마트폰 의존 중독 패해 일리고, 예방 교육 적극 실시해야</p>  <p>전북도교육청이 청소년들의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p> <p>김이재 전북도의원(전주4)은 21일 제396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뗄 수 없는 기술이자 기기인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의존(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그에 따</p> | | |

| | |
|--|---|
| | <p>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촉구했다.</p> <p>여성가족부가 전북 등 전국 학령 전환기 청소년(초4, 중1, 고1)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명 중 23만5687명이었다.</p> <p>전년 대비 6796명이 증가했으며 인터넷과 스마트폰 두 가지 문제를 모두 가진 청소년은 8만8123명으로 전년 대비 4243명이 늘었다.</p> <p>김 의원은 “과의존 위험군은 조사에 참여한 학생의 약 18%에 해당하는 수치로 우리나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p> <p>그는 “초등학교 4학년은 최근 3년간 과의존 위험군 수가 가장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중독 저학령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면서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형상이 더욱 심화됐다”고 분석했다.</p> <p>이어 “현재 ‘전라북도교육청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교육감은 매년 인터넷 중독 관련 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며 “하지만 현재 전북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교육청의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하다”고 문제 삼았다.</p> <p>그러면서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면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 전북도교육청이 예방교육과 관련예산 확보에 더욱 신경 써 달라”고 주문했다.</p> |
|--|---|

| | |
|-------------------------------------|--|
| <p>내용 분석 및 쟁점 사안</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과 스마트폰에 대한 청소년들의 과의존(인터넷 중독)이 날로 심해지고 있어 그에 따른 대책 마련이 필요 - ‘2022년 청소년 인터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에 따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 하나 이상에서 위험군으로 진단된 청소년은 127만명 중 23만5687명 - “코로나19로 원격수업 등 가정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생활 습관이 불규칙적으로 변하면서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더욱 심화 - 현재 전북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교육청의 기본계획과 관련 예산확보 노력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 <p>시사점 및 대안 제시</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기 청소년들은 성인에 비해 호기심이나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청소년들이 스스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시간을 정하도록 하는 절제와 조절의 습관을 길러줄 필요가 있음 - 교육 당국이 예방교육과 관련예산의 확보에 힘써야 할 것임 |
| <p>관련 유사 기사 및 방송</p> | <p>군산시,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설문조사 / 신아일보(2022.10.18.) http://www.shina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11660</p> <p>‘돈 먹는 하마’ 포켓몬 가오레가 뭐 길래?...어린이 도박 우려 / 뉴시스(2022.09.20.) https://newsis.com/view/?id=NISX20220919_0002018457&cID=10808&pID=10800</p> |

| | |
|---------------------------|--|
| | <p>=10800)</p> <p>남원시 보건소, ‘굿바이 스마트폰! 굿바이 한의약!’ 운영 / 민족의학신문 (2022.07.20.) http://www.mjmed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103</p> <p>스마트폰 놓은 12일... “아이들이 달라졌어요” / 뉴스A (2022.07.10.)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304857</p> |
| <p>타 시도 사례</p> | <p>영천교육지원청,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역량 강화 / 대구신문(2022.11.27.) https://www.idaegu.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2351</p> <p>충남도의회 “스마트폰 과몰입·게임중독 예방대책 모색” / 동양일보(2022.08.21.)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70226</p> <p>광명시 드림스타트, 스마트폰·게임 없이 지내는 여름방학 캠프 / 중도일보(2022.08.07.)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805010001462</p> |